

정책연구
2023-18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삶에 관한 연구

홍정림 · 김영아

한국노동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홍정림) 1
제1절 연구 배경	1
제2절 연구 목적	3
제2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 요인 분석	(홍정림) 7
제1절 연구 목적	7
제2절 산업재해 발생 현황	8
1. 산업재해 추이	8
2.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추이	12
3. 산업별 산업재해 추이	15
4.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추이	20
제3절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 : 사업체 측면	26
1. 분석 방법	27
2. 분석자료 및 대상	27
3. 회귀분석 결과	30
제4절 소 결	37
제3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홍정림) 40
제1절 연구 목적	40
제2절 자료 및 방법	42

1. 분석 방법	42
2. 분석자료 및 대상	42
제3절 분석 결과	44
1.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경제활동 유형 추이	44
2. 회귀분석 결과	51
제4절 소 결	72
 제4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김영아) 76
제1절 연구 배경	76
제2절 선행 연구	78
제3절 연구 방법	81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81
2. 변수 측정	83
제4절 분석 결과 :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86
1.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86
2. 유형의 결정 요인	88
제5절 분석 결과 : 원직장 복귀자	93
1.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93
2. 유형의 결정 요인	94
제6절 분석 결과 : 타직장 재취업자	98
1.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98
2. 유형의 결정 요인	100
제7절 소 결	103
 제5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홍정림) 109
제1절 연구 목적	109

제2절 자료 및 방법	110
1. 분석 방법	110
2. 분석자료 및 대상	111
제3절 분석 결과	118
1. 생활 만족도 분석	118
2. 일자리 만족도 분석	129
제4절 소 결	137
제6장 결 론	(홍정림) 140
제1절 요 약	140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49
참고문헌	152

표 목 차

〈표 2- 1〉 산업재해 추이	9
〈표 2- 2〉 산업재해 주요 발생형태 비중	12
〈표 2- 3〉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율	13
〈표 2- 4〉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사고만인율	14
〈표 2- 5〉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비중	16
〈표 2- 6〉 산업별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	16
〈표 2- 7〉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율	17
〈표 2- 8〉 산업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18
〈표 2- 9〉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 비중 및 사망사고 발생 비중	20
〈표 2-10〉 주요 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 비중	22
〈표 2-11〉 주요 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	24
〈표 2-12〉 기초통계량 :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 분석	28
〈표 2-13〉 산재근로자 비율 : 전 산업	31
〈표 2-14〉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 : 전 산업	34
〈표 2-15〉 산재근로자 비율 : 제조업	35
〈표 2-16〉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 : 제조업	36
〈표 3- 1〉 산재근로자의 특성	44
〈표 3- 2〉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유형	45
〈표 3- 3〉 기초통계량 : 노동시장 복귀	52
〈표 3- 4〉 기초통계량 : 원직장 복귀	54
〈표 3- 5〉 산재근로자 노동시장 복귀 결정 요인	55
〈표 3- 6〉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결정 요인	58
〈표 3- 7〉 기초통계량 :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임금 및 종사상 지위 차이	62

〈표 3- 8〉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65
〈표 3- 9〉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시간당 임금 차이	67
〈표 3-10〉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종사상 지위 차이	69
〈표 4- 1〉 분석 대상 기술통계	84
〈표 4- 2〉 전체 산재 종결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결정 요인 (준거집단 : 원직장 복귀유지형)	90
〈표 4- 3〉 원직 복귀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결정 요인 (준거집단 : 원직장 복귀유지형)	96
〈표 4- 4〉 타직장 재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결정 요인 (준거집단 :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	101
〈표 5- 1〉 기초통계량 : 노동시장 복귀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생활 만족도	113
〈표 5- 2〉 기초통계량 :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만족도	115
〈표 5- 3〉 기초통계량 : 원직장 복귀 및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만족도	116
〈표 5- 4〉 노동시장 복귀에 따른 생활 만족도	119
〈표 5- 5〉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생활 만족도	121
〈표 5- 6〉 원직장 복귀에 따른 생활 만족도	123
〈표 5- 7〉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생활 만족도	126
〈표 5- 8〉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129
〈표 5- 9〉 원직장 복귀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132
〈표 5-10〉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134

그림목차

[그림 1-1] 산업재해를 및 재해자 수 추이	2
[그림 2-1]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수와 요양재해를 추이	10
[그림 2-2]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을 추이	11
[그림 2-3] 고용규모별 요양재해를 추이	15
[그림 2-4] 고용규모별 사고만인을 추이	15
[그림 3-1]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유형	46
[그림 3-2-1]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30대 이하	47
[그림 3-2-2]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40대	48
[그림 3-2-3]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50대	48
[그림 3-2-4]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60대 이상	48
[그림 3-3-1] 산재근로자의 학력별 경제활동 유형 : 중학교 이하	49
[그림 3-3-2] 산재근로자의 학력별 경제활동 유형 : 고등학교	49
[그림 3-3-3] 산재근로자의 학력별 경제활동 유형 : 대학 이상	49
[그림 3-4-1] 산재근로자의 장애 등급 유무별 경제활동 유형 : 등급 유	50
[그림 3-4-2] 산재근로자의 장애 등급 유무별 경제활동 유형 : 등급 무	50
[그림 3-5-1]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유형 : 상용직	50
[그림 3-5-2]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유형 : 임시·일용직	51
[그림 4-1]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87
[그림 4-2] 원직 복귀자의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93
[그림 4-3] 타직장 재취업자의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99

요 약

이 연구는 미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에 대해 재직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원직장 복귀 등 노동시장 이행과 그 궤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이며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 요인 분석

제2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고용규모별·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과 추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과 비교할 때 2021년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만인율은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둘째,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는 ‘넘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하였고 ‘업무상 질병’이 그다음이었다. 반면 2001년에는 ‘끼임’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업무상 질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감소

하며, 20여 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고용규모별 패턴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소규모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고용규모 간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넷째, 2001년 요양재해율은 광업, 어업, 농업 순이었고, 2021년도는 광업, 어업, 건설업 순이었다. 2001년도 산업별 사망만인율은 광업, 어업, 농업 순으로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2021년 사망만인율은 광업, 어업, 건설업 순으로 산업별 요양재해율 패턴과 다르지 않았다.

다섯째,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은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4~5년차까지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감소하다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 그룹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와 6개월~1년 경력의 근로자들 간 산업재해 발생 비중은 대략 4~5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인다.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 역시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속기간별 패턴도 유사했다. 단, 사망사고의 경우 근속기간 10년 이상일 때 발생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체 단위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변수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며, 고용규모별로 봤을 때에는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산재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 때 산재근로자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생산·단순직 비중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남성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와 직종 통제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통상적으로 산재근로자는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보건대 이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생산·단순직에 더 많이 종사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연구는 최근 20년간의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계 거시자료가 아닌 마이크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특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2.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제3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산재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 및 원직장 복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 요인을 확인하며, 원직장 복귀에 따라 산재 근로자들의 임금 및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성 비중이 매우 높고, 학력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대학 이상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추이를 보면, 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원직장 복귀자 비율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재취업자 비율은 증가한다. 연령별로 봤을 때, 원직장 복귀자들의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재취업자 비중은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 봤을 때,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재취업 등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높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았다. 장애 등급 유무별로 봤을 때, 장애 등급이 있는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비율과 재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재해 당시 임시·일용직이었던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매우 낮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재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반면 상용직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낮았다.

셋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확률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일수록 높았다. 무엇보다도 장해 등급, 주관적 건강 등의 건강 상태는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60대 이상 고령의 산재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노동시장 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확률은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높았다. 단, 앞선 결과와 다르게 유배우일 때,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확률이 높았으나 재해 사업장의 특성과 직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달리 원직장 복귀에 재해 당시 사업체의 규모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임금과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약 5.7%, 6.8% 가량 더 높았고, 이들이 상용직일 확률은 11%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에 비해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는 산업재해 이전 일자리 특성, 산재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 및 업종별 이질성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별 결정 요인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원직장 복귀자와 재취업자 간 격차를 확인하여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3.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제4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여, 산재근로자 개인 및 일자리, 그리고 재해 특성이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배열과 군집분석 결과,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 “원직장 복귀유지형”,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 “지속적 비경제활동”, “타직 재취업 또는 실업 이후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30대와 비교하여 60대 이상 산재 종결자는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하는 일자리 경로를 가지기보다 타직,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경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년 산재 종결자는 타직으로 복귀보다 원직으로의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재활서비스와 사회재활서비스를 받을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산재 유형이 업무상 질병일수록, 산재요양 기간이 길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산재를 당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산재 당시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재해 당시 일자리가 생애 첫 일자리가 아니었을 경우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재해 당시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은 경우 지속적인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기보다 원직장 복귀유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원직장으로 복귀하여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타직장으로 재취업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에 취득한 노동시장 경력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지며, 원직장을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산재 종결 4년간 한 번이라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원직복귀 유지형”, “원직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 “원직복귀 후 비경제활동화”로 나타났다.

다항로지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하였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기도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은 원직장 복귀자의 일자리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에 사회재활서비스는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인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원직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이 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산재 요양 기간이 길수록, 장애 등급이 없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이를 유지하기보다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종결 직후 산재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타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종료 후 원직장에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경제활동화 또는 타직으로 재취업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복귀한 원직이 상용직일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복귀한 원래 직장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직장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셋째, 산재 종결 후 4년간 한 번이라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은 “요양 직후 타직복귀 유지형”,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복귀 유지형”,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복귀형”, “타직복귀 후 비경제활동형”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지트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경험 없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60대 이상 재취업 산재근로자는 요양 직후 타직복귀 유지형이 되기보다 장기간 비취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타직으로 재취업한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혼을 한 경우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기간 없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 수준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타직으로 재취업 전 장기간의 비경제활동 가능성을 줄였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직업재활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요양 직후 재취업을 하기보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기간이 길수록 요양 직후 타직복귀 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줄었다. 장애 등급이 있는 타직복귀자의 경우 요양 직후 타직복귀보다 단기간의 비취업 기간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타직복귀 후에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기보다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요양 종결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비취업 기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수록 재취업 이후 비경제활동화의 가능성이 낮았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을수록,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컸다.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경로와 고용유지 형태가 기존 연구에서 밝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 당시 일자리 특성 및 재해 특성뿐만 아니라 산재 이전 근로자 개인이 축적해 온 노동시장 경력, 그리고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여건에 따라 이질적임을 밝혔고, 특히 산재 종결 이후 원직에 복귀하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직으로 재취업, 비임금근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등 노동시장 이행이 활발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4.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제5장에서는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

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노동시장 복귀, 원직장 복귀,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등 노동시장 이행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가 있었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할수록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산재 전후 ‘고용 안정성의 상대적 변화’보다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고용 안정성 자체’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생활 만족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도 생활 만족도 분석과 동일하였다.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그룹의 일자리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추정치의 크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 원직장 복귀는 일자리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였으나,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추정치의 크기가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원직장 복귀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매개로 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건강 요인, 산재 이전, 혹은 현재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재근로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노동시장 이행의 영향은 노동시장 복귀뿐만 아니라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매개로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산재보험의 정책 방향이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로 전환되면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직업 복귀율이 65.4%이고, 2021년에는 67.3%로 소폭 오르긴 했으나 고용의 질을 차치하고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더라도 최근까지의 성과가 그리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산재근로자의 ‘원직 복귀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 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도 원직 복귀를 지향한다(김민호, 2023. 12. 12).

더욱이 원직 복귀는 요양 종결 직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재취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탐색 비용과 구직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

로 소득 공백이 더 길게 발생할 수 있다(이승렬·이승욱, 2016; 박은주, 2018). 이를 근거로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위해 원직장 복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 복귀 지원금 등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산재 이후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장애 정도가 경증이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산재 이전 재직 사업장이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재직했던 임시·일용 근로자, 고령 근로자, 중증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 건강 상태, 산재 당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결과가 상이함을 감안할 때,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과 유사하게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재근로자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서는 ‘원직장 복귀’가 정책 목표가 아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중 일부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이들의 짧은 사업체 업력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원직 복귀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높으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결국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일상으로의 회복은 원직 복귀 자체가 아닌 고용의 질, 즉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최우선적으로 고

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원직 복귀율, 직업 복귀율 등의 양적 측면의 정책 목표와 더불어 산재 이전 수준의 임금 회복 및 고용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가 특정 시점의 지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업 복귀의 성공 기준을 산재 종결 이후 특정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재 사고 이후 '사후적인'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산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체에 대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장 내 환경, 근로자의 인적 구성, 고용규모, 주요 직종 구성,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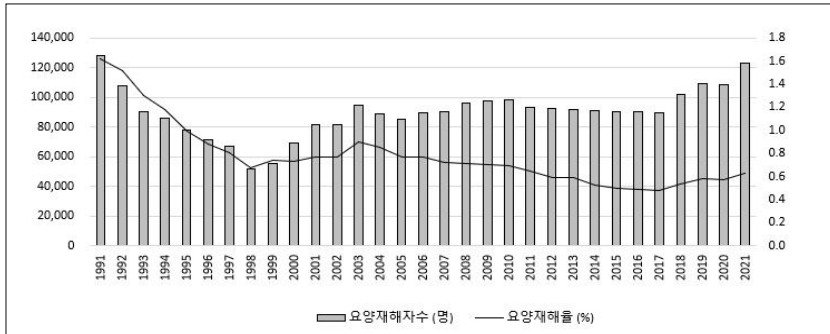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산재보험 제도를 도입하였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2023).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진행되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산업재해율은 괄목할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재해자 수는 2021년 기준 12만 명가량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1991년 1.62%였던 산업재해율은 급격하게 감소하여 1998년 0.68%인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그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7년 0.4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근로 현장에서 업무에 기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산재근로자는 1991년 128,000여 명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매년 90,000여 명 내외였으며, 2018년 이후 다시 100,000명이 넘는 수치를 보이며, 2021년에는 122,713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노동력 상실이나 근로소득 감소 등에 따른 직접적 손실과 더불어

[그림 1-1] 산업재해율 및 재해자 수 추이

(단위: %, 명)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생산 축소, 근로의욕 감소, 생산성 하락 등의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도 동시에 수반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Heinrich, 1980; 김명중·박선영, 2023). 또한 산업재해는 신체적 손상,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측면 등 근로자의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근로자의 삶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산재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업재해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이 최대한 산재 사고 이전과 같은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한기명·이민아, 2017). 과거의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금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01년부터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시 말해서,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과 소용된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재해로 인해서 직업능력의 손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항구적인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직업 복귀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강다솔 외, 2021), 제도가 안정화되고 사회적으로 예방과 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근로자의

재활과 사회 복귀로 정책적 목표가 이동하고 있다(이은혜 외, 2017).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 갈등, 사회 부적응 등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노동시장 및 사회로 복귀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수경, 2012).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과업은 산재근로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 최대한 산재 이전의 삶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그동안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논의의 초점을 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배화숙, 2017).

산재근로자는 예기치 못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득의 상실·감소, 신체 기능의 저하·훼손, 사회적 관계의 위축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이들의 직업 복귀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누렸던 삶과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된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율은 67.3%이다. 2023년 3월 정부는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율을 69%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직업 복귀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맞춤형 직업 복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재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여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제2절 연구 목적

지난 수십 년간 산업재해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지만 재해자 수는 줄지 않고 있고, 산재근로자들의 사회 복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하고 정책적 주안점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연구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어떤 요인들이 산업재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확인이 주를 이루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이 제시되었다. 김동

구·박선영(2021), 신봉호·조명우(2016) 등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산업, 규모, 업종 등 사업체 특성이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 등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 국내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실증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측면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직업 복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거나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학력, 성별, 연령, 결혼상태) 및 재해 특성(요양 기간, 장애 등급)과 직업 복귀 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기초 통계 수치를 단순 비교한다거나, 재취업, 원직장 복귀에 대한 각각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증 분석을 통한 연구조차 산업재해 이전 일자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업종별 이질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원직장 복귀’를 바람직한 것으로 가정하고 원직장 복귀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 있지만,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산재근로자들의 건강 측면을 고려하여 일자리 만족도나 생활 만족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부족하다. 산재근로자들의 삶에 관한 연구는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었으며, 횡단면 자료를 사용하여 일자리 만족도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만족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등의 건강 요인이나, 산재 이전, 혹은 현재의 직업적 특성 등을 엄밀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요컨대, 산업재해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은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을 집계변수를 사용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확인하거나,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복귀 측면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거나, 또는 만족도의 결정 요인들을 단편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일부 존재한다. 반면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일자리

만족도 등 산재근로자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재하다.

이에 이 연구는 미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에 대해 재직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원직장 복귀 등 노동시장 이행과 그 궤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이며 폭넓은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고용규모별·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과 추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 및 원직장 복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 요인을 확인하며, 원직장 복귀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및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산재근로자들의 일자리 이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요양 종료 이후 산재 근로자들이 어떠한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특성 분석을 통해 원직 복귀, 타직으로 재취업,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등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원직에 복귀한 경우, 타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등 일자리 이동 경로 특성을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산재근로자의 개인 특성, 일자리 특성, 그리고 재해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궤적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한다.

넷째,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복귀, 원직장 복귀,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등 노동시장 이행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각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삶에 관해 다각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및 산재근로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사회적 복귀와 삶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며,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장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결정 요인 분석

제1절 연구 목적

1964년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정책적 시도로 인해 재해율은 괄목할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재해자 수는 2021년 기준 12만 명가량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율은 1998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04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7년 0.48%로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가 관측된다. 근로 현장에서 업무에 기인한 부상이나 질병을 얻은 산재근로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매년 90,000여 명 내외였으며, 2018년 이후 다시 100,000명이 넘는 수치를 보이며, 2021년에는 122,713명으로 2000년대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산업재해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 산재 예방 투자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임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산재 예방은 주로 국가의 역할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산재 예방의 주체가 이제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정책의 기초가 원칙과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확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산재 예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김명중·박선영, 2023).

그동안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하여 어떤 요인들이 산업재해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안도 제시되었다. 김동구·박선영(2021), 신봉호·조명우(2016) 등을 비롯하여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산업, 규모, 업종 등 사업체 특성이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 등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집계자료를 사용하여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제조업 등 특정 업종에 국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을 뿐 국내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실증 분석을 통해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을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이 장에서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고용규모별·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과 추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산업재해 발생 현황

이 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2001~2021년)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산업별·고용규모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을 세부적으로 확인한다.

1. 산업재해 추이

〈표 2-1〉에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산업재해 현황이 요약되어 있다.

〈표 2-1〉 산업재해 추이

(단위 : 명, %, ‰)

	사업장 수	근로자 수	요양재해자 수	사망자 수	요양 재해율	사망 만인율
2001	909,461	10,581,186	81,434	2,748	0.77	2.60
2002	1,002,263	10,571,279	81,911	2,605	0.77	2.46
2003	1,006,549	10,599,345	94,924	2,923	0.90	2.76
2004	1,039,208	10,473,090	88,874	2,825	0.85	2.70
2005	1,130,094	11,059,193	85,411	2,493	0.77	2.25
2006	1,292,696	11,688,797	89,910	2,453	0.77	2.10
2007	1,429,885	12,528,879	90,147	2,406	0.72	1.92
2008	1,594,793	13,489,986	95,806	2,422	0.71	1.80
2009	1,560,949	13,884,927	97,821	2,181	0.70	1.57
2010	1,608,361	14,198,748	98,645	2,200	0.69	1.55
2011	1,738,196	14,362,372	93,292	2,114	0.65	1.47
2012	1,825,296	15,548,423	92,256	1,864	0.59	1.20
2013	1,977,057	15,449,228	91,824	1,929	0.59	1.25
2014	2,187,391	17,062,308	90,909	1,850	0.53	1.08
2015	2,367,186	17,968,931	90,129	1,810	0.50	1.01
2016	2,457,225	18,431,716	90,656	1,777	0.49	0.96
2017	2,507,364	18,560,142	89,848	1,957	0.48	1.05
2018	2,654,107	19,073,438	102,305	2,142	0.54	1.12
2019	2,680,874	18,725,160	109,242	2,020	0.58	1.08
2020	2,719,308	18,974,513	108,379	2,062	0.57	1.09
2021	2,876,635	19,378,565	122,713	2,080	0.63	1.07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2001년도 기준 산업재해보상법 적용사업장 909,461개소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10,581,186명이고,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재해자 수는 81,434명, 그중 사망자 수는 2,748명이며,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각각 0.77%, 2.60‰이었다.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과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는 대체로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도 적용사업장 수와 근로자 수는 각각 2,876,635개소, 19,378,565명이고, 요양재해자 수는 122,713명, 사망자 수는 2,080명이었다. 2021년도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

율은 각각 0.63%, 1.07‰로 2001년과 비교할 때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만인율은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2003년 0.90%였던 요양재해율은 2017년 0.48%까지 하락하였고, 그 이후 증가세를 보였으며, 사망만인율 추이도 요양재해율 추이와 유사한 경향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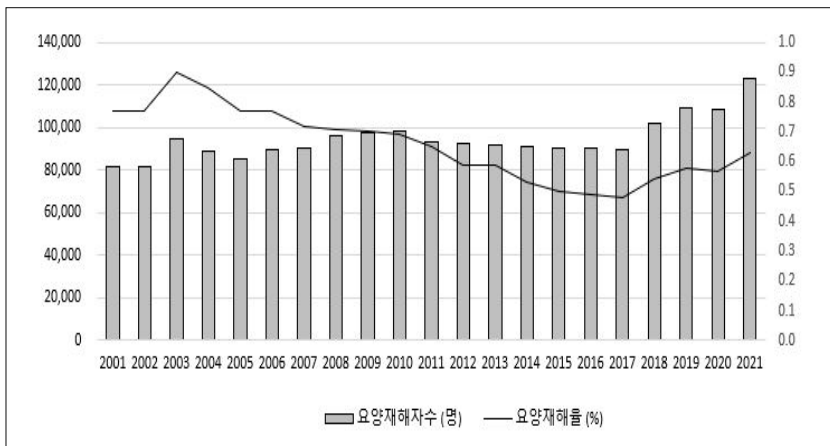
〈용어 해설〉

- 근로자수 :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수
- 재해자수 : 근로복지공단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수 및 근로복지공단에 최초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재해자 중 요양승인을 받은 재해자수
※ '18년부터 확대 적용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통상 출퇴근 재해는 제외
- 사망자수 :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수
사망자수에는 사업장의 교통사고, 체육행사, 폭력행위,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 사고 사망자, 통상 출퇴근 사망자는 제외(다만, 운수업, 음식·숙박업의 사업장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포함)
- 요양 재해율(천인율) : 근로자 100(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2021.

[그림 2-1]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수와 요양재해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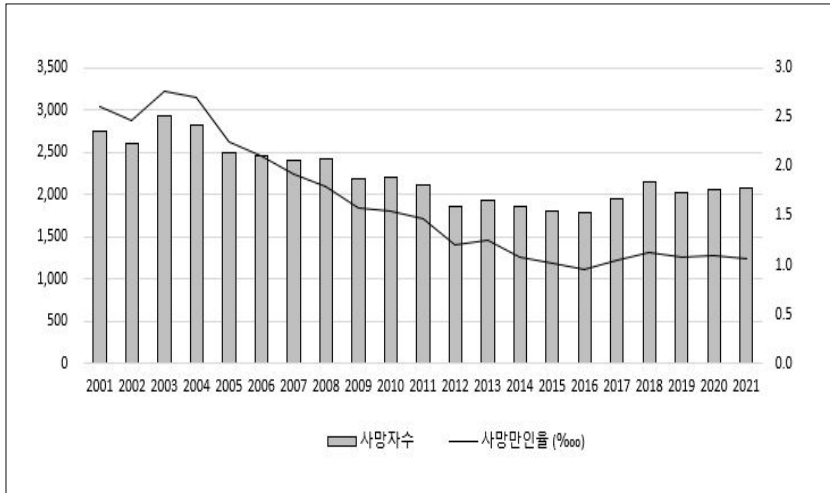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그림 2-2] 산업재해 사망자 수와 사망만인율 추이

(단위 : 명,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표 2-2〉에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산업재해 주요 발생형태 비중이 제시되어 있다.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는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끼임’, ‘절단·베임·찢림’, ‘이상 온도 물체 접촉’,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사업장 교통사고’, ‘업무상 질병’ 등 10가지로 분류되는데, 2021년에는 ‘넘어짐’ 사고가 전체 산업재해 중 19.52%로 가장 빈번하였고 ‘업무상 질병’이 16.65%로 그다음이었다. 2001년에는 ‘끼임’ 사고가 23.14%로 산업재해 발생형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11.14%로 절반 이하로 줄었고, 반면에 ‘업무상 질병’은 2001년 6.94%에서 2021년 16.65%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산업재해 주요 발생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표 2-2〉 산업재해 주요 발생형태 비중

(단위 : %)

	떨어짐	넘어짐	부딪힘	물체에 맞음	끼임	절단· 베임· 찢림	이상 온도 물체 접촉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사업장 교통 사고	업무상 질병
2001	11.99	17.99	9.82	8.61	23.14	2.88	1.89	7.36	3.66	6.94
2002	13.23	16.73	10.41	9.25	22.15	4.35	1.72	7.55	2.54	6.61
2003	13.48	17.25	10.74	8.62	20.27	3.72	1.67	7.37	2.72	9.62
2004	13.14	17.06	10.54	8.26	19.57	4.31	1.59	8.04	2.76	10.33
2005	12.66	17.65	10.68	7.56	19.39	4.79	1.65	7.65	2.70	8.78
2006	13.00	18.13	12.13	7.38	18.52	5.09	1.71	3.48	3.27	11.38
2007	13.13	18.01	13.54	7.28	17.62	5.22	1.53	1.58	3.45	12.73
2008	14.64	19.34	7.60	9.05	15.92	6.90	2.38	1.98	5.07	10.16
2009	13.89	20.63	8.63	8.52	16.53	7.47	2.28	2.13	5.26	8.92
2010	14.23	18.49	8.78	8.01	17.11	8.09	2.59	2.36	4.12	7.91
2011	14.73	17.52	7.53	8.84	17.20	8.12	2.37	2.65	4.27	7.77
2012	15.42	17.00	7.40	8.83	16.55	8.43	2.63	2.66	4.13	8.10
2013	14.98	19.15	6.40	8.21	16.02	8.37	2.62	2.97	4.31	8.31
2014	15.51	17.56	7.44	8.01	16.14	8.58	2.82	3.27	4.69	8.45
2015	15.67	17.34	7.39	7.93	14.94	9.70	3.04	3.43	4.77	8.79
2016	16.19	17.59	7.74	7.99	14.63	9.42	3.49	3.24	4.34	8.69
2017	15.92	18.28	7.48	7.43	14.04	9.74	3.69	2.95	4.18	10.22
2018	15.21	18.65	7.15	7.07	12.90	9.68	3.72	3.75	4.55	11.21
2019	13.83	18.40	7.17	6.74	11.91	9.83	3.72	4.16	4.46	13.91
2020	13.29	19.06	6.92	6.69	11.90	9.57	3.38	4.01	5.05	14.76
2021	12.04	19.52	6.70	6.81	11.14	9.03	3.17	4.61	5.55	16.65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2.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추이

〈표 2-3〉과 〈표 2-4〉는 2001년에서 2021년까지의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추이를 각각 보여준다. 고용규모를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고용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을 제시한다.

대체로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감소하며, 20여 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고용규모별 패턴은 다르지 않다. 2021년 기준 고용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의 요양재해율은 1.16%이고 사고만인율은 1.76‰였으며, 100~299인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각각 0.44%, 0.81‰,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각각 0.40%, 0.72‰로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고용규모 간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2001년 1,0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의 요양재해율은 약 5.76배이고 사고만인율은 3.94배였으나, 2021년 1,0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5인 미만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2.9배, 2.44배로 격차가 완화되었다.

〈표 2-3〉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율

(단위 : %)

	전 체	5인 미만	5~9인	10~ 29인	30~ 49인	50~ 99인	100~ 299인	3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2001	0.77	1.44	1.22	1.06	0.87	0.69	0.53	0.46	0.42	0.25
2002	0.77	1.43	1.17	1.00	0.80	0.64	0.48	0.37	0.36	0.33
2003	0.90	1.58	1.29	1.14	0.89	0.72	0.53	0.47	0.44	0.54
2004	0.85	1.45	1.25	1.10	0.88	0.64	0.49	0.41	0.38	0.63
2005	0.77	1.52	1.23	1.04	0.79	0.61	0.44	0.31	0.32	0.40
2006	0.77	1.51	1.17	0.98	0.76	0.58	0.42	0.30	0.29	0.36
2007	0.72	1.51	1.09	0.89	0.69	0.51	0.37	0.23	0.23	0.30
2008	0.71	1.59	1.08	0.85	0.61	0.49	0.34	0.23	0.18	0.27
2009	0.70	1.75	1.02	0.81	0.60	0.46	0.32	0.21	0.20	0.23
2010	0.69	1.64	1.07	0.82	0.59	0.46	0.30	0.21	0.13	0.22
2011	0.65	1.55	1.00	0.75	0.54	0.40	0.26	0.18	0.13	0.19
2012	0.59	1.42	0.93	0.69	0.51	0.38	0.25	0.18	0.12	0.18
2013	0.59	1.41	0.85	0.65	0.48	0.38	0.25	0.17	0.13	0.21
2014	0.53	1.19	0.78	0.58	0.46	0.35	0.23	0.18	0.14	0.19
2015	0.50	1.14	0.71	0.55	0.43	0.32	0.21	0.17	0.14	0.16
2016	0.49	1.08	0.67	0.55	0.44	0.33	0.21	0.16	0.14	0.15

〈표 2-3〉의 계속

	전 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2017	0.48	1.05	0.64	0.52	0.41	0.32	0.22	0.19	0.18	0.17
2018	0.54	1.07	0.66	0.57	0.46	0.36	0.29	0.27	0.26	0.22
2019	0.58	1.15	0.68	0.60	0.49	0.40	0.34	0.31	0.33	0.28
2020	0.57	1.13	0.66	0.56	0.47	0.41	0.35	0.35	0.37	0.29
2021	0.63	1.16	0.69	0.62	0.53	0.48	0.44	0.39	0.38	0.4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표 2-4〉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사고만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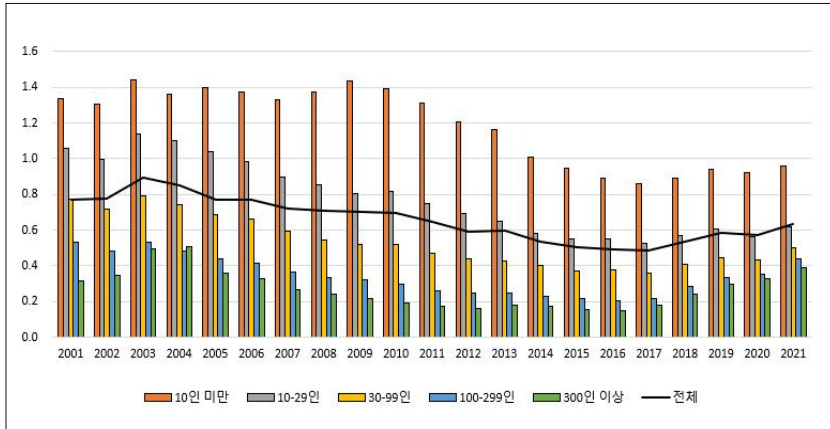
(단위 : ‰)

	전 체	5인 미만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2001	2.60	4.26	3.11	2.74	2.75	2.50	2.67	2.63	2.77	1.08
2002	2.46	3.56	2.52	2.63	3.23	2.48	2.13	2.38	2.60	1.19
2003	2.76	3.98	3.04	2.81	2.87	2.65	2.43	2.84	2.90	1.59
2004	2.70	3.74	2.71	2.88	2.81	2.29	2.53	2.48	2.69	1.92
2005	2.25	3.32	2.75	2.34	2.53	2.07	2.15	1.81	2.14	1.21
2006	2.10	2.92	2.50	2.10	2.04	2.02	1.85	1.76	2.40	1.23
2007	1.92	3.02	2.11	1.82	1.94	1.72	1.71	1.57	1.92	1.18
2008	1.80	3.12	1.76	1.59	1.40	2.00	1.57	1.38	1.92	1.01
2009	1.57	3.04	1.52	1.36	1.20	1.31	1.41	1.37	1.76	0.89
2010	1.55	2.38	1.51	1.40	1.50	1.65	1.42	1.51	1.41	0.96
2011	1.47	2.60	1.39	1.31	1.36	1.37	1.26	1.48	1.54	0.81
2012	1.20	2.01	1.41	1.06	1.08	1.00	1.18	1.03	1.12	0.67
2013	1.25	2.01	1.03	1.01	1.06	1.18	1.19	1.51	1.54	0.95
2014	1.08	1.71	0.95	0.87	0.92	0.94	0.99	1.61	1.48	0.73
2015	1.01	1.61	0.90	0.77	0.89	0.92	0.97	1.52	1.47	0.50
2016	0.96	1.51	0.83	0.83	0.86	0.90	0.86	1.31	1.34	0.52
2017	1.05	1.48	0.94	0.91	0.85	0.99	0.98	1.21	2.15	0.59
2018	1.12	1.58	0.92	0.98	1.02	0.86	1.18	1.58	1.82	0.66
2019	1.08	1.65	0.94	0.93	0.86	0.93	0.98	1.34	1.90	0.57
2020	1.09	1.66	0.97	0.95	1.02	0.81	1.03	1.07	1.93	0.57
2021	1.07	1.76	0.97	0.97	0.85	0.87	0.81	1.01	1.71	0.72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그림 2-3] 고용규모별 요양재해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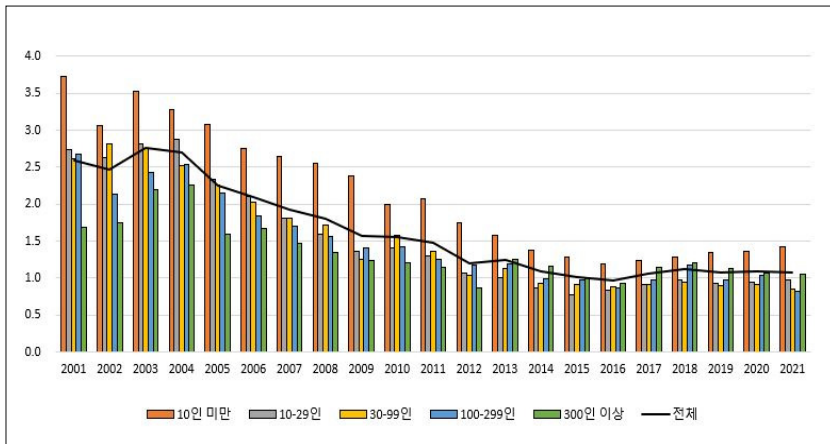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그림 2-4] 고용규모별 사고만인을 추이

(단위 : 1,00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3. 산업별 산업재해 추이

〈표 2-5〉와 〈표 2-6〉은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비중과 사망자 비중을 각각 보여준다.

〈표 2-5〉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비중

(단위 : %)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2001	1.70	43.63	0.16	21.03	7.11	1.26	0.20	0.38	0.79	23.75
2002	1.52	42.66	0.17	24.69	6.00	0.86	0.30	0.39	0.74	22.66
2003	1.80	42.38	0.15	24.30	6.02	0.87	0.25	0.37	0.67	23.18
2004	2.55	42.31	0.15	21.64	5.74	1.03	0.10	0.42	0.65	25.42
2005	2.60	42.19	0.15	19.02	5.50	1.23	0.06	0.47	0.64	28.14
2006	2.04	39.98	0.14	20.35	5.62	1.28	0.07	0.54	0.68	29.31
2007	1.72	37.89	0.13	21.50	5.25	1.49	0.07	0.49	0.60	30.84
2008	1.35	37.42	0.10	21.75	4.95	1.74	0.07	0.55	0.58	31.48
2009	1.14	33.74	0.12	21.47	4.47	3.16	0.07	0.63	0.49	34.72
2010	1.10	34.54	0.09	22.81	4.42	2.19	0.07	0.65	0.50	33.63
2011	1.18	34.62	0.09	24.42	4.53	2.13	0.08	0.62	0.46	31.87
2012	0.99	34.32	0.10	25.31	4.55	1.97	0.07	0.65	0.43	31.61
2013	1.00	32.05	0.08	25.70	4.62	2.14	0.07	0.69	0.40	33.24
2014	1.36	31.51	0.11	26.04	4.61	1.87	0.09	0.68	0.37	33.37
2015	1.63	29.97	0.11	27.88	4.50	1.81	0.06	0.72	0.33	32.99
2016	1.69	28.84	0.11	29.31	4.54	1.59	0.05	0.80	0.31	32.75
2017	2.11	28.20	0.10	28.55	4.72	1.25	0.07	0.62	0.35	34.05
2018	2.17	26.76	0.11	27.06	5.17	1.02	0.06	0.63	0.35	36.66
2019	2.33	26.80	0.10	24.91	5.65	0.93	0.05	0.59	0.37	38.27
2020	2.54	26.61	0.10	24.73	6.69	0.95	0.04	0.59	0.31	37.44
2021	2.72	25.84	0.11	24.40	8.22	0.77	0.06	0.54	0.33	37.00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표 2-6〉 산업별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

(단위 : %)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2001	15.76	25.98	0.44	24.89	9.57	0.66	0.55	0.40	1.35	20.41
2002	15.16	24.64	0.65	26.60	7.83	0.73	1.00	0.38	1.88	21.11
2003	15.70	25.32	0.48	26.62	7.25	0.58	0.68	0.41	1.44	21.52
2004	15.36	23.86	0.28	28.39	7.50	0.60	0.39	0.78	1.10	21.73
2005	16.65	26.27	0.28	25.27	7.38	0.64	0.16	0.52	0.92	21.90

〈표 2-6〉의 계속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2006	19.57	25.03	0.45	26.66	6.32	0.73	0.04	0.33	0.98	19.89
2007	18.04	25.23	0.25	27.06	6.90	0.91	0.08	0.33	1.16	20.03
2008	17.13	25.06	0.29	28.49	7.56	0.70	0.12	0.50	0.95	19.20
2009	18.29	25.72	0.41	27.79	6.05	1.05	0.14	0.50	0.55	19.49
2010	17.55	28.09	0.32	27.77	5.55	1.55	0.18	0.50	0.82	17.68
2011	17.74	25.92	0.19	29.38	6.34	0.95	0.19	0.43	0.85	18.02
2012	17.17	29.13	0.11	26.61	7.51	1.13	0.05	0.86	0.54	16.90
2013	19.70	23.85	0.16	29.39	7.00	1.04	0.05	0.36	1.09	17.37
2014	21.68	24.49	0.38	26.27	6.43	1.84	0.16	0.81	0.54	17.41
2015	23.04	23.65	0.33	27.24	7.24	0.88	0.06	0.50	0.50	16.57
2016	20.48	22.96	0.17	31.18	7.26	0.73	0.00	0.23	0.51	16.49
2017	23.35	22.13	0.20	29.59	6.18	0.82	0.15	0.31	1.02	16.25
2018	22.32	22.04	0.23	26.61	7.33	0.61	0.05	0.65	0.75	19.42
2019	20.10	24.36	0.25	25.59	7.57	0.84	0.15	0.45	0.59	20.10
2020	20.56	22.74	0.44	27.50	7.27	0.82	0.05	0.48	0.78	19.35
2021	16.78	24.62	0.19	26.49	7.60	0.63	0.14	0.53	0.87	22.16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표 2-7〉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율

(단위 : %)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2001	7.69	1.22	0.26	0.70	0.88	1.19	4.00	1.26	0.17	0.49
2002	7.59	1.22	0.29	0.73	0.74	0.75	6.48	1.03	0.18	0.50
2003	10.79	1.42	0.28	0.87	0.87	0.96	6.05	1.25	0.18	0.56
2004	14.71	1.28	0.25	0.95	0.78	1.26	3.14	1.20	0.16	0.52
2005	14.56	1.18	0.24	0.76	0.70	1.28	1.78	1.22	0.15	0.52
2006	12.28	1.19	0.23	0.72	0.75	1.57	2.15	1.52	0.15	0.54
2007	10.13	1.10	0.22	0.67	0.68	1.85	2.38	1.28	0.13	0.53
2008	8.91	1.15	0.18	0.64	0.67	2.52	1.30	1.39	0.10	0.53
2009	8.20	1.04	0.22	0.65	0.62	4.17	2.24	1.46	0.08	0.56
2010	8.73	1.07	0.16	0.70	0.61	2.80	2.18	1.38	0.08	0.53

〈표 2-7〉의 계속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2011	9.12	0.97	0.16	0.74	0.59	2.11	2.28	1.44	0.07	0.47
2012	6.94	0.84	0.17	0.84	0.52	2.46	1.51	1.30	0.06	0.40
2013	7.91	0.78	0.13	0.92	0.55	2.64	1.43	1.26	0.06	0.41
2014	10.54	0.72	0.18	0.73	0.54	2.19	1.36	1.01	0.05	0.37
2015	12.65	0.65	0.15	0.75	0.50	1.88	1.06	0.94	0.04	0.34
2016	13.75	0.62	0.14	0.84	0.49	1.54	0.77	0.90	0.04	0.32
2017	16.94	0.61	0.12	0.84	0.51	1.36	1.12	0.73	0.04	0.32
2018	19.02	0.66	0.14	0.94	0.61	1.16	1.22	0.78	0.05	0.37
2019	22.89	0.72	0.14	1.09	0.68	1.11	1.17	0.81	0.05	0.41
2020	25.82	0.72	0.13	1.17	0.77	1.02	0.97	0.81	0.04	0.38
2021	32.52	0.80	0.16	1.26	1.02	0.86	1.49	0.85	0.05	0.41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표 2-8〉 산업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

(단위: ‰)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2001	240.46	2.44	2.43	2.79	3.98	2.08	37.70	4.51	0.96	1.41
2002	241.41	2.25	3.45	2.49	3.09	2.01	68.46	3.21	1.46	1.47
2003	289.37	2.61	2.84	2.94	3.24	1.98	51.72	4.23	1.20	1.60
2004	281.85	2.30	1.58	3.97	3.24	2.33	38.33	7.05	0.85	1.42
2005	272.26	2.14	1.32	2.95	2.75	1.95	15.12	3.95	0.61	1.18
2006	321.09	2.02	2.04	2.56	2.29	2.45	3.65	2.51	0.60	1.01
2007	282.83	1.96	1.11	2.25	2.38	3.04	7.23	2.31	0.69	0.92
2008	285.87	1.96	1.28	2.12	2.60	2.57	5.56	3.17	0.40	0.82
2009	293.86	1.76	1.70	1.89	1.86	3.10	10.20	2.59	0.21	0.71
2010	311.54	1.93	1.29	1.91	1.72	4.40	12.45	2.36	0.30	0.62
2011	310.23	1.64	0.73	2.01	1.86	2.13	11.84	2.25	0.29	0.60
2012	243.87	1.44	0.35	1.78	1.73	2.85	2.43	3.44	0.15	0.43
2013	326.26	1.22	0.49	2.21	1.74	2.69	2.30	1.38	0.32	0.45
2014	342.30	1.14	1.26	1.50	1.53	4.39	5.05	2.43	0.15	0.39
2015	359.02	1.03	0.93	1.47	1.63	1.85	1.87	1.31	0.13	0.34

〈표 2-8〉의 계속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임업	어업	농업	금융· 보험업	기타의 사업
2016	326.37	0.96	0.41	1.76	1.54	1.39	0.00	0.49	0.12	0.32
2017	408.07	1.04	0.53	1.90	1.44	1.93	5.67	0.79	0.26	0.33
2018	408.65	1.14	0.65	1.94	1.80	1.45	1.85	1.68	0.21	0.41
2019	365.50	1.22	0.65	2.08	1.68	1.85	5.86	1.13	0.15	0.40
2020	397.60	1.17	1.14	2.48	1.60	1.68	2.01	1.27	0.20	0.37
2021	340.26	1.29	0.50	2.32	1.59	1.18	6.05	1.39	0.23	0.42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2001년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비중은 제조업, 기타의 사업, 건설업 순이었으나 2021년은 기타의 사업, 제조업, 건설업 순으로,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였고, 기타의 사업과 건설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산업별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은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순이었고, 2021년은 건설업, 제조업, 기타의 사업순으로 일부 순서의 변동이 있었으나 주요 산업재해 발생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기타의 사업 등 세 가지 업종에 치중되어 있다.

〈표 2-7〉과 〈표 2-8〉에는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각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를 고려하지 않은 산업별 발생 비중과 근로자 수로 보정한 산업별 요양재해율에는 차이가 있었다.

2001년도 산업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자 비중은 제조업이 43.63%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요양재해율은 광업이 7.69%로 가장 높았고, 어업(4.00%), 농업(1.26%) 순이었다. 2021년도에는 광업의 요양재해율이 32.52%로 가장 높았으며, 전산업 요양재해율(0.63%)에 무려 51.6배에 달했다. 광업 다음으로는 어업(1.49%)이었고, 건설업(1.26%)이 세 번째로 높았다. 산업별 추이를 봤을 때, 20여 년간 전반적으로 요양재해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산업별 요양재해율도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광업과 건설업은 오히려 요양재해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1년도 산업별 산업재해 사망만인율은 광업(240.46‰), 어업(37.70‰), 농업(4.51‰) 순으로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2021년 사망만인율은 광업(340.26‰), 어업(6.05‰), 건설업(2.32‰) 순으로 산업별 요양재해를 패턴과 다르지 않았다.

4.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추이

〈표 2-9〉는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 비중과 사망사고 발생 비중을 보여준다. Panel A에는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Panel B에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

〈표 2-9〉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 비중 및 사망사고 발생 비중

(단위 : %)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Panel A : 산업재해 발생 비중								
2001	47.52	11.04	11.88	5.63	3.80	3.05	8.60	8.25
2002	50.49	10.10	10.37	6.29	3.42	2.44	8.12	8.76
2003	48.85	10.41	10.16	5.82	3.98	2.38	8.49	9.92
2004	46.64	10.29	10.76	5.85	4.03	3.01	8.07	11.35
2005	46.61	10.11	10.80	6.65	4.21	2.97	7.92	10.73
2006	49.12	10.67	10.15	5.84	4.14	2.95	7.42	9.70
2007	50.16	10.66	10.50	5.54	3.72	2.93	6.99	9.09
2008	51.65	10.57	10.41	5.84	3.48	2.70	7.18	8.17
2009	53.44	10.40	10.11	5.62	3.47	2.39	6.95	6.97
2010	54.25	10.13	9.41	5.50	3.49	2.53	6.90	7.14
2011	55.79	10.17	9.32	4.72	3.37	2.47	6.57	7.27
2012	55.75	10.32	9.55	4.98	3.01	2.35	6.36	7.20
2013	55.33	10.36	9.86	5.38	3.23	2.18	6.36	6.97
2014	55.78	10.16	9.78	5.13	3.34	2.13	5.91	7.11
2015	56.39	9.65	9.50	5.23	3.38	2.26	5.86	7.34
2016	57.03	9.61	9.27	4.89	3.29	2.46	5.68	7.34
2017	55.51	9.73	9.22	5.08	3.40	2.50	6.12	8.35
2018	53.24	9.98	9.88	5.36	3.45	2.49	6.65	8.88
2019	50.70	10.39	10.23	5.56	3.77	2.65	6.92	9.74
2020	49.45	10.32	10.62	5.93	3.63	2.70	7.12	10.19
2021	49.30	9.71	9.97	6.18	4.03	2.66	7.19	10.94
Panel B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								
2001	39.30	8.88	9.35	5.75	3.24	3.31	11.43	17.94
2002	41.27	8.18	8.64	5.49	3.57	3.34	9.87	19.65
2003	41.29	9.13	9.41	5.06	3.93	2.50	9.03	19.64

〈표 2-9〉의 계속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Panel B :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								
2004	42.69	8.18	9.38	5.42	3.96	3.08	9.20	18.09
2005	40.31	8.46	9.31	5.50	5.29	2.93	9.75	18.45
2006	41.62	8.36	8.23	5.26	3.26	3.10	9.21	20.95
2007	39.73	9.35	9.02	5.15	3.12	2.87	8.94	21.49
2008	43.89	7.14	8.63	5.62	3.39	2.64	8.30	20.40
2009	42.96	8.48	7.75	4.22	2.84	2.75	9.72	20.17
2010	39.91	7.73	8.68	4.95	4.09	2.82	9.68	21.14
2011	43.05	7.47	8.23	5.58	3.50	2.93	8.33	20.25
2012	39.81	6.92	8.91	5.58	3.70	3.38	9.12	22.05
2013	39.87	8.86	8.09	4.56	2.54	2.33	9.54	23.07
2014	39.35	7.30	7.08	5.89	3.46	2.22	8.22	25.08
2015	38.01	6.24	8.51	4.36	3.48	2.32	9.78	26.19
2016	38.32	8.16	6.87	5.63	3.43	2.76	8.84	24.93
2017	37.46	6.49	7.92	5.21	3.37	3.07	8.79	26.93
2018	33.75	8.22	8.36	4.67	4.72	2.71	9.24	27.68
2019	33.61	8.12	8.66	5.35	3.76	2.38	10.35	27.18
2020	34.48	8.20	8.10	4.70	4.36	2.67	8.54	28.18
2021	33.08	8.08	7.50	6.35	3.85	3.17	10.10	27.45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Panel A)은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들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4~5년차까지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감소하다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과 그룹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들과 6개월~1년 경력의 근로자들 간 산업재해 발생 비중은 대략 4~5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인다.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Panel B) 역시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속기간별 패턴도 유사했다. 즉, 4~5년차까지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감소하고, 근속기간이 더 늘어날 때 사망사고 발생 비중이 다시 증가한다. 또한 근속기간 6개월 미만에서 6개월~1년 사이에 사망사고 발생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단, 사망사고의 경우 근속기간 10년 이상일 때 발생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표 2-10〉과 〈표 2-11〉은 주요 산업에 대한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 비중과 사망사고 발생 비중을 보고한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통신업 등 4개의 산업을 선정하여 근속기간별 비중을 확인하였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에도 근속기간별 추이는 유사했다. 즉, 6개월 미만 근속자 그룹의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가장 높고, 근속기간이 늘어날수록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감소하다가, 경력이 증가하면 다시 발생 비중이 증가한다. 단, 광업의 경우에는 근속기간별 발생 비중의 패턴은 유사하였으나 근속기간 10년 이상인 그룹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2021년에는 무려 88.22%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6개월 미만 근속자 그룹에서 80~90% 정도로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집중되어 있고, 경력이 증가할수록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재해자 중 사망사고에 한정해서 보았을 때에도 산업별·근속기간별 패턴과 연도별 추이는 전체 산업재해 발생 비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2-10〉 주요 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 비중

(단위 : %)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광업	2001	14.23	4.48	5.64	4.05	2.53	3.61	17.92	45.23
	2002	13.29	4.67	5.48	3.95	2.90	2.90	12.88	53.95
	2003	14.55	3.74	3.39	2.75	2.10	2.40	10.52	60.55
	2004	8.48	3.18	3.80	2.34	1.59	1.50	8.48	70.64
	2005	8.74	2.61	3.42	1.71	1.58	1.40	6.67	73.86
	2006	8.93	2.40	3.65	2.89	1.63	1.74	7.14	71.62
	2007	9.65	3.41	3.86	2.77	1.67	1.41	7.85	69.20
	2008	11.45	2.55	3.48	3.94	2.47	3.25	7.89	64.97
	2009	11.13	3.23	3.68	3.23	1.89	2.15	8.17	64.00
	2010	9.06	3.51	3.88	2.77	2.40	1.94	11.28	62.75
	2011	9.61	3.17	4.17	2.99	2.54	1.90	7.80	66.09
	2012	10.76	3.18	4.28	3.95	2.52	2.20	8.34	63.56
	2013	10.53	3.69	4.67	3.91	3.15	2.17	8.25	61.45
	2014	7.21	2.91	3.00	2.91	2.19	2.43	7.69	69.39
	2015	6.67	1.91	4.15	1.63	1.91	2.11	8.99	71.14
	2016	6.19	2.35	2.87	2.02	1.43	1.76	7.17	74.97
	2017	5.27	2.06	2.53	2.69	1.63	1.32	5.90	77.91
	2018	4.49	2.74	3.64	2.02	1.84	2.11	6.11	76.36
	2019	4.33	1.81	2.67	2.08	1.18	1.18	5.54	80.69
	2020	2.69	1.34	2.03	1.53	1.16	0.80	4.61	85.25
	2021	2.22	0.96	1.56	1.23	0.93	0.96	3.60	88.22

〈표 2-10〉의 계속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제조업	2001	36.42	12.53	15.13	6.79	4.52	3.64	10.25	10.55
	2002	36.96	11.45	12.99	8.37	4.29	2.97	10.70	12.26
	2003	34.73	11.56	12.10	7.11	5.28	3.03	11.78	14.42
	2004	33.93	11.17	12.50	7.05	4.73	3.85	10.89	15.87
	2005	36.53	10.76	12.31	7.85	4.90	3.47	10.03	14.14
	2006	38.90	12.00	12.03	6.84	4.89	3.41	9.09	12.84
	2007	37.88	11.74	13.06	6.71	4.41	3.62	8.76	13.20
	2008	40.45	11.19	12.27	7.29	4.19	3.28	9.01	12.33
	2009	39.57	11.48	12.35	7.30	4.54	3.22	9.56	11.16
	2010	41.94	11.14	11.07	6.86	4.50	3.35	9.27	11.11
	2011	43.06	11.87	11.30	5.75	4.18	3.19	8.96	11.34
	2012	40.81	12.20	11.99	6.55	3.66	2.99	9.13	12.03
	2013	39.04	11.59	12.93	7.52	4.37	2.86	9.11	12.02
	2014	38.92	11.57	12.85	7.14	4.75	2.84	8.62	12.22
	2015	37.26	10.82	12.76	7.75	5.29	3.43	8.90	13.04
	2016	37.12	11.24	12.79	7.32	5.29	3.81	8.68	12.89
	2017	34.73	11.03	12.27	7.65	5.24	4.15	9.92	14.88
	2018	32.29	10.69	12.79	7.72	5.34	3.98	10.68	16.49
	2019	29.96	10.72	12.84	7.49	5.61	4.03	11.20	18.12
	2020	27.67	10.51	13.34	8.09	5.55	4.32	12.02	18.50
	2021	28.18	9.24	11.26	8.34	5.65	4.15	12.43	20.73
건설업	2001	89.04	4.54	2.94	1.00	0.51	0.37	1.00	0.52
	2002	91.44	3.77	2.03	0.93	0.45	0.23	0.76	0.39
	2003	90.93	4.19	2.19	0.78	0.51	0.29	0.77	0.33
	2004	89.55	4.96	2.46	0.97	0.47	0.37	0.76	0.46
	2005	87.64	5.08	3.02	1.26	0.90	0.49	1.04	0.58
	2006	88.57	4.51	2.73	1.23	0.85	0.60	1.03	0.48
	2007	88.99	4.65	2.58	1.00	0.70	0.50	0.91	0.53
	2008	88.42	4.66	2.87	1.20	0.63	0.54	1.17	0.50
	2009	88.80	4.27	2.91	1.23	0.60	0.44	1.01	0.50
	2010	89.47	3.56	2.84	1.10	0.70	0.46	1.05	0.55
	2011	90.86	3.39	2.28	0.85	0.58	0.45	0.97	0.45
	2012	90.95	3.24	2.19	0.96	0.66	0.40	0.90	0.51
	2013	90.80	3.46	2.24	0.99	0.55	0.36	0.96	0.47
	2014	91.37	3.44	2.07	0.83	0.57	0.35	0.78	0.39
	2015	92.03	3.10	1.88	0.81	0.49	0.35	0.84	0.41
	2016	92.27	2.97	1.96	0.75	0.41	0.29	0.85	0.41
	2017	91.66	3.43	2.09	0.82	0.39	0.31	0.76	0.50
	2018	90.24	4.13	2.54	0.90	0.50	0.35	0.86	0.48
	2019	89.10	4.50	2.69	1.17	0.66	0.39	0.93	0.55
	2020	88.32	4.44	3.02	1.25	0.62	0.43	1.18	0.75
	2021	88.39	4.47	2.88	1.21	0.73	0.49	1.09	0.75

〈표 2-10〉의 계속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운수· 창고· 통신업	2001	31.55	11.80	12.72	7.95	5.29	4.84	13.89	11.87
	2002	32.91	10.92	13.04	8.28	5.88	3.80	12.81	12.37
	2003	32.12	11.84	12.67	8.57	5.88	4.04	13.26	11.62
	2004	32.95	11.14	12.98	7.57	5.82	4.37	12.83	12.34
	2005	34.15	10.51	12.62	8.43	5.36	3.81	12.83	12.30
	2006	35.06	10.81	10.60	7.01	5.51	3.98	11.71	15.33
	2007	37.08	11.00	11.68	7.05	5.28	3.95	11.13	12.65
	2008	37.75	11.27	12.39	6.63	4.92	3.73	10.40	12.91
	2009	36.37	10.75	13.93	7.11	4.99	3.64	10.06	12.65
	2010	41.17	10.19	9.46	7.45	4.86	3.62	10.36	12.49
	2011	41.36	10.48	10.22	5.99	4.97	3.76	10.39	12.64
	2012	41.30	11.02	11.19	6.05	4.38	3.86	9.66	12.26
	2013	39.20	12.31	11.51	6.65	4.46	3.21	11.01	11.37
	2014	39.71	12.68	12.23	7.33	3.80	3.06	10.48	10.34
	2015	41.66	12.32	12.34	6.13	4.48	2.93	9.07	10.94
	2016	41.91	12.93	13.00	6.13	4.50	3.45	8.68	9.29
	2017	43.97	11.85	13.19	6.77	4.25	3.16	7.62	9.18
	2018	43.22	11.32	11.66	5.86	4.46	3.12	9.17	11.13
	2019	43.46	12.73	11.31	6.54	4.29	3.45	8.76	9.41
	2020	48.59	13.47	11.65	6.45	3.41	2.45	6.30	7.67
	2021	53.24	11.95	11.44	5.85	3.55	2.40	5.40	6.18

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표 2-11〉 주요 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

(단위 : %)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광업	2001	10.16	2.54	4.62	5.08	2.77	4.85	18.94	46.65
	2002	13.16	3.80	3.54	5.32	4.05	3.80	16.71	49.62
	2003	14.16	3.92	4.14	3.49	3.70	4.36	16.99	49.24
	2004	12.44	2.53	4.38	3.69	3.46	4.61	16.13	52.76
	2005	15.90	2.41	4.34	1.93	4.82	2.89	12.77	54.94
	2006	11.46	2.29	3.75	3.33	2.29	3.54	15.21	58.13
	2007	8.76	3.46	4.38	1.84	2.76	1.84	15.44	61.52
	2008	8.43	2.89	2.17	4.10	2.89	3.61	13.01	62.89
	2009	7.02	2.26	4.01	4.26	2.76	2.76	12.28	60.15
	2010	5.44	1.55	5.18	3.37	2.59	2.07	16.06	58.55
	2011	6.67	1.60	4.53	3.20	3.73	3.73	12.80	60.53
	2012	5.00	1.88	3.44	4.06	3.44	4.06	11.88	63.75
	2013	4.74	2.37	3.16	3.68	3.16	1.84	12.37	63.42
	2014	5.74	1.75	1.50	3.99	2.00	1.25	9.73	67.83

〈표 2-11〉의 계속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광업	2015	5.04	1.68	2.64	2.16	2.40	1.44	10.31	69.78
	2016	5.22	2.75	3.02	1.92	1.65	2.20	11.26	66.76
	2017	3.28	1.97	4.38	3.28	2.41	1.97	9.41	70.46
	2018	3.97	2.30	3.35	1.88	2.09	2.09	9.62	72.18
	2019	4.43	2.22	2.71	2.22	1.23	0.99	9.85	73.40
	2020	2.36	1.65	3.07	2.59	1.65	1.42	7.31	76.18
	2021	2.87	1.72	1.43	2.87	2.29	1.43	9.74	75.07
제조업	2001	27.17	11.90	14.15	8.26	4.76	3.50	13.31	16.67
	2002	28.66	7.17	12.93	7.63	5.76	4.05	12.77	21.03
	2003	26.49	13.11	12.03	6.62	5.95	3.24	10.81	21.76
	2004	26.41	8.46	11.72	8.16	7.12	3.86	12.02	22.26
	2005	27.18	10.69	12.98	8.85	6.56	3.51	13.13	17.10
	2006	29.64	9.77	12.70	8.96	5.37	4.72	10.91	17.92
	2007	27.02	10.54	13.34	8.73	3.46	4.94	10.38	21.09
	2008	31.96	7.91	13.34	9.56	4.45	3.29	10.38	19.11
	2009	29.23	11.23	11.05	6.24	3.74	4.81	13.55	19.79
	2010	25.24	9.39	13.11	7.77	6.15	3.40	12.14	22.49
	2011	30.11	8.94	12.41	8.58	4.38	4.74	11.13	19.53
	2012	26.34	9.94	11.05	7.92	5.34	3.87	11.60	23.94
	2013	27.39	11.09	11.74	6.30	4.13	2.83	11.74	24.57
	2014	26.49	9.71	12.58	10.15	5.30	2.87	11.26	21.41
	2015	22.20	7.94	14.25	5.84	6.54	3.97	13.08	26.17
	2016	19.85	10.78	9.80	9.07	6.86	3.68	11.52	28.43
	2017	21.25	7.39	12.24	7.85	4.85	6.00	15.47	24.48
	2018	15.68	8.90	12.29	8.47	8.90	5.51	12.71	27.33
	2019	19.31	8.13	10.16	7.11	6.91	2.64	14.63	31.10
	2020	17.91	8.10	12.79	6.18	7.68	3.62	14.07	29.64
	2021	15.63	8.59	8.98	8.40	5.27	5.08	13.67	34.38
건설업	2001	82.60	7.02	3.80	1.32	0.44	0.29	2.19	2.34
	2002	82.83	6.64	4.47	1.59	1.15	0.72	1.30	1.30
	2003	85.35	6.43	3.21	0.77	0.51	0.77	1.54	1.41
	2004	83.17	8.23	4.11	1.50	0.75	0.12	0.87	1.25
	2005	83.49	7.30	2.70	2.22	1.43	0.63	1.75	0.48
	2006	84.10	6.57	3.06	2.14	0.76	0.46	1.99	0.92
	2007	80.49	9.06	3.84	1.69	1.23	0.77	2.00	0.92
	2008	84.78	5.36	3.04	1.74	1.45	0.87	1.88	0.87
	2009	83.00	6.60	4.13	1.16	0.99	0.99	1.32	1.65
	2010	82.16	5.40	4.42	1.15	0.82	1.47	3.11	1.47
	2011	83.25	5.48	4.19	2.09	0.48	0.48	2.09	1.93
	2012	80.44	5.44	6.65	1.61	0.60	1.61	1.41	2.22
	2013	80.25	7.23	4.76	2.29	0.18	0.00	3.53	1.59
	2014	81.89	5.76	3.50	2.26	1.44	1.03	0.82	3.29
	2015	82.96	5.07	4.87	1.22	1.22	0.41	2.43	1.62

〈표 2-11〉의 계속

		6개월 미만	6개월 ~1년	1~2년	2~3년	3~4년	4~5년	5~10년	10년 이상
건설업	2016	80.87	6.68	4.33	1.44	0.90	1.44	1.99	2.35
	2017	79.10	6.22	4.66	2.76	1.38	0.52	2.76	2.59
	2018	80.00	7.54	4.39	1.40	0.88	0.70	3.16	1.93
	2019	75.24	7.93	7.16	2.90	1.55	0.77	2.13	2.32
	2020	77.25	7.76	5.47	2.29	0.88	0.88	3.35	2.12
	2021	77.31	7.08	4.90	2.36	1.27	1.63	2.00	3.45
운수· 창고· 통신업	2001	27.76	11.03	11.79	8.75	4.94	5.70	12.17	17.87
	2002	33.33	13.24	11.27	9.31	3.43	4.41	9.31	15.69
	2003	25.47	12.74	16.51	8.96	6.13	1.89	11.79	16.51
	2004	32.55	8.02	15.09	7.08	5.66	4.72	10.85	16.04
	2005	28.80	11.96	11.96	6.52	8.70	4.89	14.67	12.50
	2006	32.26	8.39	11.61	8.39	5.81	3.87	14.84	14.84
	2007	29.52	11.45	9.64	9.64	1.81	3.01	14.46	20.48
	2008	26.23	10.38	15.85	6.56	3.83	2.19	14.21	20.77
	2009	37.88	9.85	8.33	4.55	3.79	3.03	14.39	17.42
	2010	27.87	7.38	12.30	9.02	7.38	7.38	9.02	19.67
	2011	30.60	8.21	10.45	10.45	5.22	5.97	9.70	19.40
	2012	32.86	7.86	13.57	9.29	6.43	4.29	13.57	12.14
	2013	22.96	14.81	17.04	2.96	2.96	5.19	16.30	17.78
	2014	34.45	12.61	9.24	4.20	7.56	4.20	12.61	15.13
	2015	29.77	9.92	12.21	9.92	4.58	3.05	10.69	19.85
	2016	25.58	8.53	14.73	10.08	5.43	6.20	13.95	15.50
	2017	28.93	8.26	12.40	5.79	8.26	5.79	10.74	19.83
	2018	25.48	14.01	17.20	5.10	7.64	3.18	10.83	16.56
	2019	28.76	14.38	11.76	6.54	2.61	3.27	18.95	13.73
	2020	30.67	16.67	6.67	10.67	6.67	5.33	8.00	15.33
	2021	27.22	13.92	12.03	11.39	5.06	4.43	10.76	15.19

자료: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1.

제3절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 사업체 측면

이 절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사업체 단위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1. 분석 방법

이 연구는 OLS 모형을 통해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며, 분석에 이용한 회귀모형은 식 (2-1)과 같다.

$$Y_{it} = \alpha + X_{it}\delta + \tau_t + \nu_j + \epsilon_{it} \quad (2-1)$$

회귀식 (2-1)에서 종속변수 Y_{it} 는 사업체 i , 연도 t 의 산재근로자 비율이며, X_{it} 는 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 사업체 내 재직 근로자들의 인적 구성과 고용규모, 매출규모, 사업장 내 환경, 직종 구성 및 산업 등 사업체의 특성 더미를 나타낸다. τ_t 는 연도 고정효과, ν_j 는 지역 고정효과, ϵ_{it}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사업체 단위에서 군집화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 중 ‘비율’을 나타내는 모든 변수는 자연로그 변환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대상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사업체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활용한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6~8차)」이다. 사업체패널조사는 사업체 단위로 패널화하여 격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1차(2005년)부터 8차(2019년)까지의 자료가 공개되었으나, 6차년도 이후 표본, 조사 내용 및 구조 등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6차(2015년)에서 8차(2019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결정 요인 분석의 종속변수는 ‘산재근로자 비율’이다. 사업체패널조사의 문항 중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누어 ‘산재근로자 비율’을 산출하였다. 사업체패널조사에서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 수’와 더불어 ‘업무와 관련된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수’를 묻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범위를 좀 더 확장하여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

지는 못하였으나 업무와 관련된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까지 포함한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을 산출하여 ‘산재근로자 비율’과 함께 종속 변수로 포함하였다.

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사업체 내 재직 근로자들의 인적 구성과 고용규모, 매출규모, 사업장 내 환경(사업장 내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 직종 구성 및 산업 등이다.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적 특성으로는 남성 근로자 비율,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정규직 비율, 외국인 근로자 비율 등 4개의 변수로 구성하였다. 고용규모는 1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으로 분류하여 사용하였고, 매출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를 바탕으로 연간 매출규모 120억 원 이하, 120억 원 초과~1,500억 원 이하, 1,500억 원 초과 등 세 개로 분류하여 각각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명하였다.

사업장 내 환경의 대리변수로는 사업장 내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사용하였으며, 사업체패널조사 항목 중 사업장 내에 화학물질, 물리적·인간공학·생물학적·정신적·심리적 위험 요소, 위험한 기계 기구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위험 장소에서의 작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장 내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 변수를 생성하고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주요 직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생산·단순직 등 4개의 직종으로,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생산자 서비스(사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업), 유통 서비스(도소매, 운송, 통신업), 개인 서비스(숙박음식, 오락문화, 가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공공, 보건복지, 교육, 기타 사회서비스업) 등 6개 산업군으로 재분류하였다.

〈표 2-12〉 기초통계량 :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 분석

N=5,905	Mean	SD
종속변수		
산재근로자 비율	0.197	0.999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	0.677	3.876

〈표 2-12〉의 계속

N=5,905		Mean	SD
독립변수			
남성 근로자 비율		0.729	0.238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0.175	0.208
정규직 비율		0.910	0.224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10	0.041
고용 규모	10~99인	0.473	0.499
	100~299인	0.291	0.454
	300인 이상	0.235	0.424
매출 규모	소기업	0.360	0.480
	중견기업	0.522	0.500
	대기업	0.118	0.322
사업장 내 위험 요소 존재 여부(존재 1)		0.653	0.476
주요 직종	관리·전문직	0.195	0.396
	사무직	0.136	0.343
	서비스·판매직	0.133	0.340
	생산·단순직	0.536	0.499
산업 분류	제조업	0.521	0.500
	건설업	0.088	0.283
	생산자 서비스업	0.017	0.128
	유통 서비스업	0.167	0.373
	개인 서비스업	0.171	0.377
	사회 서비스업	0.036	0.18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6~8차」.

〈표 2-12〉에는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사업체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포함된 전체 표본의 수는 5,905개이고, 이들 사업체의 산재근로자 비율의 평균치는 0.197%이다. 이는 앞서 〈표 2-1〉에서 확인한 산업재해 요양재해율(2019년 기준 0.58%)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치인데, 이는 사업체 패널조사의 조사 대상이 상시근로자 기준 3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 〈표 2-3〉에서 보듯이, 고용규모별 산업재해 요양재해율은 고

용규모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 사고가 집중되어 요양재해율은 확연히 높는데,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이들 사업장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제 요양재해율보다 이 데이터에서 추정한 산재근로자의 비율이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을 산출하여 ‘산재근로자 비율’과 함께 종속변수로 포함하였고, 이 비율은 0.677%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인적 특성 중 남성 근로자 비율의 평균치는 72.9%,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17.5%, 정규직 비율은 91.0%,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1.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규모별로 봤을 때, 10~99인 규모의 사업체가 47.3%로 가장 비중이 컸고, 100~299인과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중이 각각 29.1%, 23.5%였다. 매출규모별로 봤을 때,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비중이 각각 36.0%, 52.2%, 11.8%였으며, 사업장 내 위험 요소가 존재하는 경우가 65.3%인 것으로 확인된다. 주요 직종별 비중은 관리·전문직이 19.5%, 사무직이 13.6%, 서비스·판매직이 13.3%였고 생산·단순직이 53.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52.1%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개인 서비스업, 유통 서비스업 순이었다.

3. 회귀분석 결과

〈표 2-13〉은 회귀식 (2-1)을 사용하여 사업체 단위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자 산재근로자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 사업체패널조사 6차년도 표본추출은 2014년 12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설계하였고, 사업체패널조사에서 조사 대상은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였으나, 2015년 실제 조사 당시 전체 근로자 수를 확인하였을 때 30인 미만의 사업장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 연구는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표 2-13〉 산재근로자 비율 : 전 산업

	(1)	(2)	(3)
남성 근로자 비율	0.019* (0.011)	0.018* (0.010)	0.017 (0.013)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0.022*** (0.007)	0.022*** (0.007)	0.016*** (0.006)
정규직 비율	0.009 (0.010)	0.007 (0.010)	-0.001 (0.011)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19 (0.013)	0.018 (0.013)	0.014 (0.012)
10~99인			
100~299인		-0.027** (0.013)	-0.026** (0.012)
300인 이상		-0.021 (0.015)	-0.022 (0.016)
소기업			
중견기업		-0.002 (0.015)	0.003 (0.014)
대기업		0.012 (0.028)	0.009 (0.028)
사업장 내 위험 요소			0.051*** (0.014)
관리·전문직			
사무직			0.018 (0.020)
서비스·판매직			0.035 (0.025)
생산·단순직			0.046** (0.020)
N	5,905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사업체별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산업, 연도,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6~8차」.

〈표 2-13〉의 모형 (1)은 해당 사업체의 인적 구성 특성과 산업,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만을 통제한 결과이고, 모형 (2)는 해당 사업체의 인적 구성 특성과 고용규모, 매출규모를 추가하고 산업, 연도,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이며, 모형 (3)은 인적 구성 특성, 산업,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에 고용규모, 매출규모, 사업장 내의 환경(위험 요소)과 주요 직종 등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이 연구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하여 분석한 모형 (3)의 결과를 기준으로 설명한다.

분석 결과, 근로자의 인적 특성 변수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며, 고용규모별로 봤을 때에는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산재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 때 산재근로자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생산·단순직 비중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남성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와 직종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 (1)과 모형 (2)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재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나, 두 요인을 포함했을 때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즉, 통상적으로 산재근로자는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생산·단순직에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표 2-14〉는 동일한 회귀식을 사용하여 산업재해로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업무와 관련된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앞선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근로자의 인적 특성 변수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며, 고용규모별로 봤을 때에는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 때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이 높

았다. 그리고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는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단, 산재근로자 비율 분석과는 달리 남성 근로자 비율과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5〉와 〈표 2-16〉은 산업별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고 산재 사고가 빈번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2-15〉는 제조업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비율을, 〈표 2-16〉은 제조업 사업장의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비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표 2-15)는 이전 분석과 동일하게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의 비율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구성의 특성으로는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남성 근로자의 비율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와 직종을 고려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의 비율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이 결과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고용규모와 직종의 효과는 이전 분석과 추정치의 방향은 동일했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단, 이전 분석과 달리 외국인 고용률이 높은 제조업으로 분석 대상을 한정하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국인 근로자 비율과 산재근로자 비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표 2-16)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과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이 높았고, 고용규모가 클수록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이 낮았으며,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는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2-14〉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 : 전 산업

	(1)	(2)	(3)
남성 근로자 비율	0.056** (0.025)	0.055** (0.025)	0.074*** (0.027)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0.047*** (0.012)	0.047*** (0.012)	0.032*** (0.011)
정규직 비율	0.028* (0.016)	0.025 (0.016)	0.003 (0.017)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26 (0.020)	0.025 (0.020)	0.023 (0.020)
10~99인			
100~299인		-0.025 (0.027)	-0.025 (0.026)
300인 이상		-0.052* (0.029)	-0.062* (0.033)
소기업			
중견기업		-0.021 (0.031)	-0.005 (0.026)
대기업		0.023 (0.056)	0.019 (0.058)
사업장 내 위험 요소			0.102*** (0.026)
관리·전문직			
사무직			0.050 (0.034)
서비스·판매직			0.162*** (0.052)
생산·단순직			0.115*** (0.033)
N	5,905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사업체별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산업, 연도,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6~8차」.

〈표 2-15〉 산재근로자 비율 : 제조업

	(1)	(2)	(3)
남성 근로자 비율	0.042* (0.023)	0.048** (0.024)	0.039 (0.025)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0.033*** (0.009)	0.032*** (0.009)	0.029*** (0.009)
정규직 비율	-0.023 (0.052)	-0.022 (0.052)	-0.018 (0.054)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27** (0.013)	0.025* (0.013)	0.023* (0.014)
10~99인			
100~299인		-0.021 (0.019)	-0.023 (0.019)
300인 이상		-0.013 (0.023)	-0.022 (0.024)
소기업			
중견기업		-0.022 (0.023)	-0.025 (0.023)
대기업		-0.031 (0.039)	-0.033 (0.039)
사업장 내 위험 요소			0.069*** (0.022)
관리·전문직			
사무직			0.014 (0.036)
서비스·판매직			0.015 (0.037)
생산·단순직			0.029 (0.026)
N	3,077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사업체별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6~8차」.

〈표 2-16〉 사고/질병을 경험한 근로자 비율 : 제조업

	(1)	(2)	(3)
남성 근로자 비율	0.058 (0.038)	0.057 (0.039)	0.043 (0.039)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0.047*** (0.015)	0.047*** (0.015)	0.039** (0.015)
정규직 비율	0.007 (0.051)	0.006 (0.051)	0.012 (0.054)
외국인 근로자 비율	0.054** (0.021)	0.053** (0.021)	0.050** (0.022)
10~99인			
100~299인		-0.024 (0.039)	-0.028 (0.039)
300인 이상		-0.099* (0.051)	-0.116** (0.052)
소기업			
중견기업		0.005 (0.035)	0.002 (0.035)
대기업		0.061 (0.081)	0.057 (0.080)
사업장 내 위험 요소			0.121*** (0.036)
관리·전문직			
사무직			0.002 (0.056)
서비스·판매직			0.024 (0.081)
생산·단순직			0.053 (0.046)
N	3,077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사업체별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업체패널조사 6~8차」

제4절 소 결

이 장에서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추이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고용규모별·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과 추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사업체 근로자들의 인적 구성과 고용규모, 매출규모, 사업장 내 환경, 직종 구성 및 산업 분류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 단위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우선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과 비교할 때 2021년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만인율은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2001년 0.77%였던 요양재해율은 2003년 0.9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7년 0.48%까지 하락하였고, 그 이후 최근 5년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사망만인율 추이도 요양재해율 추이와 유사한 경향이 관측되는데, 2001년 2.6‰이었던 사망만인율은 2003년 2.76‰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며 2016년 0.96‰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최근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1년 기준 1.07‰이었다.

둘째,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는 ‘넘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하였고 ‘업무상 질병’이 그다음이었다. 반면 2001년에는 ‘끼임’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업무상 질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감소하며, 20여 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고용규모별 패턴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소규모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고용규모 간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넷째, 2001년 요양재해율은 광업, 어업, 농업 순이었고, 2021년도는 광업, 어업, 건설업 순이었다. 산업별 추이를 봤을 때, 20여 년간 전반적으로 요양재해율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산업별 요양재해율도 대체로 감소하였으나, 광업과 건설업은 오히려 요양재해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 산업별 사망만인율은 광업, 어업, 농업 순으로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2021년 사망만인율은 광업, 어업, 건설업 순으로 산업별 요양재해율 패턴과 다르지 않았다.

다섯째,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은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4~5년차까지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감소하다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 그룹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와 6개월~1년 경력의 근로자들 간 산업재해 발생 비중은 대략 4~5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인다.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 역시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속기간별 패턴도 유사했다. 단, 사망사고의 경우 근속기간 10년 이상일 때 발생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남성 근로자 비율,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 정규직 비율, 외국인 근로자 비율 등 사업체 내 재직 근로자들의 인적 구성과 고용규모, 매출규모, 사업장 내 환경(사업장 내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여부), 직종 구성 및 산업 등을 고려하여 사업체 단위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변수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며, 고용규모별로 봤을 때에는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산재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 때 산재근로자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생산·단순직 비중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남성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와 직종 통제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즉, 남성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와 직종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산재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요인이었으나, 두 요인을 통제했을 때에는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통상적으로 산재근로자는 남성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보건대 이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생산·단순직에 더 많이 종사하는 데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게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의 비율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구성의 특성으로는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전 분석과 달리 외국인 고용이 높은 제조업으로 한정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국인 근로자 비율과 산재근로자 비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최근 20년간의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계 거시자료가 아닌 마이크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특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체에 대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장 내 환경, 근로자의 인적 구성, 고용규모, 주요 직종 구성,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미래의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명중·박선영, 2023).

제3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제1절 연구 목적

산업재해는 근로자들에게 영구적인 장애를 남기거나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노동력 상실이나 근로소득 감소 등에 따른 직접적 손실과 더불어 생산 축소, 근로의욕 감소, 생산성 하락 등 부정적 외부효과(negative externality)도 함께 수반함으로써 상당한 비용을 발생시킨다(Heinrich, 1980; 김명중·박선영, 2023).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인생에 중대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신체적 능력 손실로 인한 직업 복귀 등 사회참여에의 제한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한다(한기명·이민아, 2017).

우리나라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산재보험을 도입하였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지원, 2023).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과 소요된 비용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재해로 인해서 직업능력의 손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항구적인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직업 복귀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강다솔 외, 2021).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산재근로자 개인적으로는 소득의 상실과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 갈등, 사회

부적응 등을 경험하게 되며, 사회적으로도 이들을 노동시장 및 사회로 복귀 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박수경, 2012).

산재보험은 과거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금 보상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2001년부터는 「재활사업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해 산재보험의 재활서비스를 체계화하는 등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에 정책적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의 사회적 복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정책의 주안점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동안 산업재해를 주제로 한 연구는 산업재해의 발생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들은 집계자료를 활용하여 거시적으로 접근하거나 일부 산업을 대상으로 산업, 규모, 업종 등 사업체 특성이나,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작업 환경 등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경제적 요인들을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근로자들을 주제로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 연구들은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측면에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직업 복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장 관련 요인들을 확인하거나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학력, 성별, 연령, 결혼상태) 및 재해 특성(요양 기간, 장애 등급)과 직업 복귀 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들은 기초 통계 수치를 단순 비교한다거나, 재취업, 원직장 복귀에 대한 각각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실증 분석을 통한 연구조차 산업재해 이전 일자리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및 업종별 이질성 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원직장 복귀’를 바람직한 것으로 가정하고 원직장 복귀의 결정 요인을 확인하고 있지만,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객관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 장에서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 및 원직장 복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 요인을 확인하며, 원직장 복귀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및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실증 분석 결과를 통해 산

재근로자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제2절 자료 및 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종속변수가 연속 변수일 때에는 OLS모형을, 이행 변수일 때에는 선형확률모형(Linear Probability Model)을 사용하며, 분석에 이용한 회귀모형은 식 (3-1)과 같다.

$$Y_{it} = \alpha + X_{it}\delta + \tau_t + \nu_j + \epsilon_{it} \quad (3-1)$$

회귀식 (3-1)에서 종속변수 Y_{it} 는 산재근로자 i , 연도 t 의 노동시장 복귀 여부, 원직장 복귀 여부, 임금 및 종사상 지위를 나타낸다. X_{it} 는 결정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로서 산재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결혼 여부, 학력, 소득, 종사상 지위, 직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및 장애 여부,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등의 건강 관련 요인들의 벡터이다. τ_t 는 연도 고정효과, ν_j 는 지역 고정효과, ϵ_{it}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개인 단위에서 군집화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고, 소득 변수는 자연로그 변환하였다.

2.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제2차 코호트 조사이다. 이 자료는 2017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 3,294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매년 1회 조사가 시행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3년 7월 현재 공개된 「산재보험패널조

사」 제2차 코호트 조사 1-4차까지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분석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그중 하나가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및 원직장 복귀 결정 요인 분석이며, 다른 하나가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산재근로자의 임금 및 종사상 지위 격차 분석이다. 본 연구는 재해 당시 자영업자와 1차 산업 종사자인 경우는 제외하였다.

첫 번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노동시장 복귀 여부 및 원직장 복귀 여부이다. 노동시장 복귀 여부 분석은 전체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원직장 복귀 여부 분석은 노동시장 복귀자들만으로 그 대상을 한정하였다. 결정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 학력, 결혼 여부, 가구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 장애 여부,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등 건강 관련 요인, 임금,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등 재해 당시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등을 포함하였다.

연령은 10세 연령 더미로 30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구분되며,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이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재학 이상에서 졸업(이하 고등학교), 대학 재학 이상(이하 대학 이상) 등 세 개의 더미로 구성하였다. 장애 등급은 자료상의 분류에 따라 6개의 장애 등급(1~3등급, 4~7등급, 8~9등급, 10~12등급, 13~14등급, 무장애)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이 가장 중증 장애를 의미한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좋음’, ‘매우 좋음’ 등 4개로 나뉘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생산자 서비스(사업, 금융, 보험, 부동산임대업), 유통 서비스(도소매, 운송, 통신업), 개인 서비스(숙박음식, 오락문화, 가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공공, 보건복지, 교육, 기타 사회서비스업) 등 6개 산업군으로 재분류하였고, 직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등 6개의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체의 규모는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등 6개 규모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분석을 위한 종속변수는 로그 월평균 임금과 로그 시간당 임금 및 종사상 지위 등 세 개의 변수이고, 분석 대상은 노동시장 복귀자들에 한하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원직장 복귀 여

부와 임금, 종사상 지위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독립변수는 원직장 복귀 여부이고,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 학력, 결혼 여부, 가구 소득 등 사회·경제적 특성, 장애 여부,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등 건강 관련 요인, 임금,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등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을 포함하였다. 아울러 종속변수에 따라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의 임금, 혹은 종사상 지위도 추가로 고려하였다.

제3절 분석 결과

1. 산재근로자의 특성과 경제활동 유형 추이

〈표 3-1〉은 「산재보험패널조사」 제2차 코호트의 조사 대상인 2017년 1월에서 12월 사이에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확인한 결과를 보여준다.

〈표 3-1〉 산재근로자의 특성

N=3,294		빈도(n)	비중(%)
성별	남성	2,728	82.82
	여성	566	17.18
최종 학력	중학교 이하	1,184	35.94
	고등학교	1,525	46.30
	대학 이상	585	17.76
연령	30대 이하	541	16.42
	40대	682	20.70
	50대	1,178	35.76
	60대 이상	893	27.11
장애 등급	유	2,625	79.69
	무	669	20.31
종사상 지위	상용직	1,848	56.10
	임시·일용직	1,422	43.17
	자영업자	24	0.73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 1차 조사(2018년).

총 3,294명 중 남성이 2,728명, 여성이 566명으로 산재근로자 중 대부분인 82.8%가량이 남성들이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률 등을 감안할 때 산재근로자들의 남성 비중은 매우 높은 편이며, 이는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 분석에서도 확인하였듯이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산재 발생 위험이 높은 직종에 더 많이 종사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학력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컸고, 대학 이상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 60대 이상, 40대, 30대 이하 순이었고,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 비중이 56.1%, 임시·일용직이 43.2%, 자영업자가 0.73%였다. 이들 중 장해 등급이 있는 표본은 79.7%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는 「산재보험패널조사」 제2차 코호트 조사 대상자의 경제활동 유형을 4년간에 걸쳐 확인한 것이며, [그림 3-1]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1차년도에는 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들이 재해 당시 사업장으로 복귀

〈표 3-2〉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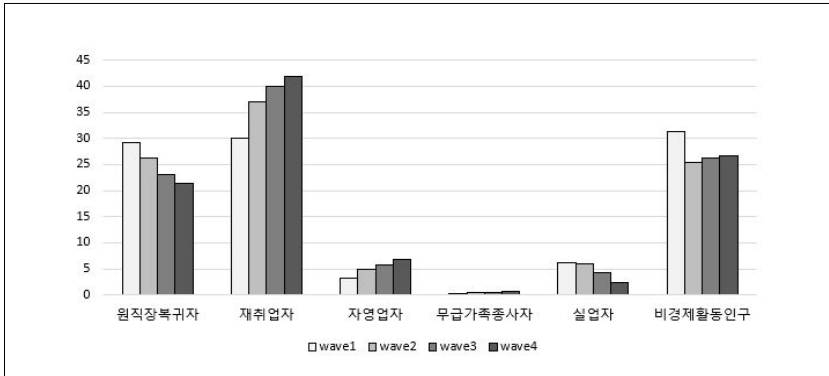
(단위: 명,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원직장 복귀자	959 (29.11)	781 (26.34)	650 (23.03)	600 (21.45)
재취업자	989 (30.02)	1,097 (37.00)	1,130 (40.03)	1,170 (41.83)
자영업자	106 (3.22)	147 (4.96)	165 (5.84)	193 (6.90)
무급가족종사자	6 (0.18)	13 (0.44)	16 (0.57)	19 (0.68)
실업자	204 (6.19)	176 (5.94)	122 (4.32)	69 (2.47)
비경제활동인구	1,030 (31.27)	751 (25.33)	740 (26.21)	746 (26.67)
계	3,294 (100)	2,965 (100)	2,823 (100)	2,797 (100)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1]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유형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한 비율(원직장 복귀율)이 29.1%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고,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재취업한 비율은 30.0%에서 41.8%로 늘어났다. 또한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도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원직장 복귀율이 감소하기는 하나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산재근로자들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3-2-1]~[그림 3-5-2]는 산재근로자들의 특성별로 경제활동 유형의 추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그림 3-2]는 연령별, [그림 3-3]은 학력별, [그림 3-4]는 장애 등급 유무별, [그림 3-5]는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유형의 추이를 각각 보여준다.

연령별로 봤을 때, 원직장 복귀자들의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재취업자 비중은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다른 연령층에서는 상대적으로 재취업자 비율이 원직장 복귀자 비율보다 높았으나, 40대의 경우 원직장 복귀율과 재취업자 비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60대 이상에서는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는 비율이 40~50%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유형별 추이는 연령에 따라 확연한 차이는 보이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원직장 복귀자 비율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재취업자 비율은 증가한다.

학력별로 봤을 때,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재취업 등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높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았다. 중학교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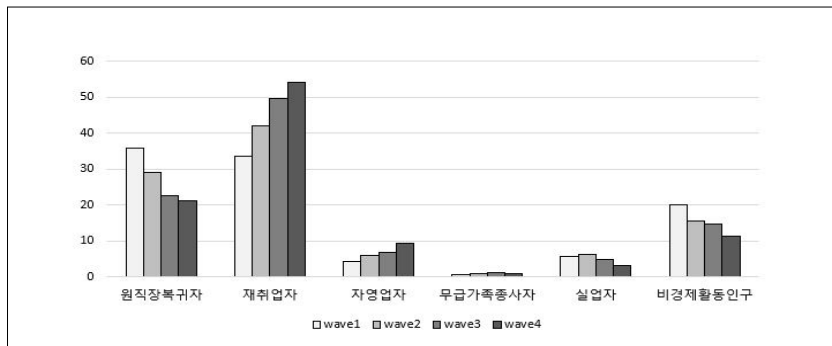
하의 학력을 가진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비율은 20%를 밑돌고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는 비율은 35%가 넘는 것과 대조적으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그룹은 원직장 복귀 및 재취업 비율이 모두 높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5% 남짓으로 낮았다. 유형별·학력별 추이는 전반적인 추이와 유사했다.

장해 등급 유무별로 봤을 때, 장해 등급이 있는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비율과 재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장해 등급이 없는 그룹에 비해 낮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았다. 유형별 추이는 장해 등급 유무에 따라 상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재해 당시 임시·일용직이었던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10% 남짓으로 매우 낮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재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반면 상용직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1차 조사년도에 43.3%로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3.9배가량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0%p 이상 낮았다.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유형별 추이는 종사상 지위별로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다. 즉, 종사상 지위에 관계없이 대체로 시간이 흐를수록 원직장 복귀자 비율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재취업자 비율은 늘어난다.

[그림 3-2-1]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30대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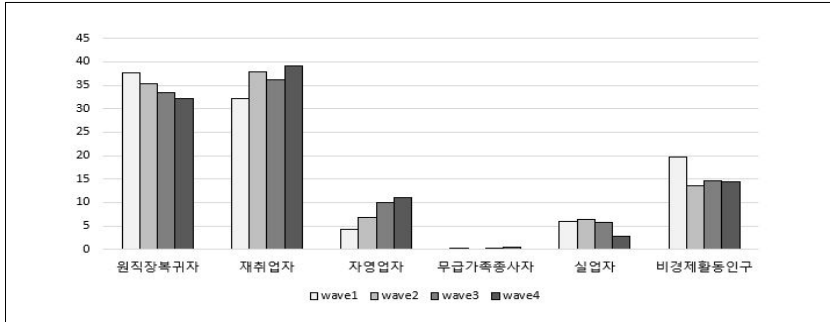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2-2]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4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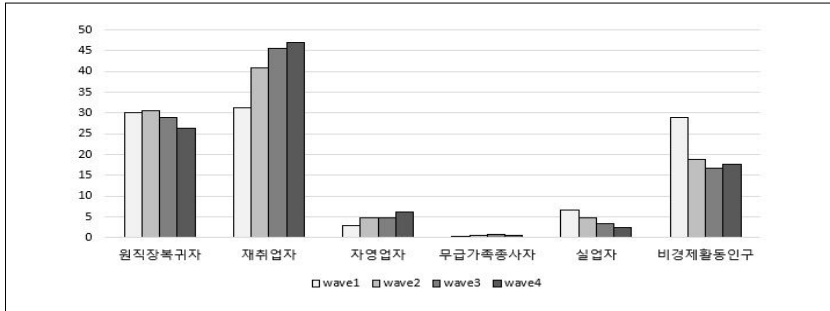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2-3]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5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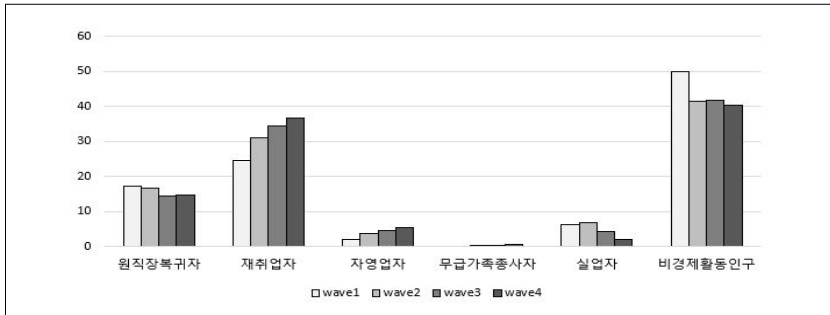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2-4] 산재근로자의 연령별 경제활동 유형 : 60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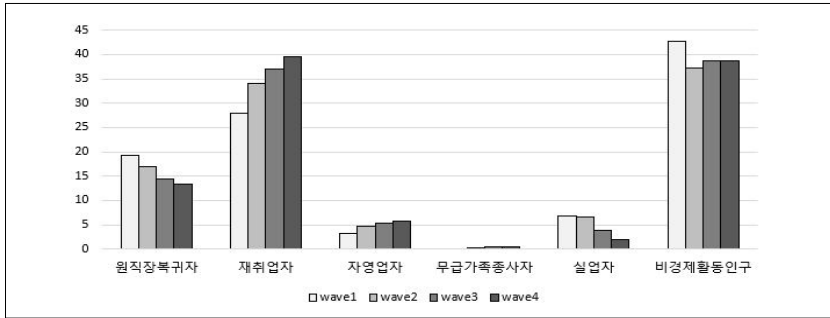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3-1] 산재근로자의 학력별 경제활동 유형 : 중학교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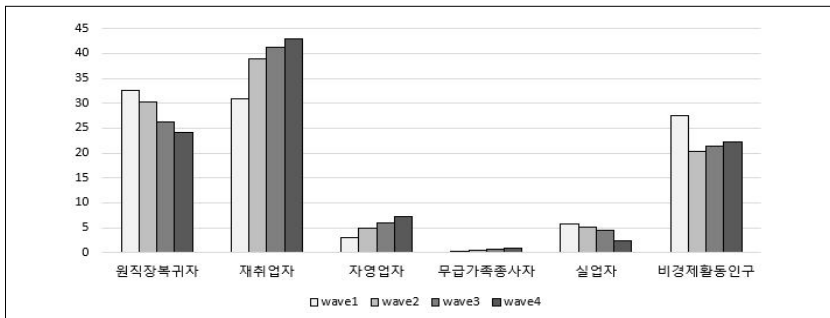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3-2] 산재근로자의 학력별 경제활동 유형 : 고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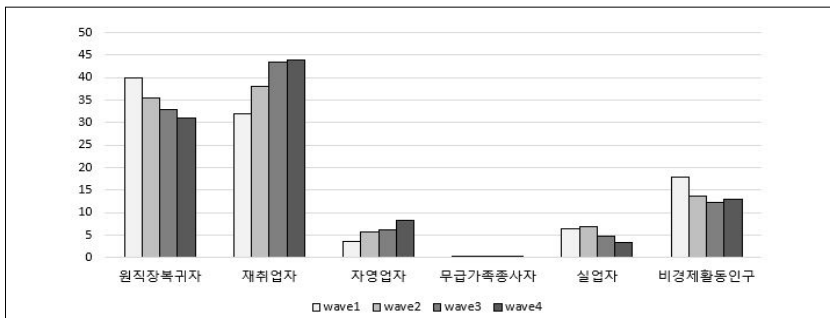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3-3] 산재근로자의 학력별 경제활동 유형 : 대학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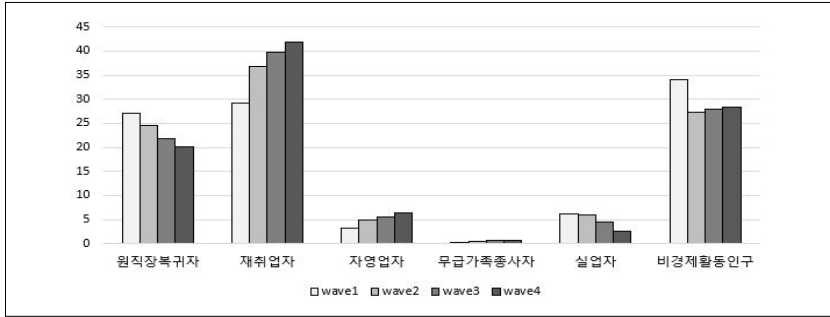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4-1] 산재근로자의 장애 등급 유무별 경제활동 유형 : 등급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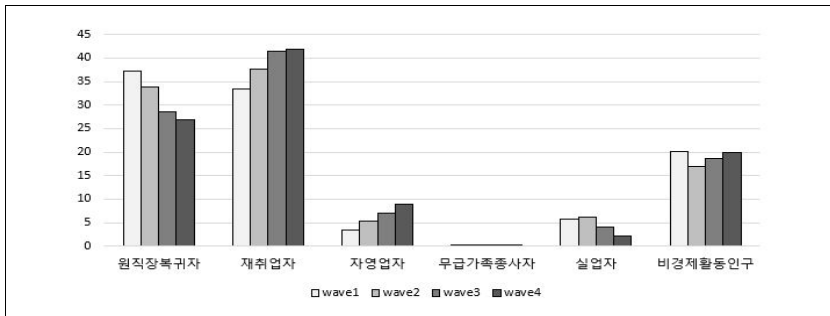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4-2] 산재근로자의 장애 등급 유무별 경제활동 유형 : 등급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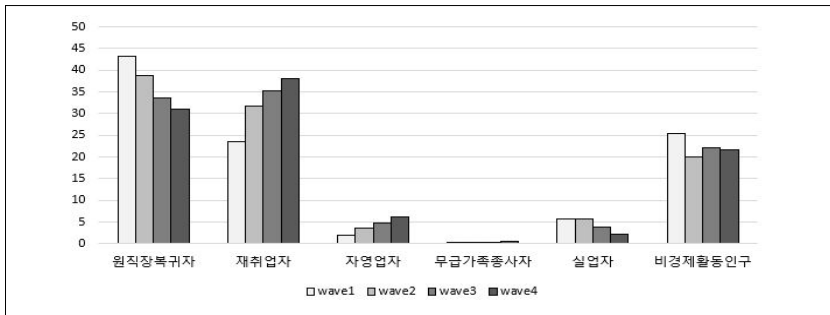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5-1]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유형 : 상용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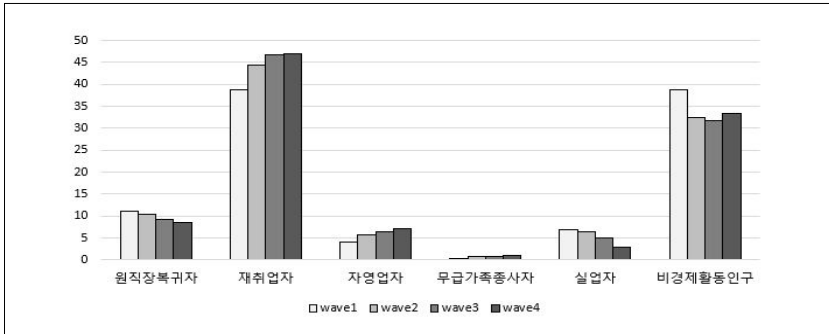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그림 3-5-2] 산재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 경제활동 유형 : 임시·일용직

(단위 : %)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2. 회귀분석 결과

가.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표 3-3〉은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표본 수는 11,438개이며, 이 중 원직장 복귀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한 비율은 67.4%였다. 연령은 60대 이상 비중이 35.9%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 비율이 82.2%로 산재근로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그룹의 비중이 가장 컸고, 중학교 이하, 대학 이상 학력순이었다. 유배우 비율은 66.9%였고,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13.7%였다. 장애 등급으로 봤을 때에는 장애 등급이 없는 무장애 비율이 19.3%였으며, 장애 등급이 있는 산재근로자들 가운데는 중증 장애인 1~3등급의 비중이 가장 낮았고, 경증으로 올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 좋음 ’이 54.7%로 절반 이상이었고 ‘ 좋지 않은 편 ’ 35.4%이었으며, ‘ 매우 좋지 않음 ’, ‘ 매우 좋음 ’ 순이었다.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 받았던 한 달 평균 임금은 260만 원 정도이고, 상용직 비중이 57.7%였다. 산재근로자들의 33.4%가 제조업, 32.1%가 건설업

에 종사하여 절반 이상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되며,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기능·조작·조립직에 종사하였던 비중이 56.4%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24.3%)이었다. 사업체 규모로는 10~29인 사업장 비율이 27.3%, 5~9인 26.4%, 5인 미만 22.0% 순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표 3-3〉 기초통계량 : 노동시장 복귀

	N=11,438		Mean	SD
종속변수	취업 여부(취업 1)		0.674	0.469
독립변수	연령	30세 이하	0.136	0.343
		40대	0.183	0.387
		50대	0.321	0.467
		60대 이상	0.359	0.480
	성별(남성 1)		0.822	0.382
	학력	중학교 이하	0.358	0.479
		고등학교	0.463	0.499
		대학 이상	0.179	0.383
	결혼 여부(유배우 1)		0.669	0.471
	장애 여부(장애 1)		0.137	0.344
	장애 등급	1~3급 (중증)	0.025	0.157
		4~7급	0.083	0.275
		8~9급	0.108	0.310
		10~12급	0.278	0.448
		13~14급	0.313	0.464
		무장애(장애 등급 없음)	0.193	0.394
	주관적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0.069	0.253
		좋지 않은 편	0.354	0.478
		좋음	0.547	0.498
		매우 좋음	0.030	0.172
	한 달 평균 임금(재해 사업장, 만 원)		260.219	111.966
	종사상 지위(재해 사업장, 상용직 1)		0.577	0.494
	산업 분류 (재해 사업장)	제조업	0.334	0.472
		건설업	0.321	0.467
		생산자 서비스업	0.095	0.294
		유통 서비스업	0.098	0.297
		개인 서비스업	0.092	0.289
		사회 서비스업	0.060	0.237
	직종 분류 (재해 사업장)	관리·전문직	0.064	0.245
		사무직	0.036	0.187

〈표 3-3〉의 계속

	N=11,438		Mean	SD
독립변수	직종 분류 (재해 사업장)	서비스·판매직	0.078	0.267
		농림어업숙련직	0.015	0.120
		기능·조작·조립직	0.564	0.496
		단순노무직	0.243	0.429
	사업체 규모 (재해 사업장)	5인 미만	0.220	0.414
		5~9인	0.264	0.441
		10~29인	0.273	0.445
		30~99인	0.157	0.364
		100~299인	0.053	0.225
		300인 이상	0.033	0.180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3-4〉는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는 총 7,222명이고, 이 중 원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40.8%였다. 연령은 50대 비중이 35.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7.8%, 40대가 20.8%, 30대 이하가 15.6%였다. 남성 비율이 83.1%였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그룹의 비중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이하, 대학 이상 순이었다. 유배우 비율은 68.3%였고,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8.9%였다. 장애 등급으로 봤을 때에는 장애 등급이 없는 무장애 비율이 21.6%였으며, 장애 등급이 있는 산재근로자들 중에는 중증장애(1~3급) 비중이 가장 낮았고, 경증으로 올수록 비중이 높아졌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 좋음 ’이 67.3%로 절반 이상이었고 ‘ 좋지 않은 편 ’이 27.7%였으며, ‘ 매우 좋음 ’, ‘ 매우 좋지 않음 ’ 순이었다.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 받았던 한 달 평균 임금은 269만 원 정도이고, 상용직 비중이 63.3%였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36.5%가 제조업, 28.8%가 건설업에 종사하여 절반 이상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재직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기능·조작·조립직에 종사하였던 비중이 57.9%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21.1%)이었다. 사업체 규모로는 10~29인 사업장 비율이 27.6%, 5~9인 25.0%, 5인 미만 20.3% 순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근로자들이 집중되어 있었다.

〈표 3-4〉 기초통계량 : 원직장 복귀

	N=7,222		Mean	SD
종속변수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408	0.492
독립변수	연령	30세 이하	0.156	0.363
		40대	0.208	0.406
		50대	0.358	0.479
		60대 이상	0.278	0.448
	성별(남성 1)		0.831	0.374
	학력	중학교 이하	0.292	0.455
		고등학교	0.495	0.500
		대학 이상	0.213	0.409
	결혼 여부(유배우 1)		0.683	0.465
	장애 여부(장애 1)		0.089	0.285
	장애 등급	1~3급(중증)	0.002	0.048
		4~7급	0.052	0.223
		8~9급	0.093	0.291
		10~12급	0.287	0.452
		13~14급	0.349	0.477
		무장애(장애 등급 없음)	0.216	0.412
	주관적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0.011	0.107
		좋지 않은 편	0.277	0.447
		좋음	0.673	0.469
		매우 좋음	0.039	0.194
	한 달 평균 임금(재해 사업장, 만 원)		269.119	111.414
	종사상 지위(재해 사업장, 상용직 1)		0.633	0.482
	산업 분류 (재해 사업장)	제조업	0.365	0.482
		건설업	0.288	0.453
		생산자 서비스업	0.092	0.289
		유통 서비스업	0.108	0.310
		개인 서비스업	0.086	0.281
		사회 서비스업	0.060	0.238
	직종 분류 (재해 사업장)	관리·전문직	0.073	0.260
		사무직	0.042	0.201
		서비스·판매직	0.083	0.276
		농림어업숙련직	0.012	0.108
		기능·조작·조립직	0.579	0.494
		단순노무직	0.211	0.408
	사업체 규모 (재해 사업장)	5인 미만	0.203	0.402
		5~9인	0.250	0.433
		10~29인	0.276	0.447
		30~99인	0.169	0.375

〈표 3-4〉의 계속

	N=7,222	Mean	SD
	100~299인	0.059	0.235
	300인 이상	0.043	0.203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전체 산재근로자와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비교하면,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학력 수준이 높으며, 장애 및 장애 등급으로 평가할 때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재해 당시 사업장에서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 일 뿐만 아니라 평균 임금이 더 높았다.

〈표 3-5〉는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을 회귀식 (3-1)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상태 등 건강 요인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연령·성별·학력·결혼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3)은 건강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임금·종사상 지위·산업·직종·사업체 규모 등 재해 당시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본 연구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 (3)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표 3-5〉 산재근로자 노동시장 복귀 결정 요인

	(1)	(2)	(3)
장애 여부(장애 1)	-0.116*** (0.042)	-0.084** (0.038)	-0.066* (0.036)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152*** (0.035)	0.179*** (0.035)	0.191*** (0.035)
8~9급	0.260*** (0.044)	0.310*** (0.042)	0.325*** (0.042)
10~12급	0.262*** (0.047)	0.323*** (0.044)	0.348*** (0.044)
13~14급	0.295*** (0.047)	0.353*** (0.045)	0.380*** (0.044)

〈표 3-5〉의 계속

	(1)	(2)	(3)
무장해	0.283*** (0.049)	0.343*** (0.047)	0.367*** (0.045)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341*** (0.035)	0.316*** (0.036)	0.316*** (0.035)
좋음	0.605*** (0.035)	0.540*** (0.036)	0.533*** (0.035)
매우 좋음	0.613*** (0.044)	0.532*** (0.044)	0.524*** (0.044)
연령 더미(Ref. 40대)			
30대 이하		-0.022 (0.026)	-0.003 (0.024)
50대		-0.005 (0.019)	-0.001 (0.019)
60대 이상		-0.161*** (0.023)	-0.142*** (0.023)
성별(남성 1)		0.033 (0.020)	0.012 (0.024)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49** (0.020)	0.040** (0.020)
대학 재학 이상		0.069*** (0.025)	0.034 (0.026)
결혼 여부(유배우 1)		0.071*** (0.018)	0.049*** (0.018)
한 달 평균 임금			0.107*** (0.023)
종사상 지위(상용직 1)			0.044** (0.020)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012 (0.024)
생산자 서비스업			0.058** (0.029)
유통 서비스업			0.062** (0.027)

〈표 3-5〉의 계속

	(1)	(2)	(3)
개인 서비스업			0.022 (0.029)
사회 서비스업			0.111*** (0.032)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011 (0.033)
서비스·판매직			-0.010 (0.033)
농림어업숙련직			0.140** (0.059)
기능·조작·조립직			-0.014 (0.025)
단순노무직			-0.040 (0.028)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5~9인			0.004 (0.021)
10~29인			0.016 (0.020)
30~99인			0.017 (0.025)
100~299인			0.023 (0.040)
300인 이상			0.022 (0.050)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11,438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확률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일수록 높았다. 무엇보다도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등의 건강 상태는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60대 이상

고령의 산재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또한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노동시장 복귀 확률이 높았고, 산업별로는 제조업에 비해 다른 산업에 종사할 수록 복귀 확률이 높았는데 특히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복귀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농림어업숙련직일 때 복귀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그 외의 직종에서는 추정치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음(-)이었다. 사업체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체에 비해 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노동시장 복귀 확률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3-6〉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결정 요인

	(1)	(2)	(3)
장애 여부(장애 1)	-0.034 (0.060)	0.003 (0.054)	0.009 (0.047)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453*** (0.076)	0.489*** (0.080)	0.498*** (0.088)
8~9급	0.393*** (0.086)	0.453*** (0.088)	0.517*** (0.098)
10~12급	0.326*** (0.083)	0.401*** (0.085)	0.461*** (0.091)
13~14급	0.288*** (0.084)	0.371*** (0.086)	0.434*** (0.091)
무장애	0.374*** (0.086)	0.467*** (0.087)	0.541*** (0.092)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002 (0.082)	-0.016 (0.081)	0.043 (0.071)
좋음	0.103 (0.085)	0.075 (0.085)	0.128* (0.073)
매우 좋음	0.131 (0.100)	0.129 (0.098)	0.152* (0.083)
연령 더미(Ref. 40대)			

〈표 3-6〉의 계속

	(1)	(2)	(3)
30대 이하		-0.094*** (0.045)	-0.116*** (0.042)
50대		0.025 (0.038)	0.052 (0.034)
60대 이상		-0.020 (0.044)	0.020 (0.041)
성별(남성 1)		0.004 (0.038)	0.058 (0.044)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104*** (0.037)	0.028 (0.033)
대학 재학 이상		0.147*** (0.047)	0.005 (0.045)
결혼 여부(유배우 1)		0.128*** (0.033)	0.047 (0.030)
한 달 평균 임금			0.100** (0.040)
종사상 지위(상용직 1)			0.275*** (0.035)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107** (0.044)
생산자 서비스업			0.095* (0.053)
유통 서비스업			0.031 (0.048)
개인 서비스업			-0.064 (0.057)
사회 서비스업			0.102 (0.066)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098 (0.087)
서비스·판매직			-0.008 (0.072)

〈표 3-6〉의 계속

	(1)	(2)	(3)
농림어업숙련직			0.002 (0.108)
기능·조작·조립직			-0.025 (0.058)
단순노무직			-0.007 (0.060)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5~9인			-0.004 (0.041)
10~29인			-0.023 (0.039)
30~99인			0.023 (0.047)
100~299인			0.180*** (0.060)
300인 이상			0.311*** (0.054)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7,222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3-6〉은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의 결정 요인을 회귀식 (3-1)을 통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상태 등 건강 요인만을 독립변수로 포함한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연령·성별·학력·결혼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추가한 모형이다. 모형 (3)은 건강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임금·종사상 지위·산업·직종·사업체 규모 등 재해 당시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를 추가하여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본 연구는 모든 독립변수를 포함한 모형 (3)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확률은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높았다. 단, 앞선 결과와 다르게 유배우일 때,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확률이 높았으나 재해 사업장의 특성과 직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으며, 연령별로는 40대에 비해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원직장 복귀 확률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제조업에 비해 건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확률이 낮았고 생산자 서비스업에 종사했던 근로자들의 복귀 확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봤을 때 5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했던 산재근로자들에 비해 100~299인, 300인 이상 등 고용규모가 큰 사업체에 재직하였던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노동시장 복귀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추정치의 크기도 작고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던 반면 원직장 복귀에 재해 당시 사업체의 규모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원직장 복귀에 따른 임금 및 종사상 지위 차이

〈표 3-7〉은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임금과 종사상 지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표본 수는 7,222개이며,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 받는 월평균 임금은 251만 원 정도였고 시간당 임금은 1.87만 원가량이 었다. 재해 당시 한 달 평균 임금이 269만 원임을 고려할 때 산업재해 이후 월평균 임금이 6.7%가량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 상용직인 비율은 59.6%, 재해 사업장에서의 상용직 비율이 63.3%로 임금과 더불어 직업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산재 이후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밖에 변수들은 원직장 복귀 결정 요인 분석의 기초통계량 〈표 3-4〉와 동일하다.

〈표 3-7〉 기초통계량 :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임금 및 종사상 지위 차이

	N=7,222		Mean	SD
종속변수	월평균 임금(재직 사업장, 만 원)		251.341	118.975
	시간당 임금(재직 사업장, 만 원)		1.872	2.395
	종사상 지위(재직 사업장, 상용직 1)		0.596	0.491
독립변수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408	0.492
	한 달 평균 임금(재해 사업장, 만 원)		269.119	111.414
	종사상 지위(재해 사업장, 상용직 1)		0.633	0.482
	연령	30세 이하	0.156	0.363
		40대	0.208	0.406
		50대	0.358	0.479
		60대 이상	0.278	0.448
	성별(남성 1)		0.831	0.374
	학력	중학교 이하	0.292	0.455
		고등학교	0.495	0.500
		대학 이상	0.213	0.409
	결혼 여부(유배우 1)		0.683	0.465
	장애 여부(장애 1)		0.089	0.285
	장애 등급	1~3급 (중증)	0.002	0.048
		4~7급	0.052	0.223
		8~9급	0.093	0.291
		10~12급	0.287	0.452
		13~14급	0.349	0.477
		무장해(장애 등급 없음)	0.216	0.412
	주관적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0.011	0.107
		좋지 않은 편	0.277	0.447
		좋음	0.673	0.469
		매우 좋음	0.039	0.194
	산업 분류 (재직 사업장)	제조업	0.309	0.462
		건설업	0.252	0.434
		생산자 서비스업	0.139	0.346
		유통 서비스업	0.118	0.323
		개인 서비스업	0.085	0.279
		사회 서비스업	0.097	0.295
	직종 분류 (재직 사업장)	관리·전문직	0.078	0.269
		사무직	0.056	0.231
		서비스·판매직	0.107	0.309
		농림어업숙련직	0.010	0.097
		기능·조작·조립직	0.496	0.500
		단순노무직	0.253	0.435
	사업체 규모 (재직 사업장)	5인 미만	0.208	0.406
		5~9인	0.205	0.404
		10~29인	0.244	0.429

〈표 3-7〉의 계속

	N=7,222	Mean	SD
	30~99인	0.165	0.372
	100~299인	0.075	0.263
	300인 이상	0.103	0.304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3-8〉과 〈표 3-9〉는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그 월평균 임금과 로그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원직장 복귀 여부를 관심변수로 하여 회귀식 (3-1)을 통해 각각 분석한 결과이다.

모형 (1)은 원직장 복귀 여부와 함께 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상태 등 건강 요인만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연령·성별·학력·결혼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이다. 모형 (3)은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를 모형 (2)에 추가로 포함한 모형이며, 모형 (4)는 건강 요인,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임금·종사상 지위·산업·직종·사업체 규모 등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와 더불어 재해 사업장에서의 임금을 통제하는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본 연구는 관심 변수와 함께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4)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월평균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표 3-8)는 건강 요인과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만을 통제했을 때(모형 (1))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20.5%가량 월평균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 재해 사업장에서의 임금 등을 추가로 통제할수록 격차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며, 모든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모형 (4))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하면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약 5.7%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및 원직장 복귀 확

를 분석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일수록 임금 수준이 높았다. 무엇보다도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등의 건강 상태는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일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 상용직일수록, 직종별로는 관리·전문직에서 다른 직종에 비해 월평균 임금이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현재의 임금이 더 높았다. 또한 재해 당시 임금이 높을수록 현재의 월평균 임금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표 3-9)도 원직장 복귀에 따른 임금 격차가 확인된다. 앞선 분석과 동일하게 인구·사회학적 변수,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 재해 사업장에서의 임금 등을 추가로 통제할수록 추정치의 크기는 작아졌으며, 모든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모형 (4))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하면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약 6.8%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월평균 임금으로 추정한 결과보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통제변수들의 추정치의 방향은 앞선 분석과 유사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약화되었고, 특히 월평균 임금에 주요한 결정 요인이었던 건강 측면 변수들의 유의성이 시간당 임금을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산재근로자들이 노동 시간 자체를 줄였기 때문에 노동 시간의 효과를 배제한 시간당 임금과 건강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도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표 3-10)는 원직장 복귀자들이 재취업자들에 비해 상용직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건강 요인과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만을 통제했을 때(모형 (1)) 원직장 복귀자가 재취업자에 비해 상용직일 확률이 약 36%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인구·사회학적 변수,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 재해 사업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등을 추가로 통제할수록 격차는 줄어들지만 모든 통제변수를 고려했을 때(모형 (4))에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와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가 상용직일 확률은 11%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임금과 종사상 지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이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에 비해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직업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월평균 임금 차이

	(1)	(2)	(3)	(4)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205*** (0.027)	0.163*** (0.024)	0.076*** (0.022)	0.057*** (0.016)
재해 사업장 한 달 평균 임금				0.547*** (0.030)
장애 여부(장애 1)	-0.080** (0.039)	-0.044 (0.036)	-0.047 (0.033)	-0.013 (0.031)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596*** (0.163)	0.720*** (0.187)	0.717*** (0.261)	0.690** (0.289)
8~9급	0.660*** (0.158)	0.841*** (0.184)	0.817*** (0.258)	0.805*** (0.286)
10~12급	0.662*** (0.157)	0.867*** (0.184)	0.834*** (0.258)	0.841*** (0.287)
13~14급	0.675*** (0.157)	0.900*** (0.184)	0.873*** (0.259)	0.887*** (0.287)
무장애	0.571*** (0.157)	0.839*** (0.184)	0.841*** (0.259)	0.869*** (0.287)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078 (0.100)	0.051 (0.095)	0.056 (0.081)	0.079 (0.076)
좋음	0.265** (0.106)	0.193* (0.102)	0.187** (0.086)	0.202** (0.081)
매우 좋음	0.284** (0.115)	0.167 (0.111)	0.150 (0.095)	0.191** (0.086)
연령 더미(Ref. 40대)				
30대 이하		-0.066** (0.033)	-0.058** (0.029)	0.014 (0.022)

〈표 3-8〉의 계속

	(1)	(2)	(3)	(4)
50대		-0.024 (0.030)	-0.001 (0.026)	-0.010 (0.020)
60대 이상		-0.290*** (0.036)	-0.186*** (0.031)	-0.140*** (0.025)
성별(남성 1)		0.422*** (0.031)	0.252*** (0.031)	0.051* (0.028)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98*** (0.034)	0.072** (0.029)	0.072*** (0.025)
대학 재학 이상		0.137*** (0.041)	0.090*** (0.034)	0.057** (0.028)
결혼 여부(유배우 1)		0.122*** (0.028)	0.096*** (0.024)	0.029 (0.020)
종사상 지위(상용직 1)			0.241*** (0.029)	0.227*** (0.025)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252*** (0.035)	0.148*** (0.029)
생산자 서비스업			-0.052* (0.031)	-0.024 (0.026)
유통 서비스업			-0.068** (0.030)	-0.038 (0.025)
개인 서비스업			-0.065 (0.041)	-0.052* (0.031)
사회 서비스업			-0.271*** (0.048)	-0.182*** (0.036)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080* (0.045)	-0.057* (0.031)
서비스·판매직			-0.172*** (0.046)	-0.104*** (0.035)
농림어업숙련직			-0.106 (0.076)	0.039 (0.059)
기능·조작·조립직			-0.057 (0.037)	-0.039 (0.026)
단순노무직			-0.256*** (0.041)	-0.154*** (0.030)

〈표 3-8〉의 계속

	(1)	(2)	(3)	(4)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5~9인			0.061** (0.029)	0.053** (0.025)
10~29인			0.081** (0.033)	0.074*** (0.027)
30~99인			0.137*** (0.032)	0.104*** (0.026)
100~299인			0.146*** (0.048)	0.128*** (0.038)
300인 이상			0.227*** (0.041)	0.119*** (0.034)
연도 및 지역 터미 표본 수	Yes 7,222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3-9〉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시간당 임금 차이

	(1)	(2)	(3)	(4)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089*** (0.024)	0.067*** (0.022)	0.077*** (0.022)	0.068*** (0.021)
재해 사업장 한 달 평균 임금				0.263*** (0.034)
장애 여부(장애 1)	-0.061** (0.031)	-0.050* (0.030)	-0.048* (0.027)	-0.032 (0.026)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047 (0.111)	0.091 (0.109)	0.100 (0.119)	0.087 (0.117)
8~9급	0.012 (0.107)	0.072 (0.106)	0.055 (0.117)	0.049 (0.115)
10~12급	0.015 (0.107)	0.084 (0.106)	0.074 (0.118)	0.077 (0.115)
13~14급	-0.018 (0.107)	0.061 (0.106)	0.054 (0.118)	0.060 (0.115)
무장애	-0.007 (0.107)	0.111 (0.107)	0.111 (0.117)	0.124 (0.115)

〈표 3-9〉의 계속

	(1)	(2)	(3)	(4)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022 (0.045)	-0.004 (0.041)	-0.009 (0.040)	0.002 (0.037)
중음	0.072 (0.046)	0.037 (0.042)	0.030 (0.041)	0.038 (0.038)
매우 좋음	0.088 (0.065)	0.065 (0.062)	0.060 (0.058)	0.080 (0.054)
연령 더미(Ref. 40대)				
30대 이하		-0.108*** (0.029)	-0.094*** (0.028)	-0.060** (0.027)
50대		0.005 (0.027)	-0.004 (0.025)	-0.008 (0.023)
60대 이상		-0.082*** (0.032)	-0.059* (0.030)	-0.037 (0.030)
성별(남성 1)		0.230*** (0.023)	0.160*** (0.028)	0.063** (0.026)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017 (0.027)	-0.007 (0.026)	-0.008 (0.026)
대학 재학 이상		0.040 (0.037)	0.049 (0.036)	0.034 (0.034)
결혼 여부(유배우 1)		0.060*** (0.022)	0.058*** (0.022)	0.025 (0.021)
종사상 지위(상용직 1)			-0.027 (0.024)	-0.034 (0.023)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113*** (0.033)	0.063** (0.031)
생산자 서비스업			-0.076** (0.037)	-0.063* (0.035)
유통 서비스업			-0.074* (0.039)	-0.060 (0.038)
개인 서비스업			-0.041 (0.042)	-0.035 (0.041)
사회 서비스업			-0.080 (0.050)	-0.037 (0.047)

〈표 3-9〉의 계속

	(1)	(2)	(3)	(4)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018 (0.057)	-0.006 (0.054)
서비스·판매직			-0.052 (0.047)	-0.019 (0.046)
농림어업숙련직			0.057 (0.170)	0.127 (0.160)
기능·조작·조립직			-0.023 (0.043)	-0.015 (0.040)
단순노무직			-0.125*** (0.045)	-0.075* (0.044)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5~9인			-0.012 (0.027)	-0.016 (0.027)
10~29인			0.021 (0.030)	0.018 (0.030)
30~99인			0.058 (0.039)	0.042 (0.037)
100~299인			-0.015 (0.036)	-0.023 (0.036)
300인 이상			0.098** (0.040)	0.046 (0.039)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7,222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3-10〉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른 종사상 지위 차이

	(1)	(2)	(3)	(4)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360*** (0.025)	0.342*** (0.025)	0.245*** (0.024)	0.110*** (0.020)
재해 사업장 종사상 지위 (상용직 1)				0.462*** (0.028)

〈표 3-10〉의 계속

	(1)	(2)	(3)	(4)
장애 여부(장애 1)	-0.024 (0.051)	0.013 (0.057)	-0.035 (0.058)	-0.010 (0.030)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042 (0.168)	-0.006 (0.208)	0.130 (0.197)	0.114 (0.166)
8~9급	-0.239 (0.173)	-0.156 (0.213)	0.055 (0.201)	0.036 (0.166)
10~12급	-0.165 (0.172)	-0.075 (0.213)	0.105 (0.203)	0.083 (0.167)
13~14급	-0.158 (0.172)	-0.071 (0.213)	0.113 (0.203)	0.089 (0.167)
무장애	-0.142 (0.173)	-0.091 (0.214)	0.113 (0.204)	0.110 (0.167)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061 (0.076)	-0.052 (0.063)	0.024 (0.056)	-0.014 (0.068)
좋음	0.025 (0.077)	-0.001 (0.063)	0.051 (0.057)	-0.000 (0.068)
매우 좋음	0.195** (0.084)	0.097 (0.070)	0.125** (0.063)	0.059 (0.072)
연령 더미(Ref. 40대)				
30대 이하		0.068* (0.036)	-0.016 (0.031)	-0.005 (0.027)
50대		-0.096*** (0.031)	-0.035 (0.028)	-0.023 (0.023)
60대 이상		-0.142*** (0.038)	-0.069** (0.032)	-0.015 (0.028)
성별(남성 1)		-0.086*** (0.032)	0.010 (0.034)	-0.035 (0.026)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141*** (0.034)	0.063** (0.029)	0.000 (0.022)
대학 재학 이상		0.238*** (0.039)	0.147*** (0.035)	0.024 (0.027)
결혼 여부(유배우 1)		0.078*** (0.028)	0.028 (0.025)	-0.013 (0.020)

〈표3-10〉의 계속

	(1)	(2)	(3)	(4)
재해 사업장 월평균 임금				0.177*** (0.019)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493*** (0.034)	-0.320*** (0.032)
생산자 서비스업			-0.080** (0.036)	-0.030 (0.029)
유통 서비스업			-0.073** (0.034)	-0.036 (0.029)
개인 서비스업			-0.103** (0.042)	-0.056* (0.032)
사회 서비스업			-0.249*** (0.048)	-0.110*** (0.037)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045 (0.053)	-0.017 (0.042)
서비스·판매직			-0.116** (0.045)	-0.079** (0.039)
농림어업숙련직			-0.372*** (0.111)	-0.218*** (0.067)
기능·조작·조립직			-0.186*** (0.037)	-0.101*** (0.032)
단순노무직			-0.286*** (0.039)	-0.161*** (0.036)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5~9인			0.112*** (0.031)	0.075*** (0.025)
10~29인			0.143*** (0.032)	0.083*** (0.024)
30~99인			0.155*** (0.036)	0.089*** (0.031)
100~299인			0.163*** (0.047)	0.118*** (0.039)
300인 이상			0.097** (0.043)	0.035 (0.037)

〈표 3-10〉의 계속

	(1)	(2)	(3)	(4)
연도 및 지역 더미	Yes			
표본 수	7,222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제4절 소 결

산재근로자들의 직업 복귀에 대한 관심은 질적인 영역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크게 원직 복귀와 타직 복귀(재취업), 두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원직장 복귀자는 직업 복귀 과정에서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타직장 복귀자는 사실상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상태에서 재취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에 원직장 복귀는 구직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타직장 복귀보다 좋은 고용조건을 확보하며, 산재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 복귀 과정에서 어려움을 덜 겪는 등 여러모로 더 나은 복귀로 간주한다(이승렬·이승욱, 2016; 이정화, 2017; 한기명·이민아, 2017).

이 장에서는 산재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 및 원직장 복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 요인을 확인하며, 원직장 복귀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및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성 비중이 매우 높고, 학력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대학 이상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추이를 보면, 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원직장 복귀자 비율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재취업자 비율은 증가한다. 연령별로 봤을 때, 원직장 복귀자들의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재취업자 비중은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 봤을 때,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재취업 등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높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낮았다. 장애 등급 유무별로 봤을 때, 장애 등급이 있는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비율과 재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재해 당시 임시·일용직이었던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매우 낮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재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반면 상용직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낮았다.

셋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확률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일수록 높았다. 무엇보다도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등의 건강 상태는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60대 이상 고령의 산재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노동시장 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확률은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높았다. 단, 앞선 결과와 다르게 유배우일 때,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확률이 높았으나 재해 사업장의 특성과 직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달리 원직장 복귀에 재해 당시 사업체의 규모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임금과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원직장

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약 5.7%, 6.8%가량 더 높았고, 이들이 상용직일 확률은 11%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에 비해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는 산업재해 이전 일자리 특성, 산재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 및 업종별 이질성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별 결정 요인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원직장 복귀자와 재취업자 간 격차를 확인하여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 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도 원직복귀를 지향한다. 1999년 12월 31일 개정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명시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산재보험법」 제75조의 2(직장복귀 지원)를 신설하고 재해 당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시행령」 제71조의 2(직장복귀 지원)에 직업 능력 평가 및 작업 환경 개선 여부 등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원직장에 복귀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 지원도 법제화하였다(김민호, 2023. 12. 12).

이렇듯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원직장 복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는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원직장 복귀자와 재취업자 간 격차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으며, 이 결과는 산재근로자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서는 ‘원직장 복귀’가 정책 목표가 아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중 일부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발

생하고 이들의 짧은 사업체 업력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원직 복귀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오로지 원직장 복귀라는 목표에만 얽매이거나 고용률 제고라는 양적 목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장복귀 경로가 산재근로자에게 사회로 되돌아가는 적절한 방식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이승렬·이승욱, 2016)’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아울러 연령, 건강 상태, 산재 당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결과가 상이함을 감안할 때,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제 4 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제1절 연구 배경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장할 뿐 아니라, 재해근로자가 재활을 통해 경제생활의 주체로서 노동시장에 복귀하도록 지원한다. 산재근로자의 경우 장애와 재화로 인적자본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노동시장 재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료 이후 직업 복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직업 복귀에 관한 연구는 크게 원직장 복귀와 재취업에 관심을 가져왔다. 원직장 복귀는 구직활동이 불필요하므로 산재근로자들이 요양 기간 동안 재활에 집중할 수 있고, 구직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소득상실 위험에서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박은주, 2018). 이은혜 외(2017)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삶의 만족도가 재취업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주로 어떠한 요인이 산재근로자를 원직장으로 복귀하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강동욱, 2017; 이준상, 2019). 재취업에 관한 연구는 임금근로 일자리로의 재취업뿐 아니라 비임금근로로의 재취업도 포괄한다(박수경 외, 2017; 배화숙, 2017; 박은주, 2018). 주로 인구사회적, 재해 관련 특성, 재해 당시 일자리 특성이 원직장 복귀, 재취업, 자영업 부문 진출

또는 비취업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연구들은 산재근로자들의 요양 종료 이후 직업 복귀 성공 여부에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 복귀 방향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을 확인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직업 복귀 이후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한 관심은 부재하다. 한기명·이민아(2017)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이후 고용유지 기간이 평균적으로 4년 미만이며, 복귀 형태에 따라 유지 기간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직장에 복귀한 경우가 재취업한 경우보다 고용유지 기간이 긴 편임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상진(2018)은 원직장에 복귀하여 3년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는 비율이 71%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원직장 고용유지율이 감소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박은주(2018)는 산재근로자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새로운 일자리로의 재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다양하여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넘게 걸리며 평균적으로는 약 16개월이 소요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첫 직장 복귀 또는 재취업 이후에도 상당수가 일자리 이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경로가 원직 복귀, 재취업, 비임금근로로 다양할 뿐 아니라 유지 기간도 상이하다는 것은 산재근로자가 첫 직장 복귀 및 이탈하는 과정 동안 경험하는 노동시장 이행 궤적이 다양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직업 복귀라는 하나의 이행만을 원직 복귀나 타직 재취업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즉, 기존 연구들은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중 ‘누가’ ‘어떠한 경로’로 ‘어떠한 시점’에 원직, 또는 타직으로 복귀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일자리 이행을 겪는지를 살펴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이동을 총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산재근로자들이 요양 종료 이후 어떠한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선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이행 특성 분석을 통해 원직 복귀, 타직으로 재취업,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등의 일자리 이동 경로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원직에 복귀한 경우와 타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들의 일자리 이동 경로 특성을 세분화하여 살펴본다. 산재근로자의 개인 및 일자리, 그리고 재해 특성에 따라 노동시장 이행 궤적

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2차 코호트 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선행 연구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연구는 주로 요양 종료 이후 직업 복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어 왔다. 사례조사를 통한 질적 연구도 존재하지만, 2013년부터 조사된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주를 이룬다. 직장 복귀의 형태는 원직장 복귀,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 비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그리고 미취업 상태로 구분된다. 이 중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으로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준상(2019)은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7)를 이용하여 상관관계와 ANOVA 분석을 통해 원직 복귀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학력 및 혼인상태 등의 인구학적 특성은 원직 복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상용직일수록, 평균 근로 시간이 짧을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노동조합이 있을수록, 지속근무 가능성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확률이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재 당시 직장의 근로환경이 좋을수록 원직 복귀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강동욱(2017)은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의 1-4차 자료를 바탕으로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복귀의 영향 요인을 Cox 회귀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산재 원인이 사고보다 질병일수록, 요양 기간이 짧을수록 원직장 복귀 가능성이 높았다. 산재 당시 직업의 특성 요인으로서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상용직일수록, 건설업일수록 원직장 복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타직장 복귀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산재 원인이 질병일수록 타직장으로 복귀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훈련을 받을수록, 산재 당시 직장의 근속기간이 짧을수록, 임금수준이 낮을수

록, 임시·일용직일수록, 직장 내 노조가 없는 경우 타직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김자영(2022)은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의 2차 조사(2019년) 자료를 이용하여 원직장 복귀, 재취업, 그리고 미취업의 결정 요인을 다항 로짓 회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연령이 적을수록, 요양 기간이 짧을수록, 현재 업무수행 능력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업 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미취업보다 원직장 복귀 또는 타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없을수록 미취업보다 원직장 복귀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러한 요인은 타직으로 복귀 가능성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들 결과는 임금근로자로서 원직장 복직과 타직장으로서의 재취업에 학력, 연령, 건강 상태, 산재 원인, 요양 기간의 개인적 요인과 산재 당시 직장의 근로 여건이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보여준다.

임금근로자로서의 직장 복귀뿐 아니라 비임금근로도 포함하여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유형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배화숙(2017)은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 1~3차(2013~2015)자료를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을 횡단면패널 다항 로짓 분석하였다.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현재 업무수행 능력이 낮을수록, 산재 전 직장 근속기간이 길수록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의 재취업보다 비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컸다. 또한 조사기간 동안 경제활동 상태 변화를 1번 겪은 경우가 전체 산재근로자의 31.4%, 2회는 13.5%로 나타났다. 1년 단위별로 원직장 복귀자가 원직장을 유지할 확률은 88.1%, 재취업자가 이를 유지할 확률은 88.9%로 나타나 상당수가 짧은 기간 안에 일자리 이동을 경험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 박수경 외(2017)도 비임금근로자를 포함한 직업 복귀 유형의 결정 요인을 다항 로짓 분석하였다. 남성일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60대 이상의 고연령보다 30대 이하일수록 미취업 상태보다 비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요양 기간이 6개월 미만일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비경제활동 및 실업자보다 비임금근로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부분의 직장 복귀 연구가 요양이 종료된 이후 직장 복귀 여부에 관심을

가졌지만, 몇몇 연구는 복직한 일자리의 고용유지 요인을 분석하며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에 관한 종단적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상진(2018)은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의 1-4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년 차 조사 당시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복귀 이후 3년간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하였다. 1년 후 고용유지율은 84%, 2년 후에는 76%, 3년이 지난 시점에는 71%로 나타났으며, 원직장 이탈 위험률 영향 요인 분석 결과, 학력이 낮을수록,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장애가 있을수록, 산재가 발생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복귀하는 데 걸린 기간이 짧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심리상담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원직장 복귀 지원 및 상담 안내, 합병증 등 예방관리 지원 안내, 재활스포츠 안내 등을 받을수록 이탈 위험이 낮았다. 한기명·이민아(2017)도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1-4차 조사 동안 원직장 복귀와 타직 복귀를 한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 기간을 분석하였다. 원직에 복귀한 경우 평균적으로 46.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였으며,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한 경우 34.2개월로 나타났다. 또한 원직에 복귀한 경우 평균적으로 0.33회의 실업을 경험하였고, 타직 복귀의 경우에는 이보다 2배 더 많은 0.78회의 실업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을 빈번하게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유지 기간을 종속변수로 한 Cox 비례위험모형 분석 결과는 복귀 유형에 상관없이 직업 복귀에 걸린 시간이 길수록 고용을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충분한 치료 기간과 복귀 기간을 가졌을 때 지속적인 고용유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산재 당시 일자리 특성으로 상용직인 경우, 사업장의 규모가 클수록 원직 복귀 시 고용유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장애 등급과 건강 특성, 재활서비스 및 교육훈련은 타직 복귀자의 고용유지에 긍정적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들 연구는 재해 당시 근로환경, 그리고 재해 이후 일자리의 소득 변화, 장애 정도, 제도 이용 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나, 직업 복귀 이후 현재 일자리에서의 종사상 지위 등의 고용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않았다. 특히, 원직 복귀자의 재해 당시 근로환경이 복직 이후 고용유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은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 여건이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에 있어 중요한 영향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요약하자면, 현재까지의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를 주제로 한 연구들은 요양 종료 이후 첫 직장 복귀 방향과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산재 근로자들의 복직 이후 고용유지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할 뿐 아니라 빈번한 실업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첫 직장 복귀 이후 노동 시장에서의 일자리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동태적 분석은 부재하다.

둘째, 산재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직장 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현재 일자리에서의 근로환경 요인에 대한 관심이 부재하다. 산재 당시 일자리의 안정적 고용 특성이 원직장 복귀 및 고용유지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확인하였지만, 현재 시점의 고용 특성이 어떠한지는 살펴보지 않고 있다. 특히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산재 당시의 근로환경과 유사할 가능성이 크지만, 타직으로 복귀한 경우 현재 일자리의 고용 특성은 일자리 이행에 있어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동태적 관점으로 산재근로자의 일자리 변화 궤적을 살펴보고, 직업 복귀 이후 현재 일자리의 고용 특성을 반영하고자 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분석자료 및 방법론

본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1차와 2차 코호트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사용한다. 산재보험패널조사는 산재 요양 종결자를 5년간 추적 조사하여, 산재근로자의 경제활동 상태와 일자리 변화, 건강과 생활, 산업재해 정보 등을 담고 있다. 1차 코호트는 2013년 시작되어 2017년 완료되었으며, 2차 코호트는 2018년 시작되어 2022년에 조사가 완료되었다. 현재 시점에 공개된 가

장 최신 데이터는 2차 코호트의 4차 조사인 2021년 조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노동시장 이행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다. 산재근로자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개별 산재근로자들의 일자리 변화를 동태적으로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최근으로 올수록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2013년부터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까지, 즉, 1·2차 코호트 자료를 모두 사용한다. 1차 코호트의 경우 5년까지 추적할 수 있지만, 2차 코호트 자료는 4년까지만 추적할 수 있다. 두 코호트 자료에 같은 관측 기간을 적용하기 위해 1차와 2차 코호트의 요양 종결자를 대상으로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분석한다.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직업 복귀는 원직장으로의 복귀와 타직장으로의 재취업으로 구분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특성을 살펴본 뒤, 원직장 복귀와 타직장 재취업을 구분하여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의 특성을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전체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 분석 대상은 1차와 2차 코호트 조사에서 분석에 필요한 4년간의 일자리 정보를 가진 2,964명이 4년간 만들어 낸 16,988개의 관측치(person-year observations)이다. 직장 복귀 유형별 세분화된 분석은 요양 종료 이후 관측 기간인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노동시장에 복귀하여 일자리를 가진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원직장 복귀 분석의 대상은 요양 종료 이후 처음 복귀한 일자리가 원직장인 산재근로자 1,321명이 만들어 낸 5,860개의 관측치이다. 타직장으로 복귀 분석의 대상은 요양 종료 후 처음 복귀한 일자리가 원직장과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인 산재근로자 1,694명이 만들어 낸 7,808개의 관측치이다.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총체적(holistic)으로 분석하기 위해 사건배열분석(sequence analysis)을 이용한다. 사건배열분석은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료 이후 관측이 시작된 시점부터 4년까지 일자리 변화를 연속적인 사건으로 나열하여 패턴의 특성을 해석한다. 이는 기존의 일자리 이행분석에서 살펴보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원직 복귀 또는 타직 재취업 이행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사건으로서 원직 복귀→타직 재취업→실업→비경제활동 상태 등 일자리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관찰하면서, 변화 경로 특성을 총체적으로 관측하는 것이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이용하여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들을 유형화한다. 이 두 방법을 이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료 이후 노동시장 일자리 변화 배열을 유형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사건배열분석에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지위는 원직장 복귀, 타직으로 재취업,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로 총 6가지로 구분된다.

사건배열분석의 첫 번째 단계는 산재근로자 개인들의 요양 종료 이후 4년간 만들어 낸 일자리 배열 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최적일치법(Optimal Matching Algorithm)을 이용하여 배열 쌍 간의 거리를 바탕으로 유사성을 측정한다. 배열 쌍들이 동일한 상태의 배열이 되도록 하기 위해 각 시점에서 대체, 삭제 또는 삽입 작업을 통해 배열전환을 수행한다. 이러한 작업에 가장 적은 비용이 수반되는 조합을 찾는 방법이 최적일치법이며, 배열전환에 드는 비용이 적을수록 배열 쌍 간의 유사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군집분석은 Wards 알고리즘으로 사용 군집을 형성하였다. 이는 군집 간의 분산은 최대화하며 군집 내 분산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동질적인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생성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자들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적절한 군집 수를 선택하기 위해 Calinski-Harabasz index를 이용한다. 배열분석과 군집분석은 stata의 SADI 패키지를 이용한다.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원직 복귀자, 그리고 타직 재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와 일자리, 재해 및 건강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Calinski-Harabasz의 결과,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는 4개(Pseudo F=2832.96), 또는 5개(Pseudo F=2634.94)의 군집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에 가장 적합한 군집 수로 나타났다. 4개의 군집의 경우 요양 종결 후 비경제활동 상태를 경험한 뒤 타직으로 재취업 한 경우를 포함하지 못해 5개의 군집을 선택하였다. 원직 복귀의 경우 3개(Pseudo F=760.89), 타직 복귀의 경우 4개(Pseudo F=742.64)의 군집이 적합한 군집으로 나타났다.

2. 변수 측정

사건배열분석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는 경제활동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년 단위로 측정되는 현재 경제활동 상태 정보를 바탕으로 원직 복귀자, 타직으로 재취업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실업자, 비경제활동 상태 등 총 6가지 상태로 구분하였다.

다항로짓 회귀분석은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원직 복귀자, 타직 재취업자로 구분하여 각각 수행한다. 원직 복귀자의 경우 관측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원직에 복귀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타직 재취업자의 경우 관측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개인의 인구학적 특성, 제도 이용 특성, 장애 및 건강 특성, 산재 당시 일자리 특성, 직업력 특성을 주요 독립변수로 구성한다. 특성별 변수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1〉 분석 대상 기술통계

변수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원직 복귀자	타직 재취업자
성별	0. 남성	82.4	83.4	82.5
	1. 여성	17.5	16.5	17.4
연령 더미	1. 30대 이하	14.2	17.7	14.1
	2. 40대	19.8	26.0	19.1
	3. 50대	33.3	35.0	35.3
	4. 60대 이상	32.6	21.2	31.3
혼인상태	1. 미혼	14.2	12.3	15.6
	2. 혼인	69.0	76.4	64.5
	3. 별거	1.6	1.2	1.8
	4. 이혼	10.5	6.9	13.2
	5. 사별	4.5	3.0	4.7
최종학력	1. 무학	3.3	1.8	3.4
	2. 초졸	16.0	10.3	15.8
	3. 중졸	18.9	14.0	20.0
	4. 고졸	44.8	50.9	44.3
	5. 대졸 이상	16.7	22.8	16.3
직업재활서비스	0. 미이용	85.4	89.4	83.8
	1. 이용	14.5	10.5	16.1
사회재활서비스	0. 미이용	79.9	82.9	79.5
	1. 이용	20.0	17.0	20.4

〈표 4-1〉의 계속

변수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원직 복귀자	타직 재취업자
산재 유형	1. 업무상 사고 2. 업무상 질병 3. 출퇴근 재해	93.3 6.6 0.2	91.3 8.5 0.1	95.4 4.2 0.2
요양 기간	1. 3개월 이하 2. 3~6개월 3. 6~9개월 4. 9개월~1년 이하 5. 1년~2년 이하 6. 2년 초과	16.8 38.9 22.9 7.5 8.9 4.6	22.1 42.9 20.0 6.2 6.6 1.1	16.8 41.9 24.9 7.9 6.7 1.4
장해 등급	0. 장해등급 없음 1. 장해등급 있음	18.2 81.8	22.5 77.4	18.4 81.5
요양 종결 직후 업무수행 능력	0점(완전 상실) - 10점	5.75점	6.57	5.86
산재 직장 근로기간	1. 1개월 미만 2. 1~2개월 3. 2~3개월 4. 3~4개월 5. 4~5개월 6. 5~6개월 7. 6개월~1년 8. 1~2년 9. 2~3년 10. 3~4년 11. 4~5년 12. 5~10년 13. 10~20년 14. 20년 이상	28.8 10.0 5.3 2.4 2.5 3.5 10.3 8.9 5.3 3.9 2.6 7.7 5.3 2.8		
요양 종료 후 바로 복귀 여부	1. 예 2. 아니오 3. 요양 중 복귀		64.2 20.7 15.0	
종사상 지위	1. 상용직 2. 임시직 3. 일용직	57.0 11.9 30.9	83.0 6.8 10.1	38.7 20.3 40.8
원직장의 월평균 임금			263만 원	212만 원
원직장의 종사자 규모	1. 5인미만 2. 5~9인		17.3 19.7	33.7 24.4

〈표 4-1〉의 계속

변수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원직 복귀자	타직 재취업자
원직장의 종사자 규모	3. 10~29인		27.4	23.3
	4. 30~99인		19.2	12.9
	5. 100~299인		7.9	3.9
	6. 300~999인		4.3	1.2
	7. 1,000인 이상		3.85	0.3
일자리 만족도	1점(매우 만족) 5점(매우 불만족)		2.53점	2.71
재해 발생 직장 첫 일자리 여부	0. 첫 일자리 1. 첫 일자리 아님	19.4 80.5		
재해 직전까지 경험한 일자리 수		1.65개		
조사 코호트	0. 1차 코호트	37.4	42.7	39.3
	1. 2차 코호트	62.5	57.2	60.6
total person-year observations		16,908	5,484	6,758

주 : 다항로짓분석에 사용된 설명변수들의 결측치로 인해 배열분석 유형화에 사용된 관측치와 차이를 보임.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6년), 2차 코호트(2018~2021년).

제4절 분석 결과 :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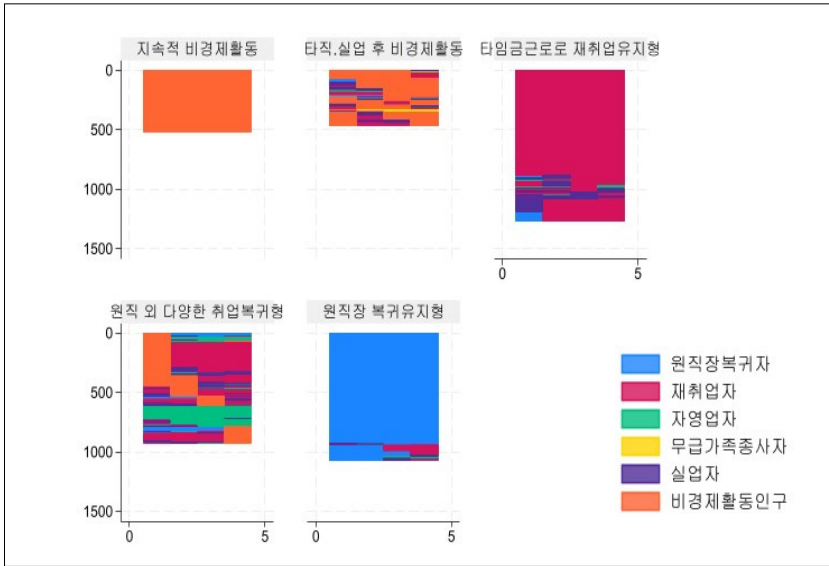
1.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종결 이후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의 유형화 결과는 [그림 4-1]과 같으며, 5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어 나타난다.

첫째,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은 요양이 종결된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하여 4년간 재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둘째, “원직장 복귀유지형”으로 요양 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일 자리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그림 4-1]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6년), 2차 코호트(2018~2021년).

셋째,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으로 비경제활동 상태, 타직으로 재취업, 원직장 복귀, 그리고 자영업 간의 이동이 활발한 유형이다. 요양 종결 이후 비경제활동 상태였다가 타직장으로 재취업, 원직장으로 복직한 이후 비경제활동 상태로 변화, 실업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 그리고 종결 이후 자영업자가 된 경우 등 재취업 경로가 다양하다. 종결 이후 4년의 기간 동안 비경제활동 상태에 놓이기도 하지만 복귀한 일자리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유형은 세 번째로 큰 규모를 차지한다.

넷째, “지속적 비경제활동” 유형은 요양 종결 이후 직업에 복귀하지 않고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데, 네 번째 비중을 차지한다.

다섯째, “타직 재취업 또는 실업 이후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종결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거나 실업 기간을 짧게 거친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된다. 이 유형은 전체 관측기간인 요양 종결 후 4년 동안 직업 복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짧고 비경제활동 상태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종결 이후 직업 복귀와 비경제활동 상태를 둘 다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원직 외 다양한 취업유형과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은 유사하다.

하지만 전자는 직업 복귀를 위해 비경제활동 상태를 겪는 과정인 반면 후자는 직업 복귀 이후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2. 유형의 결정 요인

〈표 4-2〉는 원직장 복귀유지형을 준거집단으로 하여 산재 종결자의 개인 특성 및 산재 당시와 현재 일자리 특성이 어떻게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오즈비(odds ratio)를 보여준다.

산재 종결자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보면, 남성일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유형이 될 오즈가 2.9배, 타직 복귀·실업 후 비경제활동이 2.43배, 타임금근로 재취업 유지형이 1.17배, 그리고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오즈가 1.60배 증가하였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직장 복귀유지보다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타직 복귀 경로와 원직 복귀 경로에 미친 연령별 영향력은 차이를 보였다. 은퇴 연령대인 60대 이상 산재 종결자는 30대에 비해 원직장 복귀유지형보다 다른 이행 궤적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60대는 원직장 복귀유지형보다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30대에 비해 13배 증가하였고, 타직으로 복귀와 실직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은 3.6배,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1.25배 높았다. 40대와 50대의 경우에도 30대에 비해 원직장 복귀유지형보다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 가능성이 높긴 하였지만, 타직으로 복귀보다는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40대는 30대에 비해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 상태보다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1.36배 높았고, 타임금근로 재취업 유지형보다는 1.47배,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보다는 1.36배 높았다. 50대도 30대에 비해 타직으로 복귀 유형보다 원직장 복귀유지형의 가능성이 높았다. 즉, 30대와 비교하면 고령 산재 종결자는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하는 일자리 경로를 가지기보다 타직,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경로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년 산재 종결자는 타직으

로 복귀보다 원직으로 복귀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중장년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원직 복귀 후 이를 유지하는 경로보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혼 유무는 산재 종결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한 번이라도 결혼을 한 경우 미혼보다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혼인상태에 있는 경우 미혼에 비해 원직장 복귀유지보다 지속적 비경제활동이 될 가능성이 73% 감소하였다. 별거의 경우에는 76%, 이혼은 71%, 사별의 경우에는 74%로 감소하였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고졸인 경우 무학에 비해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보다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2.6배 증가하였고,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보다 원직장 복귀유지가 될 가능성이 2.0배 증가하였다. 대졸 이상의 학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기보다 원직장 복귀 후 유지할 가능성이 4.1배 높았고,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유형보다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1.5배 높았다.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은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이 될 가능성이 1.88배, 타임금근로로의 재취업유지형은 1.15배,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1.82배 높았다. 사회재활서비스를 받은 경우는 원직으로 복귀하여 유지하기보다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1.43배 증가하였다. 산재유형이 업무상 사고일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낮았다.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일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2.44배 증가하였고,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도 1.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재 요양 기간이 길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비경제활동 상태 및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장해등급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을 하기보다 원직장 복귀유지 가능성이 1.21배 증가하였으며, 원직 복귀유지보다 타임금근로로 재취업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도 1.12배 증가하였다.

〈표 4-2〉 전체 산재 종결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결정 요인(준거집단 : 원직장
복귀유지형)

	지속적 비경제활동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	원직 외 다양한 취업 복귀형
	exp(b)	exp(b)	exp(b)	exp(b)
성별(Ref. 남성)				
여성	2.91** (0.27)	2.43** (0.20)	1.17** (0.08)	1.60** (0.12)
연령(Ref. 30대 이하)				
40대	1.35* (0.23)	0.73** (0.10)	0.68** (0.05)	0.73** (0.07)
50대	2.49** (0.42)	1.05 (0.14)	0.73** (0.06)	0.64** (0.06)
60대 이상	13.47** (2.38)	3.64** (0.51)	0.98 (0.09)	1.25** (0.13)
혼인상태(Ref. 미혼)				
혼인	0.27** (0.03)	0.33** (0.04)	0.70** (0.05)	0.61** (0.05)
별거	0.24** (0.07)	0.42** (0.10)	0.39** (0.09)	0.70* (0.15)
이혼	0.29** (0.05)	0.42** (0.06)	0.80** (0.09)	0.72** (0.08)
사별	0.26** (0.05)	0.47** (0.09)	0.87 (0.14)	0.79 (0.13)
학력(Ref. 무학)				
초졸	0.69** (0.13)	0.84 (0.16)	1.26 (0.23)	1.38* (0.26)
중졸	0.54** (0.10)	0.76 (0.14)	1.13 (0.20)	1.29 (0.24)
고졸	0.38** (0.07)	0.48** (0.09)	0.91 (0.16)	0.79 (0.14)
대졸 이상	0.24** (0.05)	0.32** (0.07)	1.04 (0.19)	0.66** (0.13)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1.12 (0.12)	1.88** (0.17)	1.15* (0.09)	1.82** (0.14)
사회재활서비스 이용	0.89 (0.08)	1.43** (0.12)	1.09 (0.07)	1.06 (0.07)

〈표 4-2〉의 계속

	지속적 비경제활동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	원직 외 다양한 취업 복귀형
	exp(b)	exp(b)	exp(b)	exp(b)
산재유형(Ref.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2.44** (0.31)	1.59** (0.21)	1.49** (0.15)	1.39** (0.15)
출퇴근 재해	0.90 (0.57)	0.95 (0.63)	2.52* (1.23)	2.24 (1.11)
요양 기간	2.10** (0.06)	1.36** (0.04)	0.99 (0.02)	1.18** (0.03)
장해 등급(1. 있음)	0.82* (0.09)	1.02 (0.09)	1.12* (0.07)	1.00 (0.07)
업무수행 능력	0.68** (0.01)	0.88** (0.01)	0.92** (0.01)	0.85** (0.01)
산재 직장 근로기간	0.81** (0.01)	0.83** (0.01)	0.81** (0.01)	0.83** (0.01)
산재 직장 종사상 지위(Ref. 상용직)				
임시직	2.46** (0.27)	2.08** (0.21)	2.26** (0.19)	1.85** (0.17)
일용직	2.36** (0.24)	1.99** (0.19)	2.45** (0.18)	2.18** (0.17)
재해 발생 직장 첫 일자리 여부(Ref. 첫 일자리)				
첫 일자리 아님	1.12 (0.12)	0.94 (0.09)	1.38** (0.11)	0.86* (0.07)
재해 직전까지 일자리 수	0.93** (0.03)	1.13** (0.03)	1.12** (0.03)	1.09** (0.03)
조사 코호트(Ref.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	2.66** (0.20)	2.25** (0.15)	1.36** (0.07)	1.79** (0.10)
cons	0.98 (0.28)	1.34 (0.34)	4.66** (1.01)	5.10** (1.16)
Log likelihood	-21318.54			
N	16,908			

주: ** p<0.05, * p<0.1.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6년), 2차 코호트(2018~2021년).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유지
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업무수행 능력이 1점 좋아질수록 지속적 비

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32% 감소하며, 타직·실업 후 비경제활동은 12%,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은 8%,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15% 감소하였다. 산재를 당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산재 당시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수록 복직하여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상용직에 비해 임시직이었던 경우 원직장에 복귀하여 유지하기보다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2.46배 증가하였고, 일용직의 경우 2.36배 증가하였다. 타임금근로로 재취업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은 임시직의 경우 2.26배, 일용직의 경우 2.45배 증가하였다. 재해 당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원직에 복귀하여 기존의 노동생애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재해 시점의 산재근로자의 직업력 특성은 산재 종결 이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재해 당시 일자리가 생애 첫 일자리가 아니었을 경우 타임금근로로 재취업하여 유지할 가능성이 1.38배 증가했지만,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14% 감소하였다. 재해 당시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았을 경우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기보다 원직장 복귀유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원직장으로 복귀하여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경우 타직장으로 재취업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 취득한 노동시장에서의 경력 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지며, 원직장을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 준다. 최근 조사 코호트로 올수록 원직장 복귀유지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제5절 분석 결과 : 원직장 복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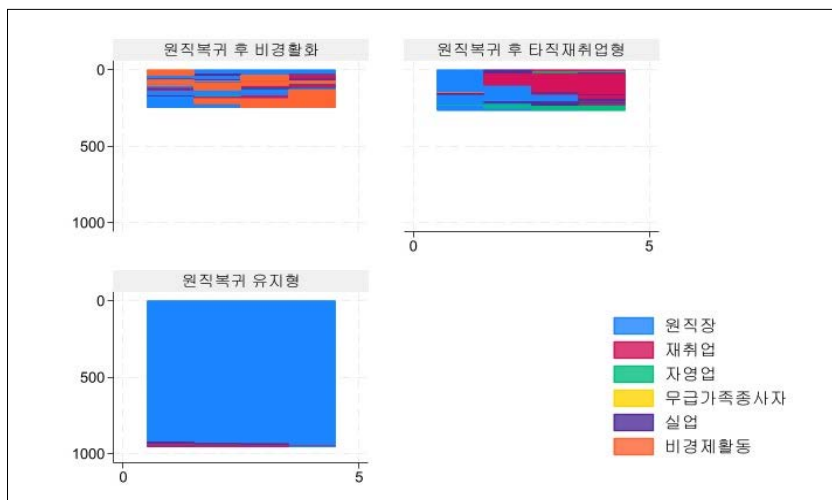
1.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산재 종결 이후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살펴보면 [그림 4-2]와 같으며,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어 나타난다.

첫째, “원직복귀 유지형”은 산재 종결 직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4년간 일자리 변화 없이 원직장을 다니고 있는 유형이다. 전체 원직장 복귀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둘째, “원직 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은 원직장 복귀 후 1~2년 사이에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 자영업 부문으로 이동, 또는 실업 상태로 전환 등 일자리 이동을 겪는 유형이다.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 번째와 비슷한 규모를 보인다.

[그림 4-2] 원직 복귀자의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6년), 2차 코호트(2018~2021년).

셋째, 이 유형은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는 경우이다. 산재 종결 직후 원직에 복귀한 지 1년 이후부터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로 있는 경우와 산재 종결 직후부터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는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이들은 관측기간 4년 동안 비경제활동화가 되어 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2. 유형의 결정 요인

원직 복귀자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산재 당시 일자리, 그리고 현재 일자의 특성이 어떻게 노동시장 이행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항 로짓 분석하였다. 원직장 복귀유지형을 준거집단으로 한 분석 결과는 <표 4-3>에 제시되어 있다.

원직 복귀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영향을 보면, 여성일 경우 원직장 복귀 후 유지보다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산재 종결 후 원직장에 복귀한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비경제활동화 유형이 될 가능성이 1.42배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직장 복귀 후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30대와 비교하여, 40대는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하는 일자리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49% 줄어들었고, 50대는 63%, 60대 이상은 53% 줄어들었다. 즉, 산재 종료 후 원직장에 복귀한 근로자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른 일자리를 찾기보다 복귀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혼인상태 또한 원직장 복귀 후 일자리를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미혼에 비해 한 번이라도 혼인을 한 경우 원직장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기보다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미혼과 비교하여, 결혼한 경우 원직 복귀유지형에 비해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41%, 별거는 65%, 그리고 이혼은 56% 감소하였다.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복귀한 일자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기보다 복귀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무학에 비해 중졸인 원직 복귀자는 일자리를 유지하기보다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45% 감소하였고, 고졸인 경우 50%, 대졸 이상인 경우

59% 감소하였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이용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원직장 복귀자에게 있어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자는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1.77배 증가하였고, 타직으로 재취업할 경로를 가질 가능성은 1.35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복귀한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한 원직장 복귀자는 타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 복귀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1.29배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은 원직장 복귀자에게 일자리 변화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사회재활서비스는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인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원직 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이 될 가능성이 35% 감소하였다. 산재 요양 기간이 길수록 원직장 복귀 후 이를 유지하기보다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원직장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기보다 복귀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요양 종결 직후 산재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타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종료 후 원직장에 바로 복귀하였는지에 따라 복귀한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달라졌다. 종료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복귀한 원직장 복귀자의 경우 비경제활동화 또는 타직으로 재취업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요양 종료 후 바로 복귀한 원직장 복귀자와 비교하여, 일정 시간이 소요된 복귀자는 복귀 이후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1.76배 증가하였고, 타직으로 이직하여 재취업할 가능성은 1.5배 증가하였다. 요양 중에 복귀한 경우에는 원직장 복귀유지형보다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1.46배 증가하였다.

복귀한 원직장의 근로 여건은 복귀한 일자리 유지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복귀한 원직의 종사상 지위는 복귀 이후 노동시장 이행 궤적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복귀한 원직이 상용직인 경우에 비해 임시직인 경우 복귀 후 타직으로 재취업형이 될 가능성이 1.46배 증가하였고, 일용

직인 경우 1.25배 증가하였다. 산재 종료 후 복귀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 안정성이 일자리 유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귀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타직장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복귀한 원래 직장의 일자리 만족도가 낮을수록 타직으로 재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일자리 만족도가 1점 낮아질수록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 유형이 될 가능성이 1.74배 증가하였고, 타직으로 재취업형이 될 가능성은 1.75배 증가하였다. 최근 조사 코호트로 올수록 원직장 복귀 후 유지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표 4-3〉 원직 복귀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결정 요인(준거집단 : 원직장 복귀유지형)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	원직 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
	exp(b)	exp(b)
성별(Ref. 남성) 여성	1.42** (0.18)	0.87 (0.11)
연령(Ref. 30대 이하) 40대	0.99 (0.17)	0.51** (0.06)
50대	0.91 (0.16)	0.37** (0.05)
60대 이상	2.47** (0.47)	0.47** (0.07)
혼인상태(Ref. 미혼) 혼인	0.59** (0.09)	0.83 (0.10)
별거	0.35** (0.15)	0.65 (0.23)
이혼	0.44** (0.10)	0.76 (0.14)
사별	0.75 (0.19)	0.71 (0.21)
학력(Ref. 무학) 초졸	0.92 (0.25)	1.65 (0.58)
중졸	0.55** (0.15)	1.45 (0.50)

〈표 4-3〉의 계속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	원직 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
	exp(b)	exp(b)
고졸	0.50** (0.14)	1.34 (0.45)
대졸 이상	0.41** (0.12)	0.93 (0.32)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1.77** (0.25)	1.35** (0.17)
사회재활서비스 이용	0.91 (0.11)	0.77** (0.09)
산재유형(Ref.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1.23 (0.21)	0.65** (0.11)
출퇴근 재해	0.00 (0.00)	0.00 (0.00)
요양 기간	1.15** (0.05)	0.97 (0.04)
장해 등급(1. 있음)	0.81* (0.09)	0.92 (0.09)
업무수행 능력	0.98 (0.02)	0.93** (0.02)
요양 종료 후 바로 복귀 여부(Ref. 복귀) 미복귀	1.76** (0.19)	1.50** (0.14)
요양 중 복귀	1.46** (0.18)	1.11 (0.12)
복귀 직장의 종사상 지위(Ref. 상용직) 임시직	1.00 (0.16)	1.46** (0.21)
일용직	0.90 (0.13)	1.25* (0.16)
원직장 월평균 임금	0.99** (0.00)	0.99** (0.00)
원직장의 종사자 규모	0.97 (0.03)	0.87** (0.02)
일자리 만족도	1.74** (0.13)	1.75** (0.11)

〈표 4-3〉의 계속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	원직 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
	exp(b)	exp(b)
조사 코호트(Ref.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	2.19** (0.22)	1.32** (0.11)
cons	0.12** (0.05)	0.38** (0.16)
Log likelihood	-4133.8799	
N	5,484	

주 : ** p<0.05, * p<0.1.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6년), 2차 코호트(2018~2021년).

제6절 분석 결과 : 타직장 재취업자

1.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산재 요양 종결 이후 4년 동안 한 번이라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여 살펴보면 [그림 4-3]과 같으며, 4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어 나타난다.

첫째,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바로 재취업하여 4년 동안 유지하는 유형이다. 요양 종결 직후 짧은 기간 동안 실업을 경험하고 재취업한 경우와 자영업 부문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한 경우도 존재한다. 하지만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의 재취업 상태를 유지한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유형이 전체 타직장 재취업 유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둘째,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으로 산재 요양 종결 이후 1년간의 비경제활동 상태를 경험한 뒤 타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비경제활동 상태 이후 실업 기간을 겪고 타직으로 복귀에 성공한 경우가 소수지만 존재한다. 다수는 비경제활동 상태 이후 바로 타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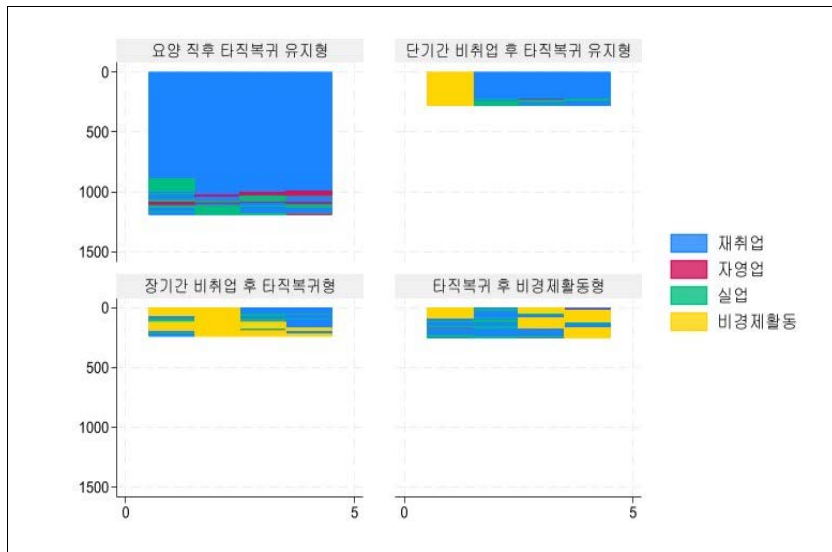
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다. 이들은 전체 타직 재취업 경험자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유형과 규모는 비슷한 수준이다.

셋째,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된 경우이다.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직업복귀를 한 유형이다.

넷째, “타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형”은 산재 종결 이후 바로 타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지만 2~3년 이후에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경로를 가지는 유형이다.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성공을 위해서는 요양 종결 이후 바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노동시장에서 지위를 이어가는 첫 번째 유형보다 비경제활동, 실업, 그리고 재취업 상태 간의 이행을 경험하는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그림 4-3] 타직장 재취업자의 4년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6년), 2차 코호트(2018~2021년).

2. 유형의 결정 요인

타직장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의 어떠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그리고 산재 당시 일자리 특성이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항 로짓 분석을 통해 살펴본다. 산재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을 준거집단으로 한 분석 결과는 <표 4-4>에 제시되어 있다.

타직으로 재취업을 경험하는 산재근로자는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기간 없이 타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1.68배 높고,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은 1.59배, 타직 복귀 후에 비경제활동형이 될 가능성은 1.56배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 고령은 30대에 비해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장기간 비취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2.33배 높고, 타직으로 재취업한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1.85배 높았다. 고령 재취업자 산재근로자의 경우 장기간의 비경제활동 상태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미혼에 비해 결혼을 경험하여 혼인상태를 유지하거나 이혼·사별 등을 한 경우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기간 없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을수록 산재 종결 이후 짧은 비경제활동 기간을 경험하고 다른 일자리로 재취업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학에 비해 중졸인 경우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1.98배 증가하였고 고졸 이상인 경우 2.08배 증가하였다. 하지만 높은 교육 수준은 장기간 비취업 상태를 경험하고 타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고졸인 경우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장기간 비취업 상태를 경험하고 재취업할 가능성을 55% 감소시켰고, 대졸 이상인 경우 57% 감소시켰다. 즉, 높은 교육 수준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타직으로 재취업 전 장기간의 비경제활동 상태 위험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다.

산재 요양하는 동안 직업재활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요

양 직후 재취업을 하기보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기간을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요양 기간이 길수록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장애 등급이 있는 경우 요양 직후 타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 단기간의 비취업 상태를 경험한 뒤 타직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을 1.62배 증가시켰다. 하지만 타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형이 될 가능성과 비교하면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동하기보다 타직 복귀 후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더 컸다. 즉, 장애 등급이 있는 타직 복귀자의 경우 요양 직후 타직 복귀보다 단기간의 비취업 기간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타직 복귀 후에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기보다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요양 종결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비취업 기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업무수행 능력이 1점 좋아지면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보다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11% 감소하였고,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4% 감소하였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재취업 이후 비경제활동화의 가능성이 낮았다.

재취업한 일자리가 임시직인 경우 상용직에 비해 타직을 유지하기보다 비경제활동형이 될 가능성이 1.21배 증가하였고, 일용직의 경우 1.4배 증가하였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을수록,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컸다. 최근 조사 코호트일수록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장기간의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이 될 가능성이 2.23배 높았고, 타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형이 될 가능성도 1.56배 증가하였다.

〈표 4-4〉 타직장 재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화 결정 요인(준거집단 :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	타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형
	exp(b)	exp(b)	exp(b)
성별(Ref. 남성)			
여성	1.68** (0.19)	1.59** (0.20)	1.56** (0.17)
연령(Ref. 30대 이하)			
40대	1.02 (0.16)	1.12 (0.24)	0.82 (0.14)

〈표 4-4〉의 계속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	타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형
	exp(b)	exp(b)	exp(b)
50대	0.94 (0.15)	1.40 (0.29)	0.87 (0.15)
60대 이상	1.00 (0.17)	2.33** (0.52)	1.85** (0.32)
혼인상태(Ref. 미혼)			
혼인	0.71** (0.09)	0.49** (0.08)	0.76* (0.11)
별거	1.42 (0.42)	0.39** (0.18)	2.96** (0.77)
이혼	0.78 (0.13)	0.49** (0.10)	0.80 (0.14)
사별	0.62** (0.15)	0.71 (0.17)	0.91 (0.20)
학력(Ref. 무학)			
초졸	1.84** (0.52)	0.81 (0.17)	0.81 (0.17)
중졸	1.98** (0.56)	0.70 (0.16)	1.40 (0.29)
고졸	2.08** (0.58)	0.45** (0.10)	1.09 (0.23)
대졸 이상	1.43 (0.43)	0.43** (0.11)	0.76 (0.18)
직업재활서비스 이용			
	1.70** (0.18)	1.63** (0.20)	1.36** (0.15)
사회재활서비스 이용			
	1.02 (0.10)	1.36** (0.16)	1.32** (0.13)
산재유형(Ref.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0.84 (0.17)	1.00 (0.22)	0.73 (0.15)
출퇴근 재해	0.29 (0.32)	0.96 (0.65)	0.44 (0.35)
요양 기간	1.21** (0.04)	1.27** (0.05)	1.20** (0.05)
장해 등급(1. 있음)			
	1.62** (0.22)	0.85 (0.11)	0.82* (0.09)

〈표 4-4〉의 계속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	타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형
	exp(b)	exp(b)	exp(b)
업무수행 능력	0.89** (0.02)	0.96** (0.02)	1.02 (0.02)
복귀 직장의 종사상 지위(Ref. 상용직)			
임시직	1.14 (0.13)	1.21 (0.15)	1.21* (0.13)
일용직	1.17 (0.12)	1.08 (0.13)	1.40** (0.14)
월평균 임금	0.99** (0.00)	0.99** (0.00)	0.99** (0.00)
종사자 규모	0.92** (0.03)	1.04 (0.04)	0.95 (0.03)
일자리 만족도	0.93 (0.06)	0.99 (0.07)	0.97 (0.06)
조사 코호트(Ref. 1차 코호트)			
2차 코호트	1.07 (0.09)	2.23** (0.24)	1.56** (0.13)
cons	0.29** (0.12)	0.20** (0.08)	0.22** (0.08)
Log likelihood	-6047.1382		
N	6,758		

주 : ** p<0.05, * p<0.1.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 코호트(2013~2016년), 2차 코호트(2018~2021년).

제7절 소 결

본 장에서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4년간 일자리 지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행 궤적 특성을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들의 원직 복귀, 타직으로 재취업,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간의 일자리 이동 경로 분석을 통해 전체 산재근로자들의 요양 종결 이후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원직 복귀와 타직 복귀로 구분하여 각각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특성을 살펴

보았다. 또한 산재근로자 개인, 재해, 그리고 일자리 특성이 이러한 노동시장 이행 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산재보험패널조사 1차(2013~2017)와 2차(2019~2021) 코호트를 이용하여 산재 요양 종결 이후 4년간의 일자리 정보를 가진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사건배열과 군집분석, 그리고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를 대상으로 한 요양 종결 이후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5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었다.

첫째, “타임금근로로 재취업유지형”은 요양이 종결된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하여 4년간 재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둘째, “원직장 복귀유지형”으로 요양 종결 이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일자리를 유지하는 유형이다.

셋째,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으로, 이 유형은 요양 종결 이후 비경제활동 상태 이후 타직장으로 재취업, 원직장으로 복귀 후 비경제활동 상태로 변화, 실업 상태에서 비경제활동 상태, 또는 자영업자로 재취업 등 재취업 경로가 다양하다. 요양 종결 이후 4년이라는 기간 안에 비경제활동 상태에 노출 위험도 있지만 새롭게 취업한 일자리를 2~3년 유지하는 특징을 가진다.

넷째, “지속적 비경제활동” 유형은 요양 종결 이후 직업에 복귀하지 않고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다섯째, “타직 재취업 또는 실업 이후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종결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을 하거나 실업 기간을 짧게 거친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는 유형이다. 전체 관측기간인 요양 종결 후 4년 동안 직업 복귀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이 짧고 비경제활동 상태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과 “타직 재취업 또는 실업 이후 비경제활동”이 요양 종결 이후 직업 복귀와 비경제활동 상태를 둘 다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하다. 하지만 전자는 직업 복귀를 위해 비경제활동 상태를 겪는 과정이지만 후자는 직업 복귀 이후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산재근로자의 어떤 개인적 특성이 요양 종결 이후 노동시장 이행 궤적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다항로지트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

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원직장 복귀유지보다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연령의 영향은 직업 복귀의 방향이 타직인지 원직인지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은퇴 연령대인 60대 이상 산재 종결자는 30대에 비해 원직장 복귀유지형보다 다른 이행 궤적 유형을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40대와 50대도 30대와 비교하면 원직장 복귀유지형보다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긴 하였지만, 타직으로 복귀보다는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높았다. 30대와 비교하면, 고령 산재 종결자는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하는 일자리 경로를 가지기보다 타직,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경로일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년 산재 종결자는 타직으로 복귀보다 원직으로 복귀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40~50대도 원직 복귀 후 이를 유지하는 경로보다 노동시장에 재진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혼하였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직업재활서비스와 사회재활서비스를 받을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직업재활서비스가 타직으로의 직업 복귀에 긍정적 영향 요인인 점은 강동욱(2017)의 결과와 유사하다. 산재유형이 업무상 질병일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산재 요양 기간이 길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비경제활동 상태 및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장애등급이 있는 경우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을 하기보다 원직장 복귀유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산재를 당한 직장에서 근속기간이 길수록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산재 당시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수록 복직하여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재해 당시 일자리의 안정성이 높았을수록 원직에 복귀하여 기존의 노동생애 패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들(강동욱, 2017; 이준상, 2019; 김자영, 2022)에

서 확인한 직업 복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재 특성 요인이 경력 단절 없이 원직에 복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재 당시 일자리 특성 외에 직업력도 산재근로자의 산재 종결 이후 노동시장 이행 궤적 경로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재해 당시 일자리가 생애 첫 일자리가 아니었을 경우 타임금근로로 재취업하여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감소시켰다. 재해 당시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은 경우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기보다 원직장 복귀유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원직장으로 복귀하여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경우 타직장으로 재취업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 취득한 노동시장 경력에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지며, 원직장을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준다.

산재 종결 4년간 한 번이라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되었다.

첫째, “원직 복귀유지형”은 산재 종결 직후 원직장에 복귀하여 4년간 일자리 변화 없이 원직장을 다니고 있는 유형이다.

둘째, “원직 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은 원직장 복귀 후 1~2년 사이에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 자영업 부문으로 이동 또는 실업 상태로 전환 등 일자리 이동을 겪는 유형이다.

셋째, “원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 유형으로 산재 종결 직후 원직에 복귀한 지 1년 이후부터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관측기간 4년 동안 비경제활동화가 되어 가는 경로를 보여준다.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여성일수록 원직장 복귀 후 유지보다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하였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기보다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은 원직장 복귀자의 일자리 이동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하는 반면, 사회재활서비스는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업무상 사고

에 비해 업무상 질병인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원직 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이 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산재 요양 기간이 길수록 원직장 복귀 후 이를 유지하기보다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장해 등급이 있는 경우 원직장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기보다 복귀한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요양 종결 직후 산재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타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종료 후 원직장에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경제활동화 또는 타직으로 재취업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요양 중 복귀자도 원직장 복귀유지형보다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복귀한 원직이 임시직이면 상용직에 비해 복귀 후 타직으로 재취업형이 될 가능성이 1.46배 증가하였고, 일용직이면 1.25배 증가하였다. 복귀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타직장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복귀한 원래 직장의 일자리 만족도가 낮을수록 타직으로 재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산재 종결 후 4년간 한 번이라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은 4가지로 요약되었다.

첫째,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바로 재취업하여 4년 동안 유지한다.

둘째,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유지형”으로 산재 요양 종결 이후 1년간의 비경제활동 상태를 경험한 뒤 타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유지한다.

셋째,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 복귀형”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2년 이상 장기화한 경우이다. 이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직업 복귀를 한 경우이다.

넷째, “타직 복귀 후 비경제활동형”은 산재 종결 이후 바로 타직으로 재취업에 성공하였지만 2~3년 이후에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하는 경로를 가지는 유형이다.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타직 복귀를 경험하는 산재근로자는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경험 없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

업에 성공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60대 이상 재취업 산재근로자는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장기간 비취업이 될 가능성이 높고, 타직으로 재취업한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미혼에 비해 결혼을 경험하여 혼인상태를 유지하거나 이혼·사별 등을 한 경우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기간 없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 수준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타직으로 재취업 전 장기간의 비경제활동 가능성을 줄였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직업재활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요양 직후 재취업을 하기보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기간을 가질 가능성을 증가시켰다. 요양 기간이 길수록 요양 직후 타직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줄었다. 장해 등급이 있는 타직 복귀자의 경우 요양 직후 타직 복귀보다 단기간의 비취업 기간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타직 복귀 후에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기보다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요양 종결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비취업 기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수록 재취업 이후 비경제활동화의 가능성이 낮았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을수록,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컸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경로와 고용유지 형태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 당시 일자리 및 재해 특성 외에도 산재 이전 근로자 개인이 축적해 온 노동시장 경력, 그리고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여건에 따라 다양해진다. 특히 산재 종결 이후 원직에 복귀하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직으로 재취업, 비임금근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로 이행이 활발하다는 점은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가 특정 시점의 지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직업 복귀 성공의 기준을 산재 종결 이후 특정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제 5 장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 분석

제1절 연구 목적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근로자의 삶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하며, 이로 인해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하락한다.

산재근로자는 예기치 못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득의 상실·감소, 신체 기능의 저하·훼손, 사회적 관계의 위축 등으로 고통을 받는데, 이들의 직업 복귀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누렸던 삶과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된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연구의 관심도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을 넘어 삶의 질 측면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산재근로자의 삶에 관한 연구는 주로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생활 만족도는 흔히 삶의 질을 측정하는 주관적 지표로 인식된다. 또한 일자리 만족도는 산재근로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일자리의 질을 대리하고, 이는 다시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생활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는 삶의 질을 대표하는 주요 지표로 여러 연구들에서 널리 활용된다.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혹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확인한 연구들이 일부 존재하지만, 이 둘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실증 분석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기존 연구들은 노동시장 이행 결과별 만족도를 산출하여 단순 비교하거나, 만족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주관적 건강 상태 등의 건강 요인이나, 산재 이전, 혹은 현재의 직업적 특성 등을 엄밀하게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복귀, 원직장 복귀,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등 노동시장 이행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각각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산재근로자들을 일상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2절 자료 및 방법

1.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짓 모형(Pooled ordered logit model)을 사용하며, 분석에 이용한 회귀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y_{it}^* = \alpha + \beta w_{it} + X_{it}\gamma + \tau_t + \nu_j + \epsilon_{it} \quad (5-1)$$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이며, 관심 변수인 w_{it} 는 산재근로자 i 의 t 년도 노동시장 복귀 여부, 원직장 복귀 여부, 종사상 지위 등을 나타낸다. X_{it} 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산재근로자들의 연령, 성별 등의 인구학적 특성 변수, 결혼 여부, 학력, 소득, 직종 등의 사회·경제적 특성 변수 및 장애 여부,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상태 등의 건강 관련 요인들의 벡터이다. τ_i 는 연도 고정효과, ν_j 는 지역 고정효과, ϵ_{it} 는 오차항을 의미하며, ϵ_{it} 는 로지스틱(logistic)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한다. 본 연구의 모든 분석은 개인 단위에서 군집화된 강건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를 적용하였고, 소득 변수는 자연로그 변환하였다.

종속변수 y_{it}^* 는 관측되지 않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이며, 관측 가능한 변수인 만족도는 순서가 의미를 지니는 범주형 변수로서, 식 (5-2)와 같이 표현된다.

$$y_i = \begin{cases} 1 & \text{if } y_i^* \leq \delta_1 \\ 2 & \text{if } \delta_1 < y_i^* \leq \delta_2 \\ 3 & \text{if } \delta_2 < y_i^* \leq \delta_3 \\ & \vdots \\ J & \text{if } \delta_{J-1} < y_i^* \end{cases} \quad (5-2)$$

식 (5-2)의 δ_1 에서 δ_{J-1} 는 절사점(cutoff point)으로 추정해야 할 모수이다.

2. 분석자료 및 대상

이 장에서 사용한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제2차 코호트 조사이며, 2023년 7월 현재 공개된 1-4차까지 자료를 풀링(pooling)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 두 개의 변수를 활용하였다. 생활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이다.

본 연구의 관심변수는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여부, 원직장 복귀 여부,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의 변화이다. 노동시장 복귀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은 전체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종사상 지위는 (산재 이후) 현재의 종사상 지위로써,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 등 5개로 구

분된다. 원직장 복귀 여부와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분석은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종사상 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여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의 변화를 더미로 4개의 더미로 구성하였다(‘상용직 유지’,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 ‘임시·일용직에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유지’).

통제변수로는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특성, 학력, 결혼 여부, 균등화 가구 소득, 주거지 소유 형태 등 사회·경제적 특성, 장애 여부,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상태 등 건강 관련 요인 등을 포함하였고,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임금, 종사상 지위, 산업, 직종, 사업체 규모 등 현재의 직업 및 사업장 특성을 추가로 고려하였다.

연령은 10세 연령 더미로 30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으로 구분되며, 학력은 중학교 졸업 이하(이하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재학 이상에서 졸업(이하 고등학교), 대학 재학 이상(이하 대학 이상) 등 세 개의 더미로 구성하였다. 장애 등급은 자료상의 분류에 따라 6개의 장애 등급(1~3등급, 4~7등급, 8~9등급, 10~12등급, 13~14등급, 무장애)으로 구분하였으며 1등급이 가장 중증 장애를 의미한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 좋음’, ‘매우 좋음’ 등 4개로 나뉜다. 산업은 제조업, 건설업, 생산자 서비스(사업, 금융, 보험, 부동산임대업), 유통 서비스(도소매, 운송, 통신업), 개인 서비스(숙박음식, 오락문화, 가사,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공공, 보건복지, 교육, 기타 사회서비스업) 등 6개 산업군으로 재분류하였고, 직종은 관리·전문직, 사무직, 서비스·판매직, 농림어업숙련직, 기능·조작·조립직, 단순노무직 등 6개의 직종으로 구분하였다. 사업체의 규모는 5인 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등 6개 규모로 분류하였다.

〈표 5-1〉은 전체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 및 종사상 지위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표본 수는 11,438개이다. 이 중 생활 만족도를 ‘보통’으로 응답한 표본의 비중은 48.9%로 가장 높았고, ‘만족’(39.0%), ‘불만족’(10.4%), ‘매우 불만족’(1.1%), ‘매우 만족’(0.7%) 순이었다.

〈표 5-1〉 기초통계량 : 노동시장 복귀 및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생활 만족도

	N=11,438		Mean	SD
종속변수	매우 불만족		0.011	0.104
	불만족		0.104	0.305
	보통		0.489	0.500
	만족		0.390	0.488
	매우 만족		0.007	0.084
독립변수	노동시장 복귀 여부(복귀 1)		0.674	0.469
	종사상 지위	상용직	0.376	0.484
		임시·일용직	0.255	0.436
		자영업자	0.039	0.194
		무급가족종사자	0.003	0.058
		미취업자	0.326	0.469
	연령	30세 이하	0.136	0.343
		40대	0.183	0.387
		50대	0.321	0.467
		60대 이상	0.359	0.480
	성별(남성 1)		0.822	0.382
	학력	중학교 이하	0.358	0.479
		고등학교	0.463	0.499
		대학 이상	0.179	0.383
	결혼 여부(유배우 1)		0.669	0.471
	장애 여부(장애 1)		0.137	0.344
	장해 등급	1~3급(중증)	0.025	0.157
		4~7급	0.083	0.275
		8~9급	0.108	0.310
		10~12급	0.278	0.448
		13~14급	0.313	0.464
		무장해(장해 등급 없음)	0.193	0.394
	주관적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0.069	0.253
		좋지 않은 편	0.354	0.478
		좋음	0.547	0.498
		매우 좋음	0.030	0.172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만 원)		2721.334	1754.656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570	0.495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원직장 복귀를 포함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한 비율은 67.4%였다. 연령은 60대 이상 비중이 35.9%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전체에서 차지하

는 비중도 작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 비율이 82.2%로 산재근로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그룹의 비율이 46.3%로 가장 컸고, 중학교 이하(35.8%), 대학 이상(17.9%) 학력순이었다. 유배우 비율은 66.9%였고, 장애를 가진 산재근로자들의 비중은 13.7%였다. 장애 등급으로 봤을 때에는 장애 등급이 없는 무장애 비율이 19.3%였으며, 장애 등급이 있는 산재근로자들 가운데는 중증 장애인 1~3등급의 비중이 가장 낮았고, 경증으로 올수록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 좋음 ’이 54.7%로 절반 이상이었고 ‘ 좋지 않은 편 ’이 35.4%이었으며, ‘ 매우 좋지 않음 ’, ‘ 매우 좋음 ’ 순이었다.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2,721만 원 정도였고,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57.0%로 전체 산재근로자들의 절반을 웃돌았다.

〈표 5-2〉에는 미취업자를 제외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표본 수는 7,708개이다. 이 중 일자리 만족도를 ‘ 보통 ’으로 응답한 표본의 비중은 47.0%로 가장 높았고, ‘ 만족 ’으로 대답한 표본의 비중은 44.3%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다음으로는 ‘ 불만족 ’(6.3%), ‘ 매우 만족 ’(1.9%), ‘ 매우 불만족 ’(0.6%) 순이었다.

미취업자를 제외하고 4개로 분류한 종사상 지위 중 상용직 비중이 55.8%로 가장 컸고, 임시·일용직이 37.9%로 노동시장에 복귀한 대부분의 산재근로자들이 임금근로자였다.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비중은 각각 5.8%, 0.5% 정도였다.

연령 비중은 50대 연령층이 35.2%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27.5%), 40대(21.4%), 30대 이하(15.9%) 순이었다. 남성 비율은 83.8%이었고, 학력별로 봤을 때,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그룹의 비율이 49.7%로 가장 컸고, 중학교 이하(29.0%), 대학 이상(21.3%) 순이었다. 유배우 비율은 68.6%였고, 장애를 가진 산재근로자들의 비중은 8.9%였다. 장애 등급으로 봤을 때에는 장애 등급이 없는 무장애 산재근로자 비율이 21.8%였고, 가장 경증 장애 등급인 13~14급의 산재근로자 비율이 34.8%였으며 중증으로 갈수록 그 비중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 좋음 ’이 67.2%로 절반을 훌쩍 넘었고, ‘ 좋지 않은 편 ’이 27.8%였으며, ‘ 매우 좋음 ’, ‘ 매우 좋지 않음 ’ 순이었다.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2,875만 원 정도였고,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57.9%로 절반 이상이였다.

〈표 5-2〉 기초통계량 : 종사상 지위별 일자리 만족도

N=7,708			Mean	SD
종속변수	매우 불만족		0.006	0.075
	불만족		0.063	0.242
	보통		0.470	0.499
	만족		0.443	0.497
	매우 만족		0.019	0.136
독립변수	종사상 지위	상용직	0.558	0.497
		임시·일용직	0.379	0.485
		자영업자	0.058	0.234
		무급가족종사자	0.005	0.071
	연령	30세 이하	0.159	0.366
		40대	0.214	0.410
		50대	0.352	0.478
		60대 이상	0.275	0.447
	성별(남성 1)		0.838	0.369
	학력	중학교 이하	0.290	0.454
		고등학교	0.497	0.500
		대학 이상	0.213	0.409
	결혼 여부(유배우 1)		0.686	0.464
	장애 여부(장애 1)		0.089	0.285
	장애 등급	1~3급(중증)	0.002	0.047
		4~7급	0.052	0.222
		8~9급	0.094	0.292
		10~12급	0.286	0.452
		13~14급	0.348	0.477
		무장애(장애 등급 없음)	0.218	0.413
	주관적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0.012	0.110
		좋지 않은 편	0.278	0.448
		좋음	0.672	0.470
		매우 좋음	0.039	0.193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만 원)		2875.195	1643.972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579	0.494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5-3〉은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 및 종사상 지위 변화와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기초통계량이다. 이 분석에서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제외하고, 임금근로자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표 5-3〉 기초통계량 : 원직장 복귀 및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만족도

N=7,222			Mean	SD
종속변수	생활 만족도	매우 불만족	0.002	0.044
		불만족	0.043	0.203
		보통	0.466	0.499
		만족	0.480	0.500
		매우 만족	0.009	0.097
	일자리 만족도	매우 불만족	0.005	0.071
		불만족	0.059	0.236
		보통	0.471	0.499
		만족	0.446	0.497
		매우 만족	0.019	0.135
독립변수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408	0.492
	종사상 지위 변화	상용직 유지	0.536	0.499
		상용직 → 임시·일용직	0.097	0.296
		임시·일용직 → 상용직	0.060	0.237
		임시·일용직 유지	0.307	0.461
	종사상 지위(재직 사업상, 상용직 1)		0.596	0.491
	한 달 평균 임금(재직 사업상, 만 원)		251.341	118.975
	연령	30세 이하	0.156	0.363
		40대	0.208	0.406
		50대	0.358	0.479
		60대 이상	0.278	0.448
	성별(남성 1)		0.831	0.374
	학력	중학교 이하	0.292	0.455
		고등학교	0.495	0.500
		대학 이상	0.213	0.409
	결혼 여부(유배우 1)		0.683	0.465
	장애 여부(장애 1)		0.089	0.285
	장해 등급	1~3급(중증)	0.002	0.048
		4~7급	0.052	0.223
		8~9급	0.093	0.291
		10~12급	0.287	0.452
		13~14급	0.349	0.477
		무장해(장해 등급 없음)	0.216	0.412

〈표 5-3〉의 계속

N=7,222		Mean	SD
주관적인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음	0.011	0.107
	중지 않은 편	0.277	0.447
	좋음	0.673	0.469
	매우 좋음	0.039	0.194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만 원)		2907.460	1633.188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583	0.493
산업 분류 (재직 사업장)	제조업	0.309	0.462
	건설업	0.252	0.434
	생산자 서비스업	0.139	0.346
	유통 서비스업	0.118	0.323
	개인 서비스업	0.085	0.279
	사회 서비스업	0.097	0.295
직종 분류 (재직 사업장)	관리·전문직	0.078	0.269
	사무직	0.056	0.231
	서비스·판매직	0.107	0.309
	농림어업숙련직	0.010	0.097
	기능·조작·조립직	0.496	0.500
사업체 규모 (재직 사업장)	단순노무직	0.253	0.435
	5인 미만	0.208	0.406
	5~9인	0.205	0.404
	10~29인	0.244	0.429
	30~99인	0.165	0.372
	100~299인	0.075	0.263
	300인 이상	0.103	0.304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표본 수는 7,222개이다. 이 중 생활 만족도를 ‘만족’으로 응답한 표본의 비중은 48.0%로 가장 높았고, ‘보통’으로 대답한 표본의 비중은 46.6%였으며, ‘불만족’(4.3%), ‘매우 만족’(0.9%), ‘매우 불만족’(0.2%) 순이었다. 반면 일자리 만족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표본의 비중이 47.1%로 가장 높았고, ‘만족’으로 대답한 표본의 비중이 44.6%로 그다음이었으나 두드러진 차이는 없었고, ‘불만족’(5.9%), ‘매우 만족’(1.9%), ‘매우 불만족’(0.5%) 순이었다.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 중 원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40.8%였고, 종사상 지위 변화를 4가지로 구분했을 때 ‘상용직 유지’,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 ‘임시·일용직에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유지’ 유형

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들의 비중은 각각 53.6%, 9.7%, 6.0%, 30.7%로 '상용직 유지', '임시·일용직 유지' 등 종사상 지위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전체의 84.3%가량인 것으로 확인되며, 이 중 '상용직 유지' 유형의 비중이 가장 컸다.

현재 재직 중인 사업장에서 받는 한 달 평균 임금은 251만 원 정도이고, 상용직 비중은 59.6%였다. 연령은 50대 비중이 35.8%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이 27.8%, 40대가 20.8%, 30대 이하가 15.6%였다. 남성 비율이 83.1%였고,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그룹의 비중이 49.5%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중학교 이하, 대학 이상 순이었다. 유배우 비율은 68.3%였고, 장애가 있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8.9%였다. 장애 등급으로 봤을 때에는 장애 등급이 없는 무장애 비율이 21.6%였으며, 장애 등급이 있는 산재근로자들 중에는 중증장애(1~3급) 비중이 가장 낮았고, 경증으로 올수록 비중이 높아졌다. 주관적인 건강 상태는 ' 좋음'이 67.3%로 절반 이상이었고 ' 좋지 않은 편'이 27.7%였으며, '매우 좋지 않음', '매우 좋음' 순이었다.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은 평균 2,907만 원 정도였고, 자가에 거주하는 비율이 58.3%로 절반 이상이었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30.9%가 제조업, 25.2%가 건설업에 종사하여 절반 이상이 제조업과 건설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기능·조작·조립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49.6%로 대부분이었고, 그다음으로는 단순노무직(25.3%)에 종사하고 있었다. 사업체 규모로는 10~29인 사업장 비율이 24.4%, 5인 미만 20.8%, 5~9인 20.5% 순으로 산재근로자들은 주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제3절 분석 결과

1. 생활 만족도 분석

〈표 5-4〉는 노동시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회귀식 (5-1)

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보고한다. 모형 (1)은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만을 통제한 모형, 모형 (2)는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에 건강 요인을 통제한 모형, 모형 (3)은 모형 (2)에 인구학적 특성과 사회·경제적 특성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본 연구는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3)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표 5-4〉 노동시장 복귀에 따른 생활 만족도

	(1)	(2)	(3)
노동시장 복귀 여부(복귀 1)	1.323*** (0.082)	0.844*** (0.082)	0.743*** (0.085)
장애 여부(장애 1)		-0.097 (0.204)	-0.085 (0.184)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521** (0.230)	0.787*** (0.236)
8~9급		0.565** (0.265)	0.855*** (0.261)
10~12급		0.586** (0.283)	0.937*** (0.279)
13~14급		0.581** (0.289)	0.945*** (0.285)
무장애		0.663** (0.293)	0.986*** (0.289)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1.385*** (0.183)	1.294*** (0.178)
좋음		2.372*** (0.193)	2.222*** (0.189)
매우 좋음		3.543*** (0.280)	3.320*** (0.283)
연령 더미(Ref. 30대)			
40대			-0.522*** (0.142)
50대			-0.629*** (0.134)
60대 이상			-0.394*** (0.144)

〈표 5-4〉의 계속

	(1)	(2)	(3)
성별(남성 1)			-0.412*** (0.101)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72*** (0.095)
대학 재학 이상			0.322** (0.133)
결혼 여부(유배우 1)			0.566*** (0.090)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			0.172*** (0.029)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448*** (0.079)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11,438		

주 : 1) *** $p < 0.01$, ** $p < 0.05$, * $p < 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분석 결과, 노동시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를 보였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할수록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이 미취업자들에 비해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 밖에 건강 요인은 노동시장 복귀뿐만이 아니라 생활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서, 장애 등급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 연령, 결혼 여부 등 인구학적 요인과 학력 수준, 가구소득, 주거지 형태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활 만족도와 상관계수가 확인된다. 여성, 30대 이하 연령, 유배우 일수록, 학력 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거주지가 자가일 때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표 5-5〉에는 종사상 지위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회귀식 (5-1)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종사상 지위는 산재 이후, 즉 현재의 종사상 지위로서,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미취업자 등 5개로 구분되는데, 산재근로자들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가장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미취업자, 임시·일용직 순이었다.

통제변수들의 효과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다. 건강 상태가 양호할수록, 여성, 30대 이하 연령, 유배우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5-5〉 종사상 지위에 따른 생활 만족도

	(1)	(2)	(3)
종사상 지위(Ref. 상용직)			
임시·일용직	-0.642*** (0.089)	-0.540*** (0.091)	-0.350*** (0.093)
자영업자	-0.311 (0.211)	-0.275 (0.201)	-0.138 (0.209)
무급가족종사자	-2.058*** (0.318)	-1.287*** (0.476)	-1.110* (0.576)
미취업자	-1.592*** (0.093)	-1.084*** (0.094)	-0.915*** (0.098)
장애 여부(장애 1)		-0.102 (0.209)	-0.097 (0.189)
장해 등급(Ref. 1~3급)			
4~7급		0.510** (0.232)	0.762*** (0.237)
8~9급		0.611** (0.266)	0.855*** (0.263)
10~12급		0.611** (0.286)	0.918*** (0.283)
13~14급		0.608** (0.293)	0.929*** (0.289)
무장해		0.671** (0.297)	0.962*** (0.293)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표 5-5〉의 계속

	(1)	(2)	(3)
좋지 않은 편		1.399*** (0.183)	1.309*** (0.179)
좋음		2.345*** (0.193)	2.223*** (0.189)
매우 좋음		3.454*** (0.283)	3.296*** (0.285)
연령 더미(Ref. 30대)			
40대			-0.519*** (0.143)
50대			-0.599*** (0.135)
60대 이상			-0.350** (0.147)
성별(남성 1)			-0.394*** (0.101)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35** (0.096)
대학 재학 이상			0.252* (0.135)
결혼 여부(유배우 1)			0.547*** (0.091)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			0.166*** (0.029)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423*** (0.079)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11,438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5-6〉에는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 직장 복귀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모형 (1)은 원직장 복귀 여부와 함께 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주관적 건강 상태 등 건강 요인만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모형이고, 모형 (2)는 모형 (1)에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을 추가로 통제한 모형이다. 모형 (3)은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를 모형 (2)에 추가로 포함한 모형이며, 모형 (4)는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와 더불어 임금과 종사상 지위를 통제하는 등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모든 변수를 포함한 모형이다. 본 연구는 관심 변수와 함께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모형 (4)를 중심으로 설명하며, 본 연구의 모든 분석에서는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하였다.

〈표 5-6〉 원직장 복귀에 따른 생활 만족도

	(1)	(2)	(3)	(4)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419*** (0.097)	0.251** (0.098)	0.250*** (0.070)	0.144** (0.073)
한 달 평균 임금				0.193** (0.084)
종사상 지위(상용직 1)				0.567*** (0.076)
장애 여부(장애 1)	0.056 (0.210)	0.137 (0.205)	0.036 (0.145)	0.062 (0.144)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025 (0.788)	0.175 (1.158)	0.602 (0.966)	0.088 (0.819)
8~9급	-0.127 (0.794)	0.072 (1.162)	0.542 (0.966)	-0.015 (0.820)
10~12급	-0.031 (0.800)	0.270 (1.167)	0.639 (0.967)	0.058 (0.821)
13~14급	-0.036 (0.801)	0.309 (1.168)	0.692 (0.967)	0.075 (0.822)
무장애	0.006 (0.804)	0.331 (1.170)	0.706 (0.970)	0.096 (0.825)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963* (0.526)	0.878* (0.488)	0.887** (0.351)	0.808** (0.348)
좋음	1.876*** (0.523)	1.734*** (0.490)	1.754*** (0.351)	1.629*** (0.349)
매우 좋음	3.130*** (0.572)	2.939*** (0.551)	3.232*** (0.401)	3.124*** (0.398)

〈표 5-6〉의 계속

	(1)	(2)	(3)	(4)
연령 더미(Ref. 30대)		0.349*** (0.050)	0.246*** (0.039)	0.175*** (0.038)
40대		0.434*** (0.094)	0.461*** (0.067)	0.436*** (0.067)
50대				
60대 이상		-0.410*** (0.158)	-0.349*** (0.107)	-0.387*** (0.107)
성별(남성 1)		-0.554*** (0.148)	-0.467*** (0.107)	-0.486*** (0.107)
학력(Ref. 중학교 이하)		-0.255 (0.164)	-0.253** (0.123)	-0.145 (0.124)
고등학교		-0.341*** (0.123)	-0.284*** (0.103)	-0.449*** (0.105)
대학 재학 이상				
결혼 여부(유배우 1)		0.279** (0.118)	0.182** (0.084)	0.124 (0.085)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		0.412*** (0.157)	0.309*** (0.112)	0.228** (0.113)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548*** (0.104)	0.594*** (0.075)	0.545*** (0.075)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026 (0.091)	-0.003 (0.102)
생산자 서비스업			-0.022 (0.109)	0.011 (0.110)
유통 서비스업			-0.185* (0.110)	-0.117 (0.110)
개인 서비스업			-0.173 (0.138)	-0.104 (0.137)
사회 서비스업			0.151 (0.135)	0.420*** (0.142)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088 (0.179)	0.144 (0.179)
서비스·판매직			-0.119 (0.165)	-0.007 (0.167)

〈표 5-6〉의 계속

	(1)	(2)	(3)	(4)
농림어업숙련직			-0.072 (0.322)	0.080 (0.326)
기능·조작·조립직			-0.132 (0.134)	-0.045 (0.135)
단순노무직			-0.376***	-0.160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0.140)	(0.143)
5~9인			0.188** (0.094)	0.097 (0.095)
10~29인			0.067 (0.091)	-0.047 (0.091)
30~99인			0.111 (0.103)	-0.018 (0.106)
100~299인			0.338** (0.135)	0.220 (0.135)
300인 이상			0.398*** (0.135)	0.246* (0.135)
연도 및 지역 터미 표본 수	Yes 7,222			

주: 1) *** $p < 0.01$, ** $p < 0.05$, * $p < 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분석 결과는 원직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시장 복귀 여부 분석과 마찬가지로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 임금과 종사상 지위를 추가로 통제할수록 추정치의 크기가 선형적으로 감소하긴 하지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이 아닌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생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들의 효과는 앞선 결과와 유사하였고,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 중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재직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 재직하는 산재근로자들 그룹에서 생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 5-7〉은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그룹도 생활 만족도가 낮았고, 상용직에서 임시·일용직으로 고용 안정성이 하락한 그룹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그룹 간에 추정치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었다. 분석 결과로 추정컨대, 산재 전후 고용 안정성의 상대적 변화보다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고용 안정성 자체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들의 추정치의 크기, 방향, 통계적 유의성은 앞선 분석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7〉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생활 만족도

	(1)	(2)	(3)	(4)
종사상 지위 변화 (Ref. 상용직 유지)				
상용직 → 임시·일용직	-0.659*** (0.172)	-0.498*** (0.171)	-0.429*** (0.111)	-0.198* (0.117)
임시·일용직 → 상용직	-0.306* (0.170)	-0.175 (0.177)	-0.119 (0.131)	-0.034 (0.134)
임시·일용직 유지	-0.594*** (0.104)	-0.340*** (0.108)	-0.344*** (0.094)	-0.200** (0.098)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140* (0.075)
한 달 평균 임금				0.567*** (0.076)
장애 여부(장애 1)	0.051 (0.218)	0.124 (0.211)	0.033 (0.144)	0.061 (0.144)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116 (0.835)	0.222 (1.157)	0.611 (0.960)	0.091 (0.819)

〈표 5-7〉의 계속

	(1)	(2)	(3)	(4)
8~9급	0.112 (0.841)	0.165 (1.160)	0.560 (0.960)	-0.014 (0.820)
10~12급	0.151 (0.848)	0.323 (1.166)	0.645 (0.961)	0.059 (0.821)
13~14급	0.134 (0.849)	0.354 (1.167)	0.693 (0.961)	0.077 (0.823)
무장해	0.191 (0.852)	0.395 (1.170)	0.722 (0.963)	0.099 (0.825)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968* (0.508)	0.870* (0.482)	0.861** (0.353)	0.808** (0.349)
좋음	1.859*** (0.505)	1.720*** (0.484)	1.721*** (0.353)	1.629*** (0.349)
매우 좋음	3.027*** (0.557)	2.899*** (0.545)	3.193*** (0.402)	3.123*** (0.399)
연령 더미(Ref. 30대)				
40대		-0.377** (0.157)	-0.325*** (0.107)	-0.387*** (0.107)
50대		-0.487*** (0.149)	-0.435*** (0.107)	-0.485*** (0.107)
60대 이상		-0.172 (0.168)	-0.196 (0.123)	-0.145 (0.124)
성별(남성 1)		-0.321*** (0.124)	-0.293*** (0.103)	-0.449*** (0.105)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53** (0.118)	0.169** (0.084)	0.124 (0.085)
대학 재학 이상		0.355** (0.158)	0.269** (0.113)	0.227** (0.113)
결혼 여부(유배우 1)		0.538*** (0.104)	0.596*** (0.075)	0.545*** (0.075)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		0.343*** (0.051)	0.247*** (0.039)	0.176*** (0.038)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421*** (0.095)	0.446*** (0.067)	0.436*** (0.068)
산업 분류(Ref. 제조업)				

〈표 5-7〉의 계속

	(1)	(2)	(3)	(4)
건설업			0.090 (0.104)	-0.001 (0.105)
생산자 서비스업			-0.030 (0.109)	0.012 (0.110)
유통 서비스업			-0.165 (0.111)	-0.116 (0.110)
개인 서비스업			-0.157 (0.139)	-0.104 (0.137)
사회 서비스업			0.192 (0.138)	0.422*** (0.142)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100 (0.177)	0.144 (0.179)
서비스·판매직			-0.105 (0.165)	-0.007 (0.167)
농림어업숙련직			0.047 (0.333)	0.080 (0.326)
기능·조작·조립직			-0.089 (0.133)	-0.044 (0.135)
단순노무직			-0.315** (0.140)	-0.159 (0.143)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5~9인			0.158* (0.095)	0.096 (0.095)
10~29인			0.025 (0.091)	-0.047 (0.092)
30~99인			0.083 (0.104)	-0.018 (0.106)
100~299인			0.321** (0.137)	0.220 (0.135)
300인 이상			0.403*** (0.133)	0.245* (0.135)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7,222			

주 : 1) *** $p < 0.01$, ** $p < 0.05$, * $p < 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2. 일자리 만족도 분석

〈표 5-8〉에는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종사상 지위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회귀식 (5-1)을 통해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표 5-8〉 종사상 지위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1)	(2)	(3)
종사상 지위(Ref. 상용직)			
임시·일용직	-0.804*** (0.093)	-0.698*** (0.094)	-0.598*** (0.096)
자영업자	-0.250 (0.216)	-0.208 (0.202)	-0.089 (0.203)
무급가족종사자	-2.146*** (0.355)	-1.446*** (0.457)	-1.280** (0.510)
장애 여부(장애 1)		0.105 (0.150)	0.143 (0.151)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699 (0.620)	-0.620 (0.709)
8~9급		-0.904 (0.622)	-0.841 (0.710)
10~12급		-0.813 (0.622)	-0.711 (0.711)
13~14급		-0.890 (0.622)	-0.770 (0.712)
무장애		-0.738 (0.623)	-0.635 (0.713)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908 (0.583)	0.845 (0.598)
중음		1.775*** (0.593)	1.696*** (0.608)
매우 좋음		2.624*** (0.625)	2.577*** (0.640)

〈표 5-8〉의 계속

	(1)	(2)	(3)
연령 더미(Ref. 30대)			
40대			-0.119 (0.154)
50대			-0.099 (0.150)
60대 이상			-0.007 (0.171)
성별(남성 1)			-0.285** (0.122)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01* (0.114)
대학 재학 이상			0.179 (0.152)
결혼 여부(유배우 1)			0.194* (0.103)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			0.134*** (0.040)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175* (0.096)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7,708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생활 만족도 분석의 결과와 동일하게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았고, 임시·일용직 순이었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할수록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일자리 만족도는 상용직일 때 가장 높았다.

그 밖에 건강 요인 중 주관적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일자리 만족도가 높았으나, 생활 만족도의 결과와는 달리 장애 등급은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일자리 만족도가 낮았고, 결혼 여부와 가구소득, 주거지 형태 등의 경제적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일자리 만족도와 정(+)의 관계가 확인된다. 그러나 통제변수 중 연령, 학력 수준 등은 생활 만족도 분석과 추정치의 방향은 동일했으나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지는 않았다.

〈표 5-9〉에는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는 원직장 복귀 여부와 일자리 만족도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모형 (1) - 모형 (3)) 원직장 복귀는 일자리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였으나, 현재 재직 중인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도 사라졌다. 즉, 원직장 복귀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매개로 한 결과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 밖에 주관적 건강 상태는 일자리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었고, 재직 중인 사업체의 산업, 직종, 규모도 일자리 만족도를 결정하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산재근로자들의 일자리 만족도가 더 높았고, 관리·전문직인 경우 타 직종에 비해 더 높았으며, 사업체 규모와 일자리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상관관계가 확인된다.

〈표 5-10〉은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분석 결과는 생활 만족도 분석과 동일하였다.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그룹의 일자리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추정치의 크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분석 결과로 추정컨대, 산재 전후 고용 안정성의 상대적 변화보다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고용 안정성 자체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와 일자리 만족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통제변수들은 추정치의 크기, 방향,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앞선 결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표 5-9〉 원직장 복귀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1)	(2)	(3)	(4)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441*** (0.098)	0.350*** (0.102)	0.297*** (0.071)	0.115 (0.074)
종사상 지위(상용직 1)				0.520*** (0.083)
한 달 평균 임금				0.614*** (0.074)
장애 여부(장애 1)	0.106 (0.141)	0.162 (0.143)	0.078 (0.132)	0.109 (0.133)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775 (0.616)	-0.658 (0.736)	0.036 (0.607)	-0.627 (0.488)
8~9급	-1.107* (0.618)	-0.989 (0.738)	-0.132 (0.606)	-0.812* (0.486)
10~12급	-0.935 (0.614)	-0.777 (0.736)	-0.036 (0.609)	-0.758 (0.489)
13~14급	-1.033* (0.614)	-0.863 (0.736)	-0.135 (0.609)	-0.893* (0.489)
무장애	-0.899 (0.616)	-0.756 (0.738)	-0.061 (0.611)	-0.809 (0.493)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487 (0.524)	0.459 (0.521)	0.470 (0.319)	0.392 (0.332)
중음	1.351** (0.530)	1.293** (0.531)	1.290*** (0.320)	1.152*** (0.333)
매우 좋음	2.329*** (0.569)	2.279*** (0.576)	2.373*** (0.364)	2.225*** (0.375)
연령 더미(Ref. 30대)				
40대		-0.055 (0.166)	-0.014 (0.107)	-0.049 (0.106)
50대		-0.121	-0.030	-0.033
60대 이상		0.035 (0.180)	0.079 (0.120)	0.230* (0.121)

〈표 5-9〉의 계속

	(1)	(2)	(3)	(4)
성별(남성 1)		-0.333*** (0.123)	-0.148 (0.101)	-0.338*** (0.104)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87** (0.117)	0.074 (0.081)	-0.004 (0.082)
대학 재학 이상		0.321** (0.160)	0.035 (0.108)	-0.098 (0.108)
결혼 여부(유배우 1)		0.163 (0.107)	0.159** (0.074)	0.098 (0.074)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		0.138*** (0.044)	0.113*** (0.032)	0.035 (0.032)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227** (0.101)	0.158** (0.068)	0.110 (0.068)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091 (0.091)	0.092 (0.100)
생산자 서비스업			0.122 (0.111)	0.182* (0.109)
유통 서비스업			-0.024 (0.112)	0.077 (0.112)
개인 서비스업			0.234* (0.139)	0.344** (0.138)
사회 서비스업			0.548*** (0.137)	0.915*** (0.147)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063 (0.179)	0.155 (0.179)
서비스·판매직			-0.444*** (0.170)	-0.293* (0.170)
농림어업숙련직			-0.632* (0.325)	-0.357 (0.316)
기능·조작·조립직			-0.485*** (0.130)	-0.343*** (0.128)
단순노무직			-0.782*** (0.140)	-0.482*** (0.140)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표 5-9〉의 계속

	(1)	(2)	(3)	(4)
5~9인			0.298*** (0.095)	0.166* (0.095)
10~29인			0.333*** (0.094)	0.158* (0.096)
30~99인			0.258** (0.108)	0.076 (0.111)
100~299인			0.469*** (0.139)	0.291** (0.140)
300인 이상			0.789*** (0.133)	0.602*** (0.133)
연도 및 지역 더미 표본 수	Yes 7,222			

주 :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표 5-10〉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른 일자리 만족도

	(1)	(2)	(3)	(4)
종사상 지위 변화 (Ref. 상용직 유지)				
상용직 → 임시·일용직	-0.892*** (0.175)	-0.852*** (0.178)	-0.765*** (0.114)	-0.528*** (0.121)
임시·일용직 → 상용직	-0.084 (0.187)	-0.035 (0.191)	0.027 (0.128)	0.110 (0.131)
임시·일용직 유지	-0.680*** (0.105)	-0.573*** (0.107)	-0.623*** (0.091)	-0.487*** (0.096)
원직장 복귀 여부(복귀 1)				0.127* (0.076)
한 달 평균 임금				0.613*** (0.075)
장애 여부(장애 1)	0.111 (0.152)	0.150 (0.153)	0.081 (0.133)	0.111 (0.132)
장애 등급(Ref. 1~3급)				
4~7급	-0.712 (0.631)	-0.657 (0.715)	-0.066 (0.586)	-0.641 (0.490)
8~9급	-0.912 (0.635)	-0.892 (0.718)	-0.200 (0.585)	-0.822* (0.488)

〈표 5-10〉의 계속

	(1)	(2)	(3)	(4)
10~12급	-0.815 (0.633)	-0.753 (0.717)	-0.133 (0.587)	-0.770 (0.491)
13~14급	-0.921 (0.633)	-0.845 (0.718)	-0.236 (0.587)	-0.905* (0.491)
무장해	-0.778 (0.635)	-0.717 (0.720)	-0.152 (0.590)	-0.823* (0.495)
주관적 건강(Ref. 매우 좋지 않음)				
좋지 않은 편	0.510 (0.495)	0.474 (0.501)	0.421 (0.328)	0.397 (0.333)
좋음	1.334*** (0.500)	1.288** (0.509)	1.224*** (0.330)	1.155*** (0.334)
매우 좋음	2.203*** (0.542)	2.223*** (0.555)	2.292*** (0.371)	2.228*** (0.375)
연령 더미(Ref. 30대)				
40대		-0.013 (0.164)	0.006 (0.106)	-0.050 (0.106)
50대		-0.021 (0.158)	0.005 (0.105)	-0.034 (0.106)
60대 이상		0.165 (0.179)	0.159 (0.119)	0.227* (0.121)
성별(남성 1)		-0.300** (0.125)	-0.162 (0.100)	-0.337*** (0.104)
학력(Ref. 중학교 이하)				
고등학교		0.235** (0.119)	0.050 (0.082)	-0.001 (0.082)
대학 재학 이상		0.219 (0.161)	-0.044 (0.109)	-0.091 (0.108)
결혼 여부(유배우 1)		0.148 (0.106)	0.155** (0.074)	0.098 (0.074)
균등화 연간 가구소득		0.125*** (0.044)	0.108*** (0.032)	0.035 (0.032)
주거지 소유 형태(자가 1)		0.200** (0.101)	0.130* (0.068)	0.113* (0.068)
산업 분류(Ref. 제조업)				
건설업			0.175* (0.101)	0.080 (0.102)

〈표 5-10〉의 계속

	(1)	(2)	(3)	(4)
생산자 서비스업			0.134 (0.109)	0.179 (0.109)
유통 서비스업			0.017 (0.112)	0.074 (0.112)
개인 서비스업			0.287** (0.139)	0.342** (0.138)
사회 서비스업			0.662*** (0.140)	0.908*** (0.147)
직종(Ref. 관리·전문직)				
사무직			0.104 (0.177)	0.155 (0.179)
서비스·판매직			-0.395** (0.169)	-0.294* (0.170)
농림어업숙련직			-0.405 (0.316)	-0.360 (0.317)
기능·조작·조립직			-0.398*** (0.128)	-0.348*** (0.128)
단순노무직			-0.654*** (0.138)	-0.486*** (0.140)
사업체 규모(Ref. 5인 미만)				
5~9인			0.236** (0.095)	0.168* (0.095)
10~29인			0.241** (0.096)	0.161* (0.096)
30~99인			0.186* (0.109)	0.077 (0.111)
100~299인			0.405*** (0.142)	0.291** (0.140)
300인 이상			0.769*** (0.132)	0.604*** (0.133)
연도 및 지역 터미 표본 수	Yes 7,222			

주: 1) *** p<0.01, ** p<0.05, * p<0.1.

2) 괄호 안은 군집강건 표준오차(clustered robust standard error).

3) 연도 및 지역 고정효과를 통제한 결과임.

자료: 산재보험패널조사 2차 코호트(2018~2021년).

제4절 소 결

이 연구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 제2차 코호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노동시장 복귀, 원직장 복귀,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등 노동시장 이행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가 있었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할수록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산재 전후 ‘고용 안정성의 상대적 변화’보다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고용 안정성 자체’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생활 만족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일자

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도 생활 만족도 분석과 동일하였다.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그룹의 일자리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추정치의 크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 원직장 복귀는 일자리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였으나,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추정치의 크기가 감소했을 뿐만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원직장 복귀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매개로 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건강 요인, 산재 이전, 혹은 현재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재근로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노동시장 이행의 영향은 노동시장 복귀뿐만이 아니라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매개로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산재보험의 정책 방향이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로 전환되면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직업 복귀율이 65.4%이고, 2021년에는 67.3%로 소폭 오르긴 했으나 고용의 질을 차치하고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더라도 최근까지의 성과가 그리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더욱이 원직 복귀는 요양 종결 직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재취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탐색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득 공백이 더 길게 발생할 수 있다(이승렬·이승욱, 2016; 박은주, 2018). 이를 근거로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위해 원직장 복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 지원금

등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산재 이후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장애 정도가 경증이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산재 이전 재직 사업장이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재직했던 임시·일용 근로자, 고령 근로자, 중증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와 유사하게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높으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결국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일상으로의 회복은 원직 복귀 자체가 아닌 고용의 질, 즉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원직 복귀율, 직업 복귀율 등의 양적 측면의 정책 목표와 더불어 산재 이전 수준의 임금 회복 및 고용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제 6 장

결 론

제1절 요약

1964년 산재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지속적인 정책적 시도로 인해 재해율은 괄목할 정도로 감소하였으나 재해자 수는 2021년 기준 12만 명가량으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산업재해가 발생시키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더불어 기업의 자발적 산재 예방 투자 여건이 조성되기 어려운 환경임을 고려하여 지금까지 산재 예방은 주로 국가의 역할로만 여겨져 왔다. 그러나 산재 예방의 주체가 이제 기업으로까지 확대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안전보건과 관련한 법과 정책의 기조가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을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체계 구축·확립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산재 예방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김명중·박선영, 2023).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체에 대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근로자 측면에서 볼 때,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신

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며, 일자리 상실로 인한 경제적 제약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 등 근로자 삶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유발한다. 산재근로자는 예기치 못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소득의 상실·감소, 신체 기능의 저하·훼손, 사회적 관계의 위축 등으로 고통을 받으며, 이들의 직업 복귀는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재해 이전에 누렸던 삶과 사회적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된다.

지난 수십 년간 산업재해율은 눈에 띄게 감소하였지만 재해자 수는 줄지 않고 있고, 산재근로자들의 사회적 복귀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하고 정책적 주안점이 이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연구는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는 미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의 결정 요인에 대해 재직 근로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근로자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의 경제활동 상태, 원직장 복귀 등 노동시장 이행과 그 궤적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등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이며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파악하고 고용규모별·산업별·근속기간별 산업재해 현황과 추이를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WPS)」를 활용하여 사업체 측면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에 대해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1년과 비교할 때 2021년 요양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사망만인율은 절반 이하로 하락하였다. 그러나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둘째, 산업재해의 주요 발생형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2021년에는 ‘넘어짐’ 사고가 가장 빈번하였고 ‘업무상 질병’이 그다음이었다. 반면 2001년에는 ‘끼임’ 사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21년에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업무상 질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셋째,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대체로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은 감소하며, 20여 년간의 추이를 보았을 때에도 고용규모별 패턴은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근으로 올수록 소규모 사업장의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을 하락 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고용규모 간 요양재해율과 사고만인율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

넷째, 2001년 요양재해율은 광업, 어업, 농업 순이었고, 2021년도는 광업, 어업, 건설업 순이었다. 2001년도 산업별 사망만인율은 광업, 어업, 농업 순으로 1차 산업에 집중되어 있었고, 2021년 사망만인율은 광업, 어업, 건설업 순으로 산업별 요양재해율 패턴과 다르지 않았다.

다섯째,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발생은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4~5년차까지는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감소하다가 5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들 그룹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중이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와 6개월~1년 경력의 근로자들 간 산업재해 발생 비중은 대략 4~5배 정도의 큰 격차를 보인다. 근속기간별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비중 역시 6개월 미만으로 근속한 근로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속기간별 패턴도 유사했다. 단, 사망사고의 경우 근속기간 10년 이상일 때 발생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체 단위에서 산업재해 발생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의 인적 특성 변수 중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확인되며, 고용규모별로 봤을 때에는 고용규모가 커질수록 산재근로자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규모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직종별로 봤을 때에는 관리·전문직과 비교하여 다른 직종의 종사자 비율이 높을 때 산재근로자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생산·단순직 비중은 산재근로자 비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 비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남성근로자 비율은 사업장 내 위험 요소와 직종 통제 여부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달라졌다. 통상적으로 산재근로자는 남성 비중이 높은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로 보건대 이는 남성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생산·단순직에 더 많이 종사하는데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제조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전 산업을 대상으로 한 분석과 동일하게 사업장 내 위험 요소의 존재가 산재근로자의 비율을 높이는 가장 주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 구성의 특성으로는 55세 이상 근로자 비율이 높을수록 산재근로자의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전 분석과 달리 외국인 고용이 높은 제조업으로 한정된 분석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외국인 근로자 비율과 산재근로자 비율 간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최근 20년간의 산업재해 발생의 전반적인 추이를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계 거시자료가 아닌 마이크로 자료를 사용하여 사업체 특성과 이질성을 고려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사업장 내 근로자의 인적 특성과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제3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산재요양이 종결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노동시장 복귀 및 원직장 복귀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결정 요인을 확인하며, 원직장 복귀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및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산재근로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남성 비중이 매우 높고, 학력 수준별로는 고등학교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컸으며, 대학 이상 학력 그룹의 비중이 가장 낮았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 이상 순으로 상대적으로 고령층의 비중이 높았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 추이를 보면, 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원직장 복귀자 비율과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감소하고 재취업자 비율은 증가한다. 연령별로 봤을 때, 원직장 복귀자들의 비율은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60대에서 가장 낮았으며, 재취업자 비중은 50대에서 가장 높았다. 학력별로 봤을 때,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재취업 등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높고,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낮았다. 장애 등급 유무별로 봤을 때, 장애 등급이 있는 산재근

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비율과 재취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았다. 종사상 지위별로 봤을 때, 재해 당시 임시·일용직이었던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매우 낮았고 이들 중 대부분은 재취업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다. 반면 상용직 산재근로자들은 원직장 복귀 비율이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비해 크게 높았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낮았다.

셋째,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확률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유배우일수록 높았다. 무엇보다도 장해 등급, 주관적 건강 등의 건강 상태는 노동시장 복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되며, 60대 이상 고령의 산재근로자들은 노동시장에 복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뿐만 아니라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노동시장 복귀 확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넷째, 산재근로자들의 원직장 복귀 확률은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동일하게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주 경제활동 연령층인 40대에서, 재해 당시 임금 수준이 높고 임시·일용직보다는 상용직일 때 높았다. 단, 앞선 결과와 다르게 유배우일 때, 그리고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확률이 높았으나 재해 사업장의 특성과 직업 특성을 고려했을 때 이들 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졌다. 노동시장 복귀의 결정 요인 분석과 달리 원직장 복귀에 재해 당시 사업체의 규모는 주요 결정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직장 복귀 여부에 따라 임금과 종사상 지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분석한 결과,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은 약 5.7%, 6.8%가량 더 높았고, 이들이 상용직일 확률은 11%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에 비해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는 산업재해 이전 일자리 특성, 산재근로자들의 종사상 지위 및 업종별 이질성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별 결정 요인을 확인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의 안정성 측면에서 원직장 복귀자와 재취업자 간 격차를 확인하여 원직장 복귀가 어떠한 측면에서 산재근로자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제4장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산재근로자의 요양 종결 이후 4년간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을 유형화하여, 산재근로자 개인 및 일자리, 그리고 재해 특성이 유형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건배열과 군집분석 결과, 전체 산재 요양 종결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 “원직장 복귀유지형”,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 “지속적 비경제활동”, “타직 재취업 또는 실업 이후 비경제활동” 유형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30대와 비교하여 60대 이상 산재 종결자는 원직장에 복귀하여 이를 유지하는 일자리 경로를 가지기보다 타직,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경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년 산재 종결자는 타직으로 복귀보다 원직으로의 복귀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재활서비스와 사회재활서비스를 받을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산재 유형이 업무상 질병일수록, 산재요양 기간이 길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지속적으로 비경제활동 상태, 타직으로 재취업 경로 궤적을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자신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산재를 당한 직장에서의 근속기간이 길수록, 산재 당시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일수록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재해 당시 일자리가 생애 첫 일자리가 아니었을 경우 타임금근로로 재취업 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증가했지만, 원직 외 다양한 취업복귀형이 될 가능성은 감소하였다. 재해 당시 경험한 일자리 수가 많은 경우 지속적 비경제활동 상태가 되기보다 원직장 복귀유지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원직장으로 복귀하여 유지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타직장으로 재취업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산재근로자가 산재 이전에 취득한 노동시장 경력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서 일자리

를 유지할 가능성은 커지며, 원직장을 유지하기보다는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큰 것을 보여준다.

둘째, 산재 종결 4년간 한 번이라도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은 “원직복귀 유지형”, “원직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 “원직복귀 후 비경제활동화”로 나타났다.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연령이 증가할수록, 결혼하였을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비경제활동화가 되기보다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직업재활서비스 이용은 원직장 복귀자의 일자리 이동에 긍정적 영향을 준 반면에 사회재활서비스는 기존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업무상 사고에 비해 업무상 질병인 경우 원직장 복귀유지형이 되기보다 원직복귀 후 타직 재취업형이 될 가능성이 감소하였다. 산재 요양 기간이 길수록, 장애 등급이 없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이를 유지하기보다 비경제활동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종결 직후 산재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원직장 복귀 후 타직으로 재취업하기보다 원직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종료 후 원직장에 복귀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어질수록 비경제활동화 또는 타직으로 재취업하는 경로를 가질 가능성이 높았다. 복귀한 원직이 상용직 일수록, 임금이 높을수록, 직장의 규모가 클수록, 복귀한 원래 직장의 일자리 만족도가 높을수록 타직장으로 재취업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

셋째, 산재 종결 후 4년간 한 번이라도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한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 궤적 유형은 “요양 직후 타직복귀 유지형”, “단기간 비취업 후 타직복귀 유지형”, “장기간 비취업 후 타직복귀형”, “타직복귀 후 비경제활동형”으로 나타났다.

다항로짓 회귀분석 결과, 남성일수록,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경험 없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 60대 이상 재취업 산재근로자는 요양 직후 타직복귀 유지형이 되기보다 장기간 비취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타직으로 재취업한 후 비경제활동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결혼을 한 경우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기간 없이 다른 임금근로 일자리로 재취업에 성공하여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교육 수준은 산재 요양 종결 이후 타직으로 재취

업 전 장기간의 비경제활동 가능성을 줄였다. 산재 요양 기간 동안 직업재활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를 이용할수록 요양 직후 재취업을 하기보다 비경제활동 또는 실업 기간을 가질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요양 기간이 길수록 요양 직후 타직복귀 유지형이 될 가능성이 줄었다. 장애 등급이 있는 타직복귀자의 경우 요양 직후 타직복귀보다 단기간의 비취업 기간을 겪을 가능성이 크며, 타직복귀 후에 비경제활동 상태로 전환되기보다 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요양 종결 후 업무수행 능력이 좋을수록 비취업 기간을 경험할 가능성이 낮았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종사상 지위가 안정적인수록 재취업 이후 비경제활동화의 가능성이 낮았다. 재취업한 일자리의 임금이 높을수록, 회사의 규모가 클수록 일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컸다.

이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직업 복귀 경로와 고용유지 형태가 기존 연구에서 밝힌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산재 당시 일자리 특성 및 재해 특성뿐만 아니라 산재 이전 근로자 개인이 축적해 온 노동시장 경력, 그리고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여건에 따라 이질적임을 밝혔고, 특히 산재 종결 이후 원직에 복귀하여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타직으로 재취업, 비임금근로, 실업 또는 비경제활동 상태 등 노동시장 이행이 활발하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제5장에서는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이행과 생활 만족도 및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노동시장 복귀, 원직장 복귀, 종사상 지위 및 종사상 지위 변화 등 노동시장 이행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만족도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 장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시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의 관계가 있었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변수를 추가로 통제할수록 추정치의 크기가 작아지긴 하지만, 미취업 상태에 있는 산재근로자에 비해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더 높았다. 노동시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 여부와 생활 만족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원직장이 아닌 다른 사업체에 재취업한 산재근로자들과 비교할 때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준다.

둘째, 산재근로자들이 종사상 지위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또한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는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가 낮았는데, 이는 산재 전후 '고용 안정성의 상대적 변화'보다는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고용 안정성 자체'가 산재근로자들의 생활 만족도에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종사상 지위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한 결과는 생활 만족도 분석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종사상 지위가 상용직일 때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무급가족종사자 그룹에서 일자리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산재 전후 종사상 지위 변화에 따라 일자리 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한 결과도 생활 만족도 분석과 동일하였다. 산재 전후 상용직을 유지한 근로자들에 비해 상용직에서 임시직으로 종사상 지위가 변화한 근로자들과 임시·일용직을 유지한 그룹의 일자리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추정치의 크기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넷째, 산재 이후 노동시장에 복귀한 임금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원직장 복귀와 일자리 만족도 간의 관계를 추정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요인, 인구·사회·경제적 요인, 현재 재직 중인 직업 및 사업장 특성 변수만을 고려했을 때 원직장 복귀는 일자리 만족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였으나, 현재 재직 중인 사업체에서의 종사상 지위와 임금을 추가로 통제하였을 때 추정치의 크기가 감소했을 뿐만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이 사라졌다. 이는 원직장 복귀가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 수준을 매개로 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건강 요인, 산재 이전, 혹은 현재의 직업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노동시장 이행과 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엄밀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재근로자들의 만족도에 미치는 노동시장 이행의 영향은 노동시장 복귀뿐만이 아니라 산재 이후 복귀한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매개로 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소득 손실과 비용 발생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재해로 인해서 직업능력의 손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항구적인 보상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직업 복귀를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강다솔 외, 2021).

과거에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현금 보상에 정책적 초점이 맞추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로 정책의 방향이 변화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정책 방향이 전환되면서 이들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직업 복귀율이 65.4%이고, 2021년에는 67.3%로 소폭 오르긴 했으나 고용의 질을 차치하고 단순한 수치로 평가하더라도 최근까지의 성과가 그리 성공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독일,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산재보험 선진국은 산재근로자의 ‘원직복귀 의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원직복귀 의무제도’와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재보험도 원직 복귀를 지향한다. 1999년 12월 31일 개정 「산재보험법」 제1조(목적)에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를 명시했다. 2021년 5월 18일 개정 「산재보험법」 제75조의 2(직장 복귀 지원)를 신설하고 재해 당시 사업주에게 직장복귀 계획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시행령」 제71조의 2(직장복귀 지원)에 직업능력 평가 및 작업 환경 개선 여부 등을 규정하였다. 그 밖에 원직장에 복귀한 장애급여자를 고용하거나 직장적응훈련,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 지원도 법제화했다(김민호, 2023. 12. 12).

더욱이 원직 복귀는 요양 종결 직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재해로 인한 소득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반면에 재취

업의 경우에는 일자리 탐색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구직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소득 공백이 더 길게 발생할 수 있다(이승렬·이승욱, 2016; 박은주, 2018). 이를 근거로 정부는 성공적인 노동시장으로의 복귀를 위해 원직장 복귀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대체인력 지원금, 직장복귀 지원금 등 산재 발생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뿐만 아니라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밝혔듯이 산재 이후 원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고 장애 정도가 경증이거나 건강 상태가 양호하며, 산재 이전 재직 사업장이 비교적 근로조건이 좋은 대규모 사업장일 가능성이 크고, 소규모·영세 사업장에 재직했던 임시·일용 근로자, 고령 근로자, 중증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의 원직 복귀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취약 계층을 고려한 정책적 고려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령, 건강 상태, 산재 당시 사업장 특성에 따라 산재근로자들의 노동시장 복귀 결과가 상이함을 감안할 때, 개인의 상태와 필요를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요구된다. 아울러 ‘장애인 신규 고용장려금’ 지원과 유사하게 현행 규정을 수정하여 산업재해 사업장 여부에 관계없이 산재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를 설계하는 방안을 제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산재근로자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이행을 위해서는 ‘원직장 복귀’가 정책 목표가 아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중 일부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욱이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소규모·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이들의 짧은 사업체 업력을 고려할 때,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노동시장 복귀를 위한 정책 방향은 원직 복귀가 아닌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함의한다.

‘오로지 원직장 복귀라는 목표에만 얽매이거나 고용률 제고라는 양적 목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직장 복귀 경로가 산재근로자에게 사회로 되돌아가는 적절한 방식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음(이승렬·이승욱, 2016)’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다.

더욱이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근로자들은 임금 수준과 직업 안정성이 높으며, 이러한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산재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

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결국 산재근로자들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와 일상으로의 회복은 원직 복귀 자체가 아닌 고용의 질, 즉 ‘괜찮은 일자리’로의 복귀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원직 복귀율, 직업 복귀율 등의 양적 측면의 정책 목표와 더불어 산재 이전 수준의 임금 회복 및 고용 안정성 등 질적 측면을 반영한 정책 목표를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다.

아울러 산재근로자의 성공적인 직업 복귀가 특정 시점의 지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직업 복귀의 성공 기준을 산재 종결 이후 특정 시점에 국한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취업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산재 사고 이후 ‘사후적인’ 산재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산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 사업체에 대한 식별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요인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사업장 내 환경, 근로자의 인적 구성, 고용규모, 주요 직종 구성,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의 사회·환경 변화와 정책 변화가 산업재해 발생에 미칠 중장기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산업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김명중·박선영, 2023).

참고문헌

- 강다솔 · 황성환 · 정창률(2021),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불안정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8(3), pp.131~151.
- 강동욱(2017), 「산업재해 근로자의 직장복귀 영향요인 연구 -시간의존 Cox 회귀모형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19(3), pp.447~466.
- 고용노동부(2021), 『산업재해 현황 분석』.
- 김동구 · 박선영(2021), 「한국의 분기별 산업재해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 변동요인 분석」, 『전문경영인연구』 24(1), pp.269~287.
- 김명중 · 박선영(2023), 「기업 특성이 산업재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교」, 『산업연구』 47(2), pp.139~169.
- 김민호, 「‘취업’이 아니라 ‘원직복귀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휴업급여 바꾸자」, 『매일노동뉴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640> 접속일: 2023. 12. 12).
- 김자영(2022),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원직장복귀자와 재취업자의 비교를 중심으로」, 『직업재활연구』 32(2), pp.23~43.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http://insurancesupport.or.kr/story/sub1-4-1.php> 접속일: 2023. 10. 30).
- 박수경(2012),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과정과 관련 요인」, 『재활복지』 16(3), pp.293~318.
- 박수경 · 이충권 · 이성민(2017), 「산재근로자의 인구사회학적, 재해 관련, 근무환경 특성이 직업복귀 유형에 미치는 영향」, 『Crisisonomy』 13(9), pp.1~17.
- 박은주(2018), 「산재근로자의 요양종결 후 재취업 소요기간 및 영향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34(3), pp.31~58.

- 배화숙(2017), 「산업재해근로자 노동시장 이행의 성격과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9(3), pp.193~212.
- 신봉호 · 조명우(2016), 「산업재해율의 결정요인: 근로시간을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9(2), pp.23~45.
- 이상진(2018), 「원직장 복귀 산재근로자의 원직장 이탈 결정요인 분석 연구」, 『직업재활연구』 28(2), pp.63~88.
- 이승렬 · 이승욱(2016),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이은혜 · 이현실 · 양지안(2017), 「산재근로자의 직장복귀형태에 따른 일상 생활 및 직무만족도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7(2), pp.107~131.
- 이정화(2017), 「‘괜찮은 직업복귀(Decent Return-To-Work)’ : 개인, 분절된 노동시장, 제도 차원의 접근」, 『보건사회연구』 37(2), pp.389~422.
- 이준상(2019),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3(4), pp.91~113.
- 한기명 · 이민아(2017), 「산재근로자의 직업복귀 이후 고용유지 영향 요인: 재발사건생존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8(4), pp.221~249.
- Heinrich, H. W., D. Petersen, and N. Roos(1980),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 Safety Management Approach*, New York: McGraw Hill.

◆ 執筆陣

- 홍정림(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 김영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삶에 관한 연구

▪ 발행연월일	2023년 12월 26일 인쇄 2023년 12월 29일 발행
▪ 발 행 인	허 재 준
▪ 발 행 처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조 판 · 인쇄	세창문화사 (031) 917-2114
▪ 등 록 일 자	1988년 9월 13일
▪ 등 록 번 호	제2015-000013호

© 한국노동연구원 2023 정가 8,000원

ISBN 979-11-260-0701-1



한국노동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경제정책동
TEL : 044-287-6083 <http://www.kli.re.kr>



93330

9 791126 007011

ISBN 979-11-260-0701-1